



##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금년 2021년은 포스트코로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1월 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빈곤국가와 취약계층에 그 영향은 더욱 날카로워,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를 지향하는 SDGs 달성에 도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분야에 걸쳐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정책목표입니다. 2015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 야심차게 목표를 세우고, 국가별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에 따르면,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상위 수준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를 예방, 감지, 평가,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얼마나 잘 구비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역량지표에서 100점 만점 중 97점을 기록했고, 4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은 이미 100% 접근 가능해,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상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2012년 이후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별 접근성에서 차이가 컸고,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수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모두에게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그동안의 진척 현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재난으로 인한 실종 및 사망자 수에 버금가는 규모의 사망자 수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 해에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도소매업뿐 아니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이는 가구 빈곤과도 직결됩니다. 2021년은 재난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해입니다. 회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데이터와 통계입니다. 데이터와 통계 없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은 데이터와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뒤처져 있는 분야를 식별해 ‘혁신적 포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 통계청은 K-통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시대를 더욱 굳건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정 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표성 있는 통계를 만들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한 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입니다. 이처럼 ‘치우침 없이 개방된 통계’는 SDGs 달성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각 국가의 이러한 노력들이 마중물이 되어 글로벌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이 도래하길 희망합니다.

통계청장 류근관

柳根寬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유엔 SDGs 데이터의 국가책임기관으로서 SDGs 지표개발과 국가적 이행점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는 그 중심 과제로 SDGs를 성취해가고 있는 ‘나라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이라는 기초 보고서를 출시한 이후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은 그런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국가승인 통계 등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활용해 현 상황을 진단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글로벌 SDGs 코리아’의 자화상을 가감 없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방대한 SDGs 데이터를 한눈에 살펴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은 ‘코로나19와 한국의 SDGs’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했습니다. 빈곤, 건강, 교육, 일자리, 불평등, 기후변화 등 17개 글로벌 SDGs 모두 코로나19 시대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17개 글로벌 목표를 5P 즉, 사람(People), 지구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나누어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People)**은 누구나 빈곤과 기아 상태에서 벗어나, 존엄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높고,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 안정성 확보율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성이 낮아, 모두에게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성의 의사결정권한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았습니다. 국제보건규정에 따른 한국의 역량수준은 높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모범을 보여주긴 했으나, 지역별로 공공의료 자원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 것은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지구 환경(Planet)** 관리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30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기물 또한 그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유해한 폐기물의 증가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폐기물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가능한 순환적 경제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다행히도 최근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적 활동을 추구하는 기업들이(ESG)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번영(Prosperity)**은 풍요롭고 성취감 있는 삶을 향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는 2020년에 좋은 경제성장을 보여주었지만, 2020년 상반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이 영향을 받았습



니다. 반가운 사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평화로운 사회(Peace)**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의 취약 집단인 아동이 폭력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에 아동 폭력 및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빈곤국가 및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OECD 국가 가운데서는 ODA를 활발하게 확대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숙을 통해 수혜국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ODA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 데이터가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해준 시기였습니다. 위기는 데이터 혁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데이터와 통계에 근거해 발간되는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이 더욱 소중합니다. 이 보고서가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디딤돌이 될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는 SDGs를 이해하고 데이터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온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이 나오기까지 정성을 다해준 관계기관 여러분께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국립공원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상 가나다순)에서 SDGs 이행점검 과정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SDGs 데이터를 생산하고, 국제기구 자료제공 과정에 협력하고 있는 여러 관계부처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 보고서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 차례

---

- ☉ 개요
- ☉ 인포그래픽
- ☉ SDGs 목표별 분석
- ☉ 부록
  - 참고문헌
  - 용어 약어
  - 지표 총괄표



## 글로벌 SDGs 지표와 한국 데이터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하는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는 국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2030 의제 이행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2030 의제는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결의문이다.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로 불리는 이 문서에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목표가 담겨 있다. SDGs로 일컬어지는 이 목표들은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아우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성을 지향하고 있다.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등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각성에, 지금 유엔은 2030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SDGs 달성을 위해 전 분야에서 경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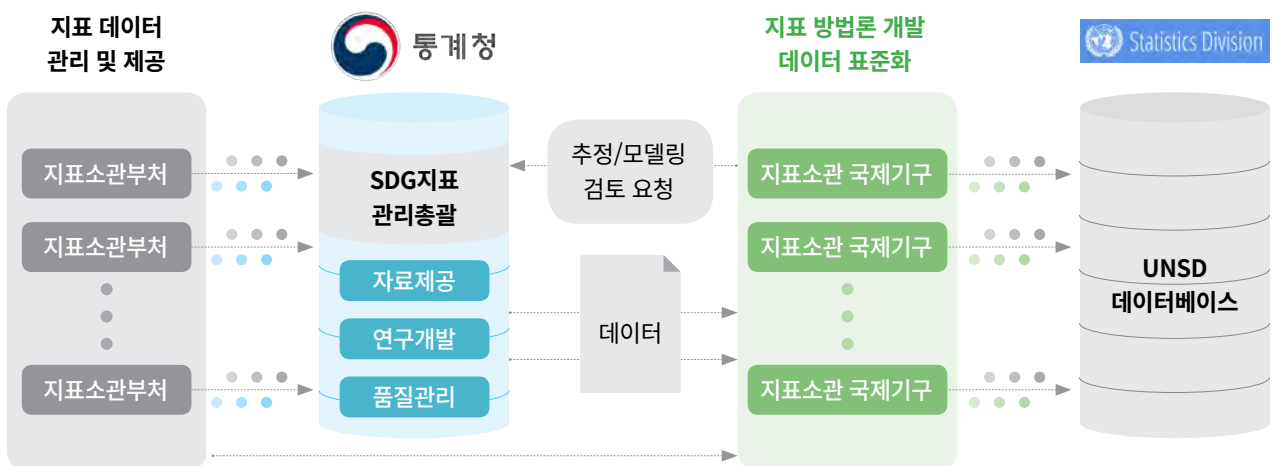
2030 의제는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통해 매년 글로벌 차원에서 점검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와 통계다. 이를 위해 유엔은 글로벌 SDGs 지표 프레임

워크를 개발했다. 이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아래의 그림은 SDGs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국가통계시스템, 국제기구, 유엔통계처(UNSD)의 역할을 보여준다.

데이터 제공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이며, 보고 과정에서의 정확성,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 국가는 공식통계원칙에 기반해 작성한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국가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및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UNSD에 제출한다. UNSD는 이 데이터를 자체 운영 중인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다. 세계 전체 및 지역 수준에서 해당 지표가 점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가 데이터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데이터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유엔 SDGs 한국 데이터 책임기관으로서 국제기구의 데이터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고 검증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이 업무는 각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24개 관계부처 및 통계작성기관의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품질이 담보된

SDGs 데이터 제공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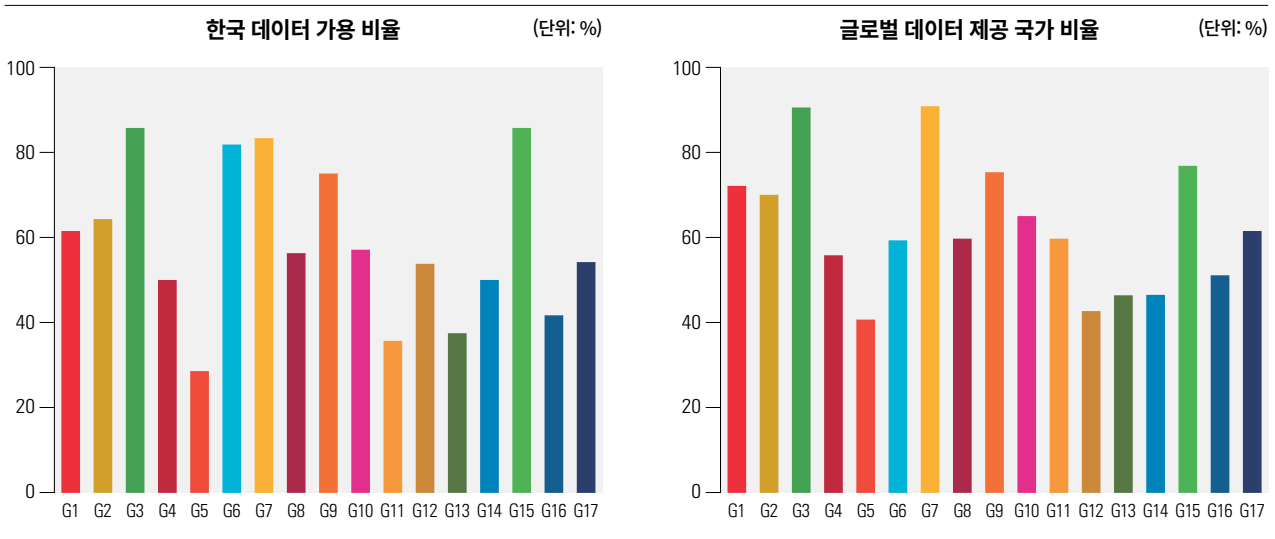


출처: IAEG-SDGs(2019)를 바탕으로 수정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 출처가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기도 한다. 법이나 제도 등의 구비 여부를 측정하는 비통계적 지표의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응답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231개 지표 중 한국 데이터가 가용한 지표는 136개다. 이는 2년 전 109개에 비해 데이터 가용성이 향상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목표에서는

데이터 가용률이 낮은 상황이다(아래 왼쪽 그래프).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2020년 7월 기준, 17개 목표 중 4개 목표(목표 5, 12, 13, 14)에서 여전히 절반 미만의 국가 데이터만 가용한 상황이다. 목표별, 국가별로 데이터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UN, 2020b).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국내 관계부처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데이터 가용성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특징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은 글로벌 SDGs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 통계를 활용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목표치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SDGs 이행경로에서 ‘2020년 수치’는 드라마틱한 변화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와 연관된 SDGs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 SDGs 대부분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SDGs 3번 목표인 건강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진 여러 조치들, 국가 간 이동금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경제활동에 타격을 주고(목표 8), 식량의 생산과 배분체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다(목표 2). 학교 폐쇄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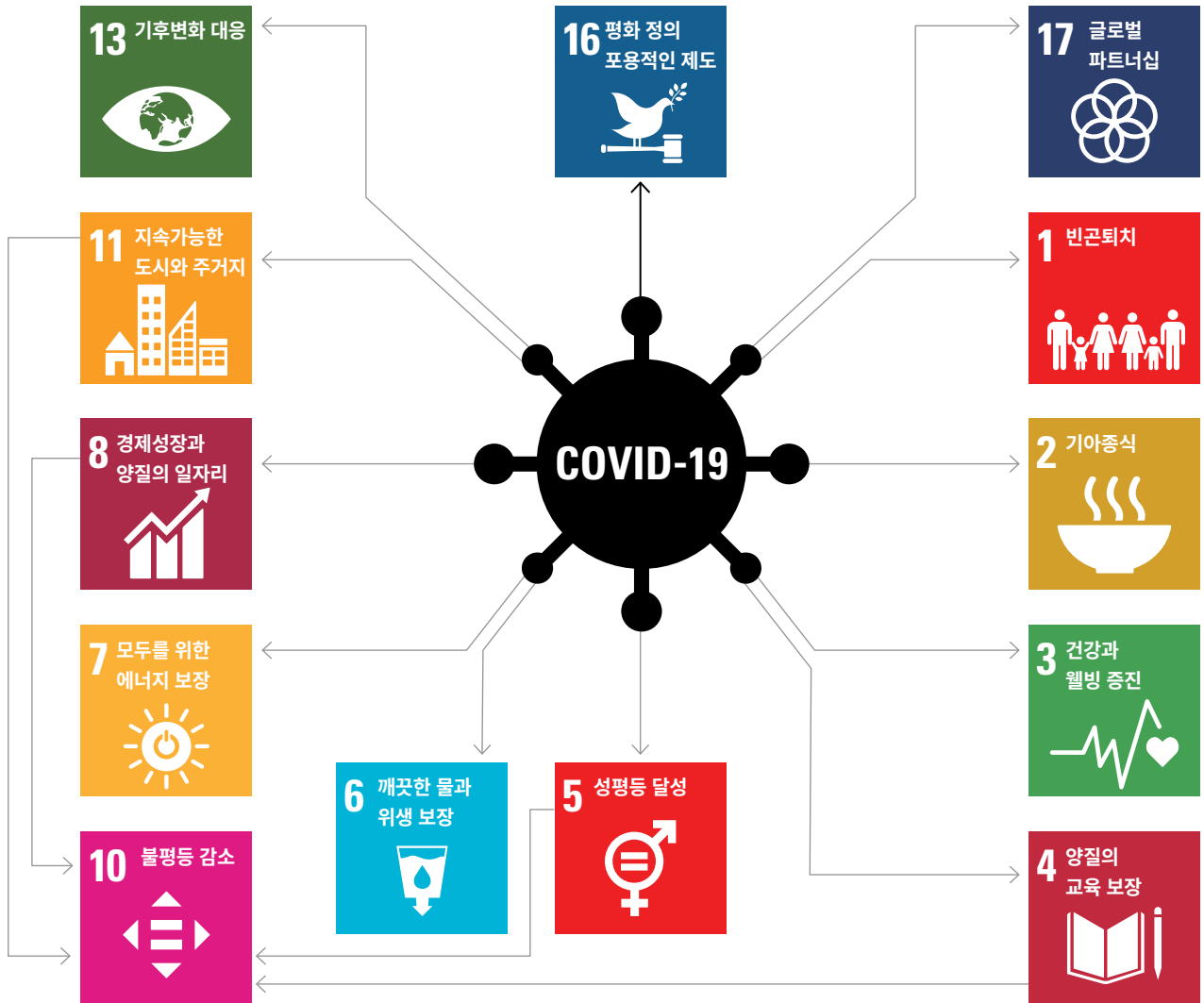
학생들이 발생하고(목표 4),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이슈도 나타났다(목표 16). 코로나19 속에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목표 1) 전반적으로 불평등(목표 10)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SDGs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목표 17)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은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피면서 SDGs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2020년 12월 말 이전에 공표된 데이터 및 통계를 최대한 반영했다. 다만, 해당 연도 전체를 포괄하는 승인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부 목표는 코로나19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경우, 다양한 출처, 월간과 분기 등 최근 시점의 통계 데이터를 추가로 입수해 제약을 보완코자 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와 SDGs 목표 간 관계



출처: UN(2020a)

2021년 1월 1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17명인데 이는 지난 10년(2009~2019년)간 사회재난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1047명과 맞먹는 수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했다. 한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1분기에 -1.4%, 2분기 -3.2%로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중 하나는 항공운송산업으로, 전년동월 대비 2020년 4월 여객 운송량은 -80.3%, 화물 운송량은 -35.1%였다. 이는 고용과도 직결된다.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은 2020년 1월 이후 꾸준히 증가해 5월에는 1조 원을 넘겼다. 남자에 비해 여자 실업 위험이 높았다. 2000~2019년 동안 남자의 실업률은 여자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으

나, 2020년에는 여자의 실업률이 4.0%, 남자의 실업률이 3.9%로 역전되었다. 2020년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긴 여름 장마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변동률 또한 확대되었다. 전년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증감률은 2020년 10월과 11월에 13%를 넘어 지난 5년 이래 최고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그래프나 표를 이용해 기술했으며, 주요 결과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제시했다. 이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SDGs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이 뒤쳐진 분야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해내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글로벌 SDGs 지표 프레임워크

글로벌 SDGs 지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27개 국가 통계청을 회원으로 한 전문가그룹(IAEG-SDGs)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그룹은 2015년 3월에 조직되었으며,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 개발·개선과 SDGs 이행 지원, 국가통계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SDGs 지표는 방법론적 명확성, 측정 가능성, 해석 용이성, 국제 비교성, 결과지표 중심이라는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그 과정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그룹의 참여에 기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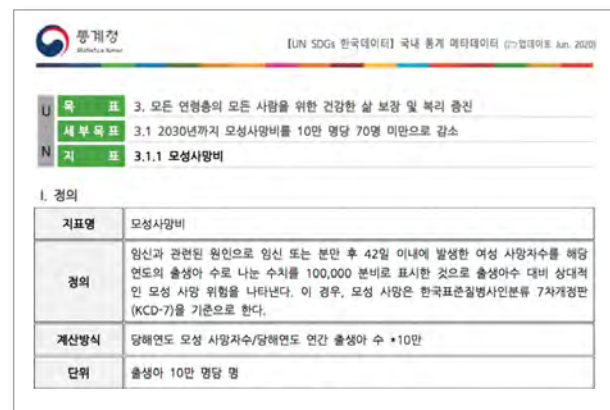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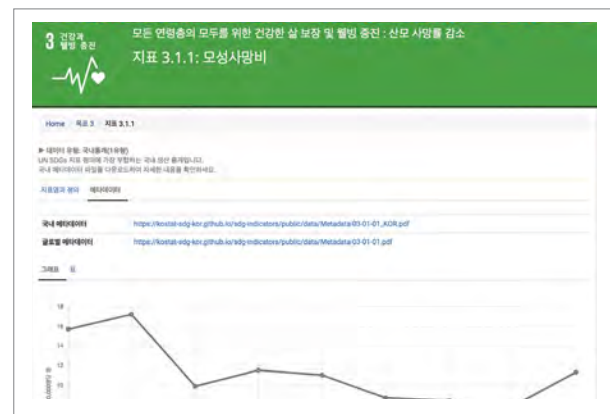
SDGs 이행 원년인 2016년에 맞추어 지표 프레임워크도 같은 해 3월에 구축되었으나, 당시 일부 지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IAEG-SDGs는 1년 동안 지표 프레임워크를 수정, 보완했고, 마침내 2017년 3월 제48차 UN 통계위원회에서 개정안(232개)이 합의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방법론이 발전하고, 데이터 가용성도 확대되기 마련이다. 이를 고려해, SDGs 이행 5년째와 10년째가 되는 2020년과 2025년에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Comprehensive Review)이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 종합개편이 2020년 3월 제51차 UN 통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IAEG-SDGs는 기존 지표 프레임워크에서 대체, 삭제, 추가할 36개 지표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방법론 개발이 지체된 경우, 여전히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현재의 지표가 세부목표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위원국 간 논의를 통해 231개로 구성된 지표 프레임워크가 승인되었다. 향후 5년간은 이 지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SDGs 이행상황이 점검된다. 한편, 한국 통계청은 2020년 6월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국으로 IAEG-SDGs에 참여하고 있다.

## 🌐 SDGs 한국 데이터 플랫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오픈 소스 기반의 SDGs 한국 데이터 플랫폼(<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오른쪽 그림)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지표에 대응하는 한국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첫 화면의 각 목표를 클릭해 들어가면, 목표 내 지표 리스트와 데이터 이용가능 여부가 표시된다. 데이터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지표에는 그래프와 표 형태로 데이터를 서비스 중이다. 이와 함께, 정의, 산식, 출처, 글로벌 데이터와의 비교 등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서비스 중이다. 데이터 이용 가능 여부는 글로벌 SDGs 지표 각각의 개념 및 정의, 산식 등을 검토해 해당 지표에 대응하는 한국 데이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유형 1은 글로벌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 통계가 있는 경우, 유형 2는 국내 통계가 없으나 국제기구에서 추정한 한국 데이터는 있는 경우, 유형 3은 유사한 국내 통계가 있는 경우, 유형 4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다. 이 구분에 따르면, 유형 1은 58개, 유형 2는 68개, 유형 3은 28개다.

## SDGs 한국 데이터 플랫폼





# 인포그래픽

## 재난에 의한 사망·실종자 수 2009~2019



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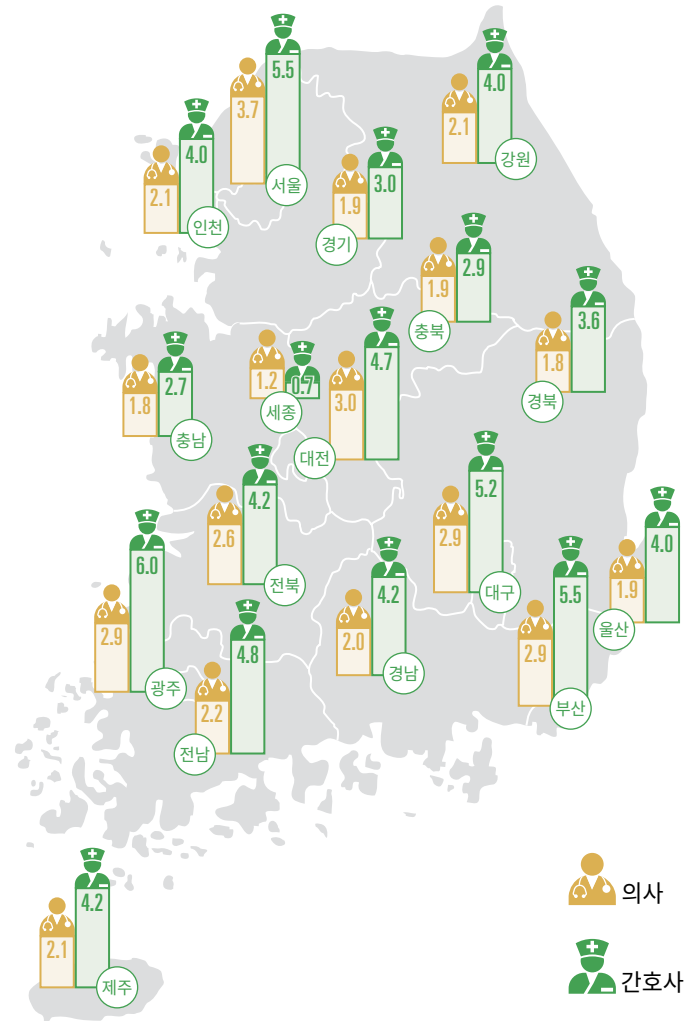
218명



사회재난

10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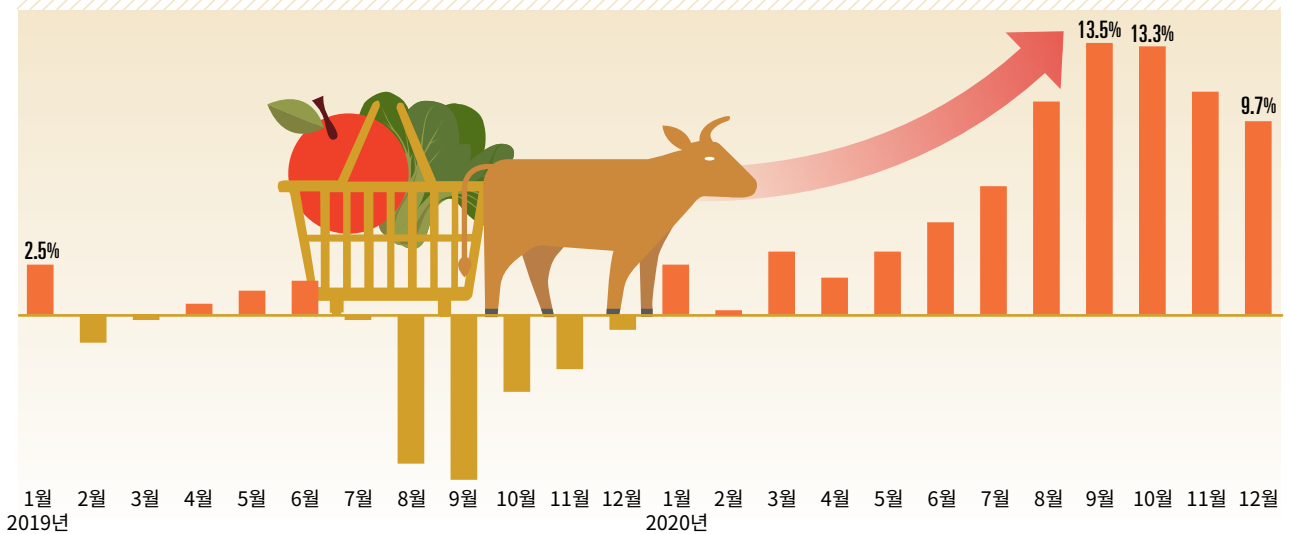
##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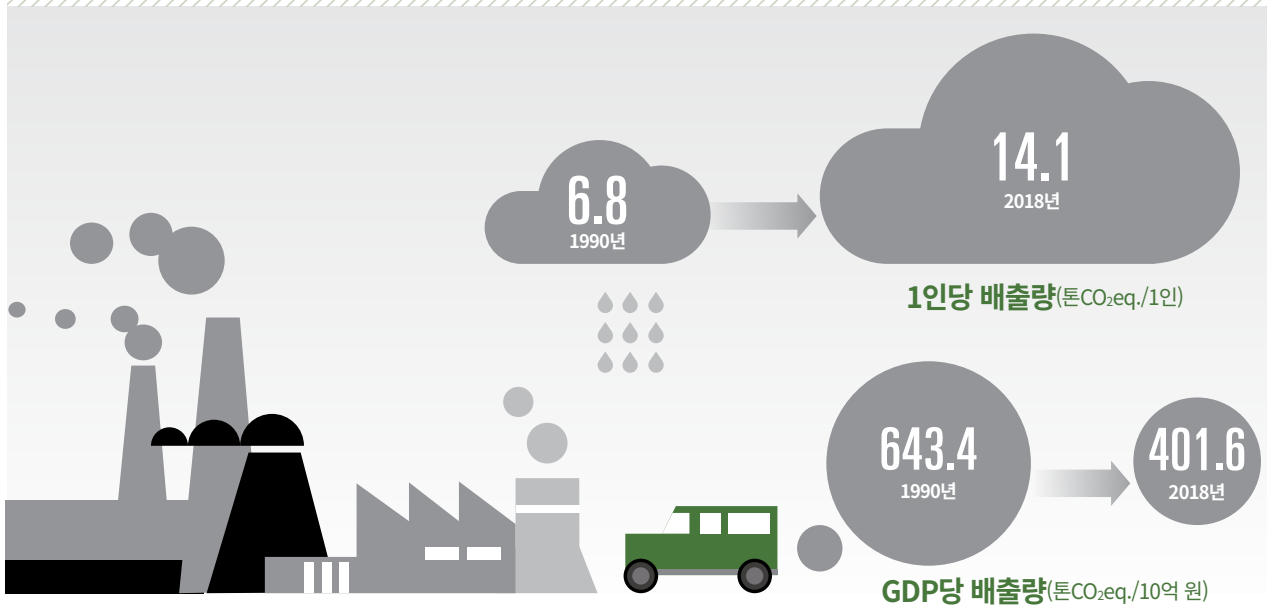
의사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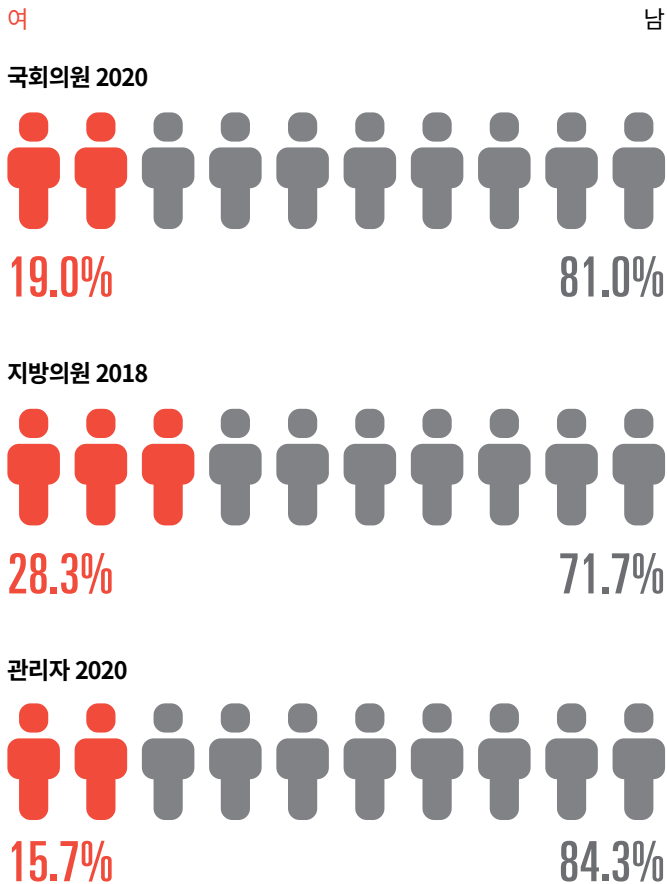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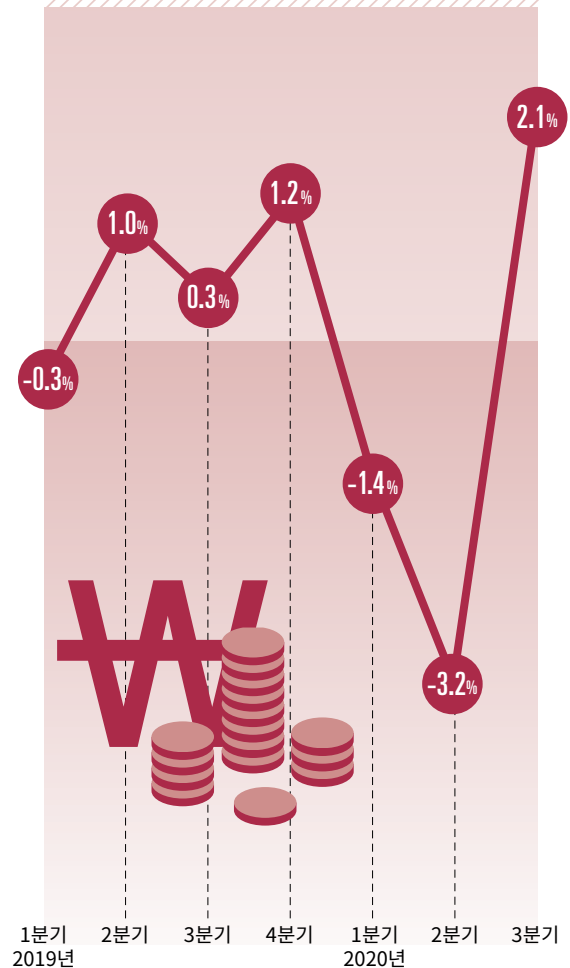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여성 국회의원·지방의원·관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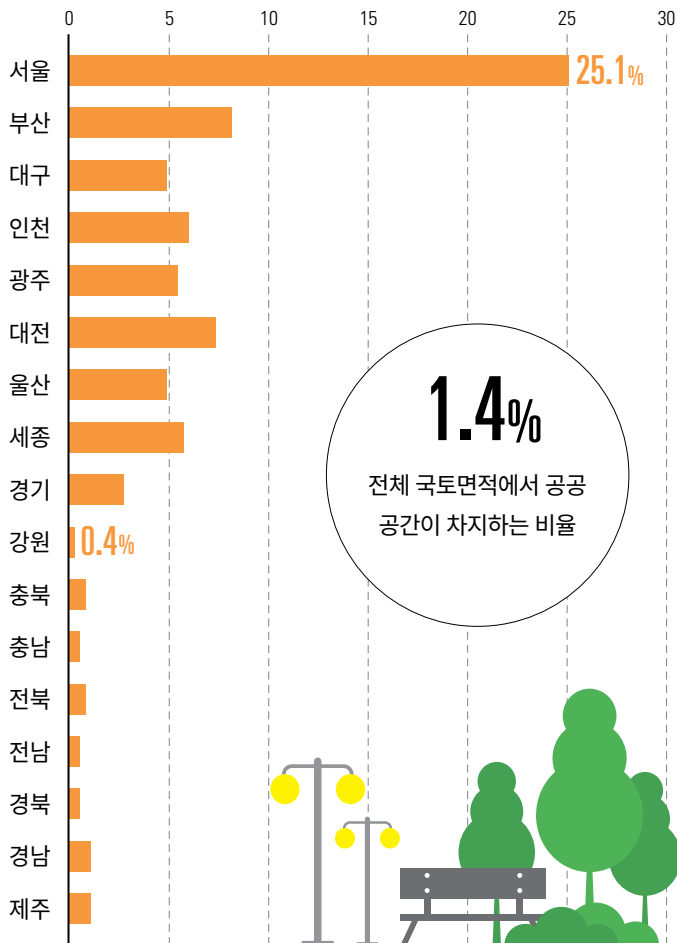
## 1인당 실질GDP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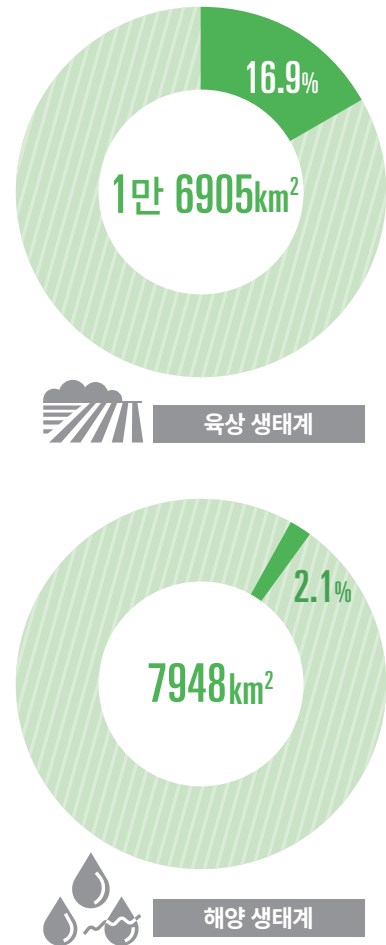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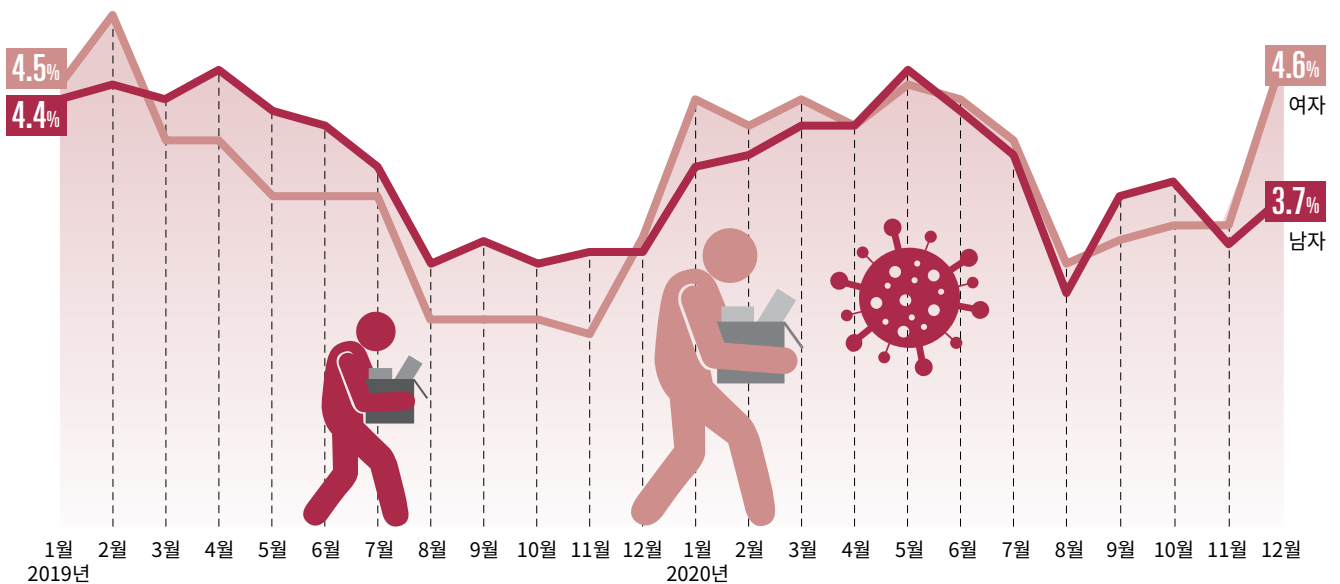
## 지역별 공공 공간 비율, 2019



## 국내 보호지역 면적, 2020



## 남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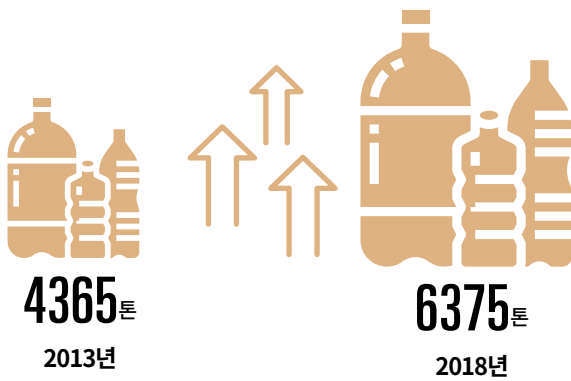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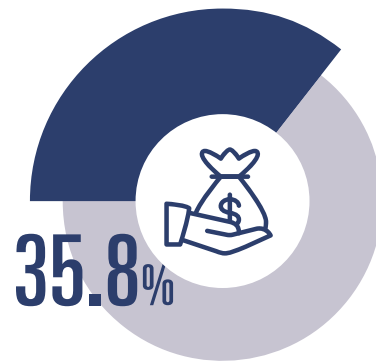
##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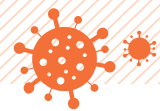
##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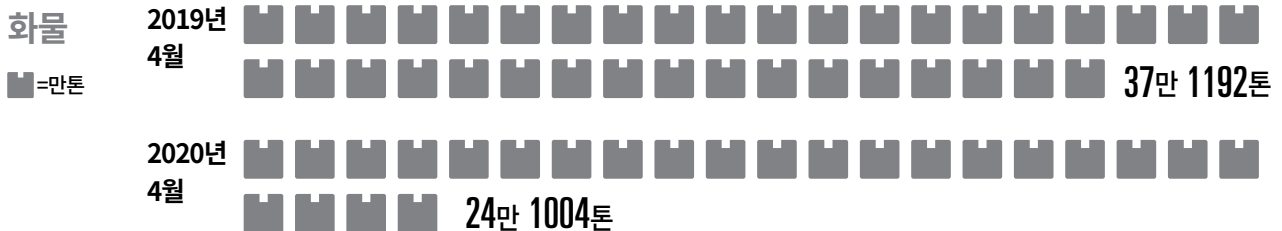
## 최저개발국 대상 양자 ODA 비율, 2018



15



## 여객 및 화물 운송량





# 1 NO POVERTY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빈곤퇴치는 국제사회의 끝나지 않은 도전과제 중 하나다. SDGs 1번 목표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빈곤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재난 상황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향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부분 국가에서 봉쇄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유엔은 2020 SDGs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를 통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예상하며,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국제빈곤선 미만의 인구 비율이 2020년 이후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국제사회는 하루 1.9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2010년에는 15.7%, 2015년에는 10%로 하락세를 보였고,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19년은 8.2%, 2020년에는 7.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유엔은 이 전망이 빗나가고 2020년에는 이 비율이 8.8%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인구 중 7100만 명이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난 상황은 취약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타격을 안길 수 있다. 2018년 기준 최근 기후위기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로 인한 재난피해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80개 최저개발국(LDC)의 전체 인구 중 14%가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들 국가에서 사망 또는 실종한 인구 중 29%는 재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에서도 2020년도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태풍과 같은 재난으로 많은 피해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사회적 피해도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효과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자연재해보다 많은 사회재난 인명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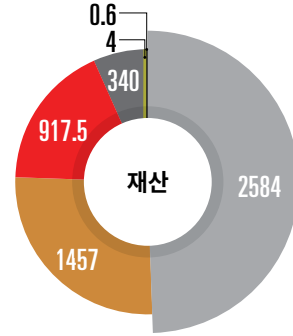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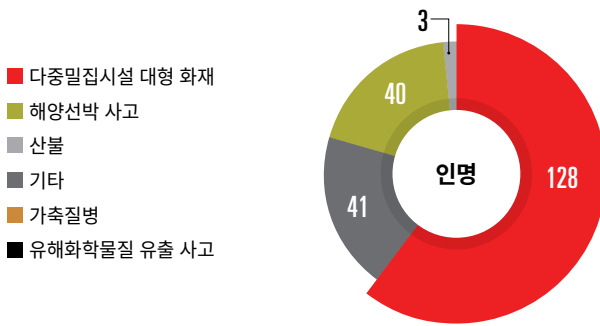
한국은 재해를 자연현상에 따른 ‘자연재해’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해에는 태풍, 홍수, 대설,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이 포함되며, 사회재난은 각종 화재 및 교통 관련 대형 사고, 시설 붕괴, 선박 침몰, 유해물질 유출 사고 및 각종 오염, 원전 등 전력 및 기간 시설 사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포괄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가축 질병, 의료서비스 마비에 따른 보건의료 사고 등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간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은 총 218명, 사회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총 1047명으로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실종자 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액의 경우, 자연재해는 3조 8442억 원이며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3조 3380억 원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가 조금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유형별 사회재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발

생 건수로는 다중밀집시설의 화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불이 20건, 해양선박 사고가 16건, 가축질병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적 피해 기준으로는 다중밀집시설 화재의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포함)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선박 사고, 지하철 대형 사고 등이 각각 680명, 477명으로 많았다. 감염병에 의한 인명피해도 308명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가축질병에 의한 재산피해가 약 2조 3484억 원 규모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산불에 의한 피해가 3167억 원,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피해액이 3072억 원으로 화재 사고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사회재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발생한 사회재난만 살펴보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로 총 10건이었으며, 인명피해도 128명으로 다른 사회재난에 비해 가장 많았다. 산불 재난도 총 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2584억 원으로 전체 피해 규모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는 가축질병이 1457억 원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

주1: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했으나 표준매뉴얼 관리대상이 아닌 유형임

주2: 인명피해는 사망, 부상, 실종을 포함함

### 코로나19, 고연령 치명률 높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사회재난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한국에는 총 6만 17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917명으로 치명률은 1.48%를 보여주고 있다. 확진자 중 남자가 3만 169명으로 48.84%, 여자가 3만 1600명으로 51.16%를 차지해 여자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망자 중에는 남자가 459명으로 50.05%를 차지해 치명률 1.52%를 보였고 여자는 458명(49.95%), 치명률은 1.45%로 남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만 1602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18.7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9836명(15.92%), 60대가 9791명(15.85%)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는데, 전체 사망자의 55.29%인 507명은

80대 이상으로 이들의 치명률은 16.55%로 매우 높다. 이어 70대가 259명으로 전체 28.24%를 차지했으며, 치명률은 5.34%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치명률도 낮아졌는데, 20대 이하 확진자 중에는 기준일자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 근로형태별로 고용보험 가입률 차이 나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위기는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취업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하고자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를 극복하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 중 하나다. 2020년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이 매월 증가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신청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7336억 원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같은 해 5월 1조 162억 원을 넘어섰고 9월에는 1조 1663억 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근로형태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4년 52.2%에서 2020년 72.6%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은 비정규직 또는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가입률은 낮은 편으로 이들에게 고용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사회안전망 장치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9.2%인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46.1%에 그쳤다.

코로나19 발생 현황(2021.01.01. 0시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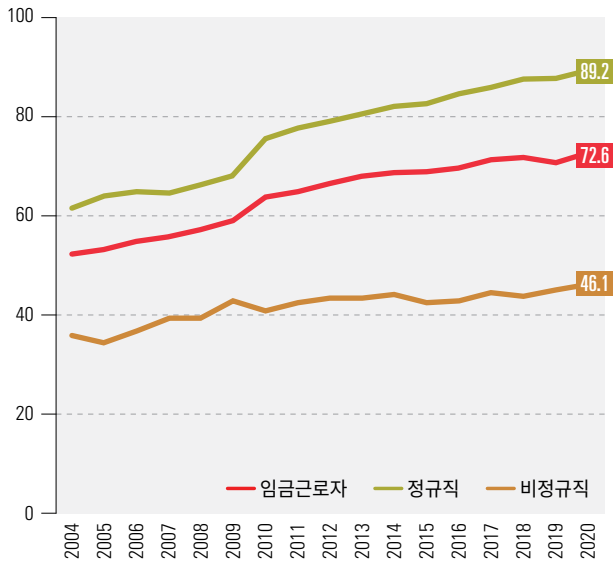
구분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성별	여	31,600(51.16)	458(49.95)	1.45
	남	30,169(48.84)	459(50.05)	1.52
연령	80세 이상	3,064(4.96)	507(55.29)	16.55
	70~79세	4,849(7.85)	259(28.24)	5.34
	60~69세	9,791(15.85)	110(12.00)	1.12
	50~59세	11,602(18.78)	30(3.27)	0.26
	40~49세	8,778(14.21)	7(0.76)	0.08
	30~39세	7,873(12.75)	4(0.44)	0.05
	20~29세	9,836(15.92)	0	0
	10~19세	3,844(6.22)	0	0
	0~9세	2,132(3.45)	0	0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발생동향(ncov.mohw.go.kr, 2021.01.01. 인출)

주: 치명률 = 사망자 수/확진자 수×100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2004~2020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각 연도  
 주 : 매년 8월 기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가입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 내 거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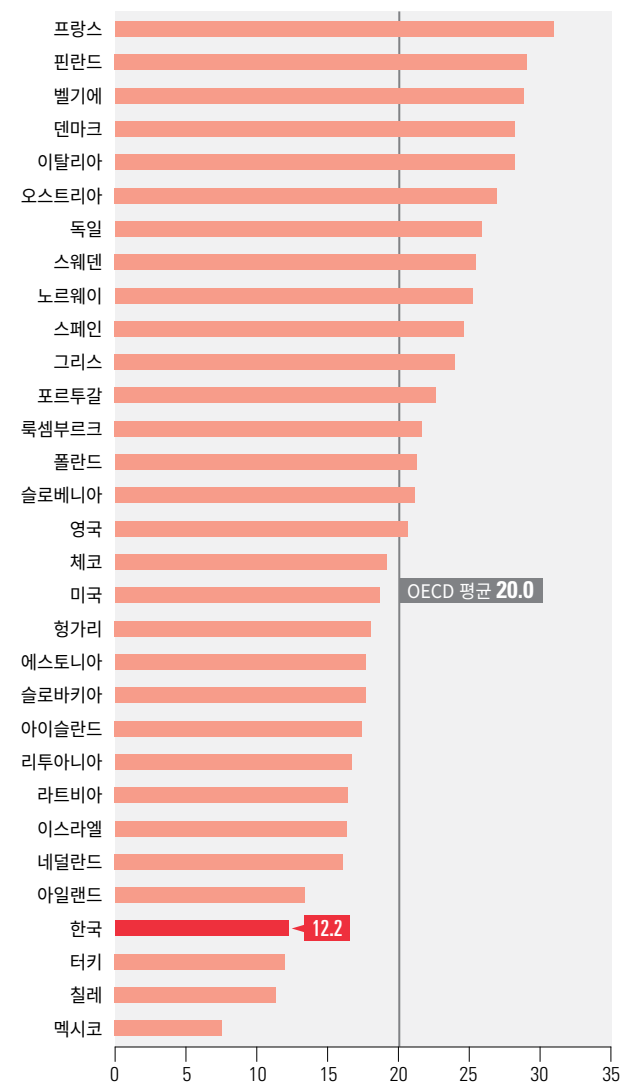
## 긴급재난지원금, 14조 2357억 원 지급으로 전국 2200여만 가구 혜택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 지출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총 14조 2357억 원을 지급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2216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 원 중 12조 656억 원(총 99.5%)이 기한(2020년 8월 말) 내 사용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총 9조 5591억 원)을 사용된 업종별로 살펴보면 ‘마트·식료품’에서 2조 5143억 원이 사용되어 전체의 26.3%를 차지했고, 대중음식점(2조 3251억 원, 24.3%), 병원·약국(1조 172억 원, 10.6%), 주유(5788억 원, 6.1%), 의류·잡화(4518억 원, 4.7%) 등의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매출 규모별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카드가맹점에서 총 6조 725억 원(63.5%)이 사용되었고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카드가맹점에서 3조 4866억 원(36.5%)이 사용되었다.

## 한국 사회지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보며, 한국 보건복지 체계에 대한 위상과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 꾸준히 재정지출을 해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OECD 회원국별 사회지출(SOCX)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1990년 2.6%에서 2019년 12.2%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평균 사회지출이 20.0%(2019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31.0%였으며, 핀란드는 29.1%, 벨기에는 28.9%, 미국은 18.7%에 달했다.

OECD 국가별 사회지출(SOCX) 규모, 2019 (단위: %, 명목GDP 대비)



출처: OECD Stats(stats.oecd.org, 2021.02.16. 인출)

주 : 데이터 없는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함



# 2 ZERO HUNGER



#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식량은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다. 지구 한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21세기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발간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보고서(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인구 중 10%가 넘는 7억 5000만 명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상태에 있고, 해당 인구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아종식을 목표로 하는 SDGs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기아에 시달리는 등 가장 심각한 식량불안을 겪고 있다.

SDGs 2번 목표는 기아종식뿐 아니라 충분한 양의 식량 공급 및 소비를 넘어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며, 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량생산체계를 확보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식량의 유통체계에 영향을 미쳐 아이티, 콜롬비아, 수단, 남수단, 짐바브웨, 태국 등 여러 국가에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의 이상기후는 식량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FAO는 2020년에는 기아 인구가 적게는 8300만 명에서 많게는 1억 3300만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세계적으로 7억 7830만 명에서 8억 2790만 명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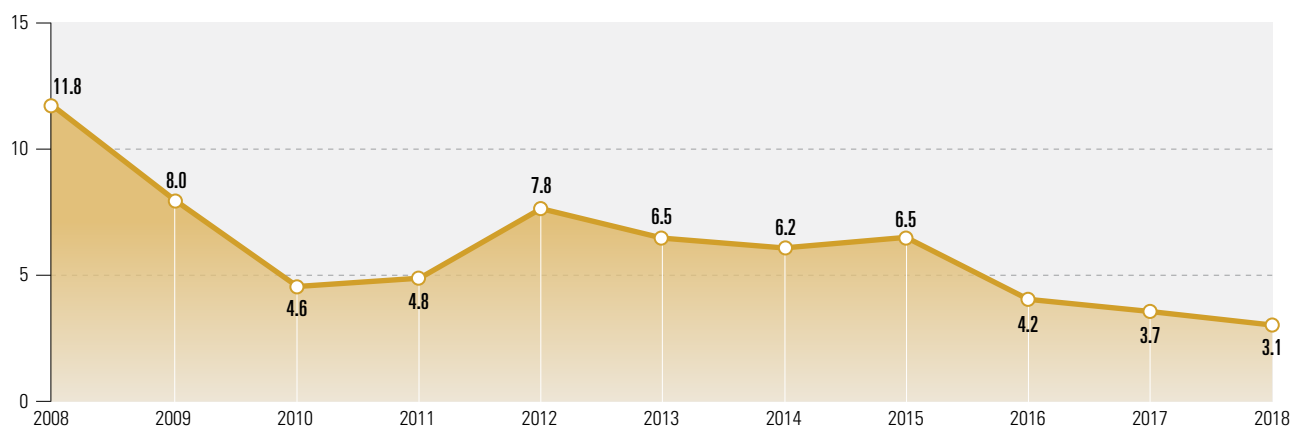
## 소득수준 낮을수록 식품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한국 가구 중 식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구 비율은 2018년 3.1%로, 10년 전(2008년) 11.8%에 비해 8.7%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 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은 소득수준 및 거주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2018년 4.0%, ‘동’ 지역이 2.9%로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의 식품 안정성 미

확보가구 비율이 높았다. 특히,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하’ 그룹의 식품 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은 11.5%로, 전체 평균 3.1%와 비교할 때는 4배 가까운 수치다. 물론, 2008년(29.3%)에 비해 17.8%p 감소한 것이긴 하나, 소득수준 ‘상’에서 ‘중하’ 사이에 해당하는 집단의 미확보가구 비율이 0.1%~2.3%인 것과 비교한다면, 소득수준 ‘하’ 집단의 식품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식품 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 2008~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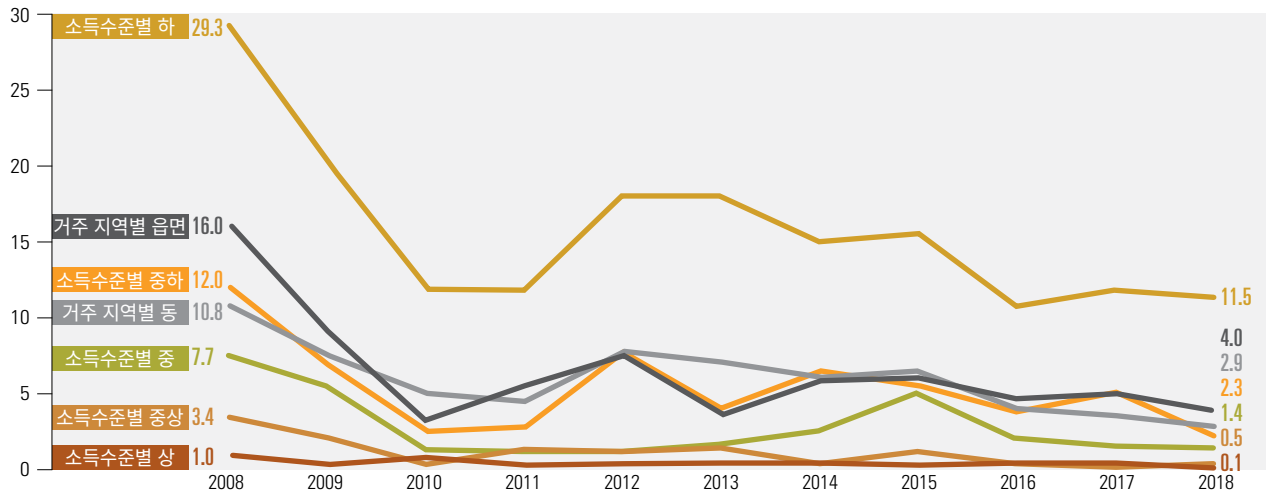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주 : 식품 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은 100%에서 식품 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를 제외함



## 가구특성별 식품 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 2008~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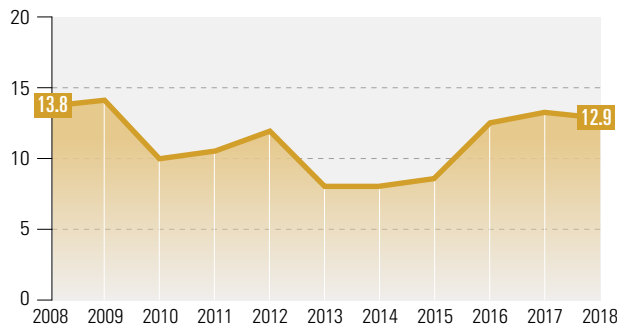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주 : 식품 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은 100에서 식품 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을 제외함

##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 2008~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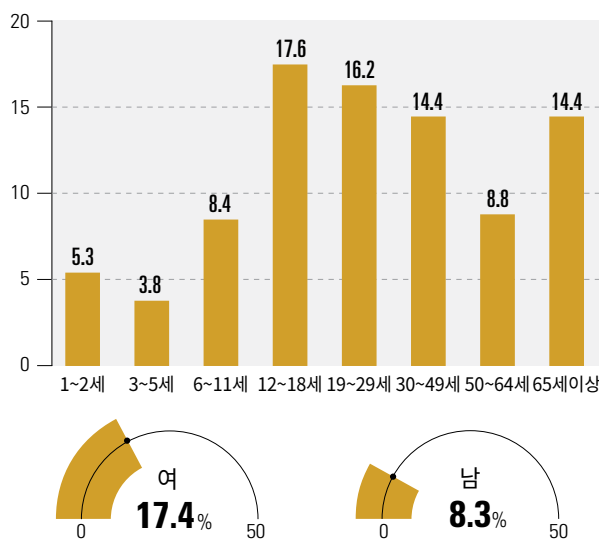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주 : 영양섭취부족은 2015년 한국인 영양소섭취 기준에 근거해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경우를 뜻함

## 성 및 연령별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 2018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 영양섭취부족 인구, 여자와 청소년(10~18세)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한국인의 영양소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을 산출한 결과, 2018년에는 12.9%로, 10년 전 (2008년) 13.8%에 비해 0.9%p 감소했다. 여자의 영양섭취부족 비율은 17.4%로 남자의 8.3%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5세가 3.8%로 가장 낮고 12~18세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14.4%로 50~64세(8.8%)에 비해서도 영양섭취부족 인구가 많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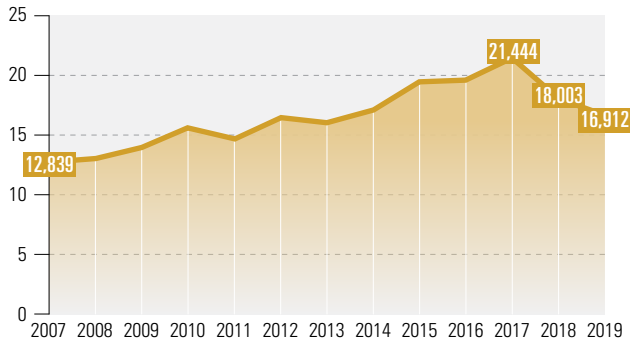
## 농가의 노동생산성은 최근 2년 연속 감소세

산업 간 혹은 농가 간 경제적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농가 노동생산성을 보는데, 이는 투입된 노동시간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로 계산한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2017년 시간당 2만 1444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8년 1만 8003원, 2019년 1만 6912원으로 연속 감소했다. 경지규모가 넓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데, 10ha 이상 농가는 4만 4067원으로 0.5~1.0ha 미만 농가가 1만 1702원인 데 비해 약 3.8배 정도 높다. 한편, 경지규모에 따른 연간 농가소득을 비교해보면, 경지규모가 10ha 이상인 농가의 소득은 1억 1260만 원으로 전체 평균 4118만 원보다 약 2.7배가량 높으며,



농업 노동생산성, 2007~2019

(단위: 원/시간)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9

주 : 노동생산성 = 농업 부가가치 / 자영농업시간

- 농업 부가가치 = 농업총수입 - (중간재비 - 감가상각비)
- 중간재비 = 농업경영비 - (지불노임 + 지불임차료 + 지불이자)
- 자영농업시간 = 가족노동 + 품앗이 + 고용노동 + 일손돕기
- 농업경영비란,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으로서 농업지출현금, 현물지출 평가액, 대농기구등 농업용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액, 재고생산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자가생산해 재투입된 중간생산물은 농업경영비에서 제외함)

0.5ha 미만인 농가의 소득 3505만 원보다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의 노동생산성 및 소득이 경지규모가 큰 농가의 노동생산성 및 소득에 비해 체계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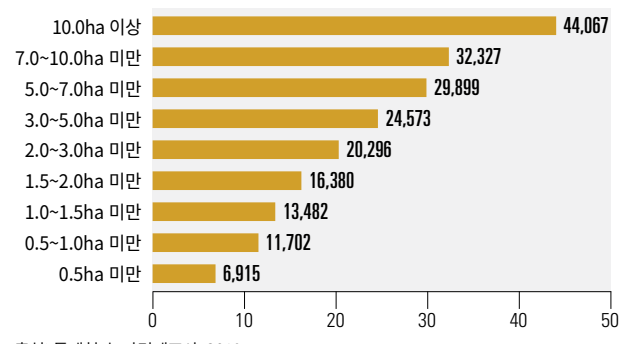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가격변동률

###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 높아

2020년에는 장마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체 소비자 물가에 비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축산물 가격은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2016~2017년 사이 지속되었던 상

경지규모별 노동생산성,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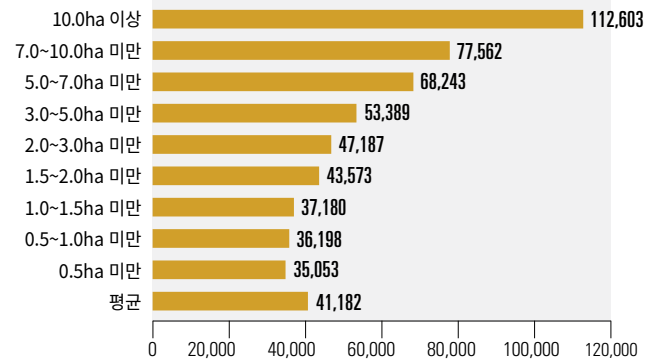
(단위: 원/시간)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9

경지규모별 연간 농가소득, 2019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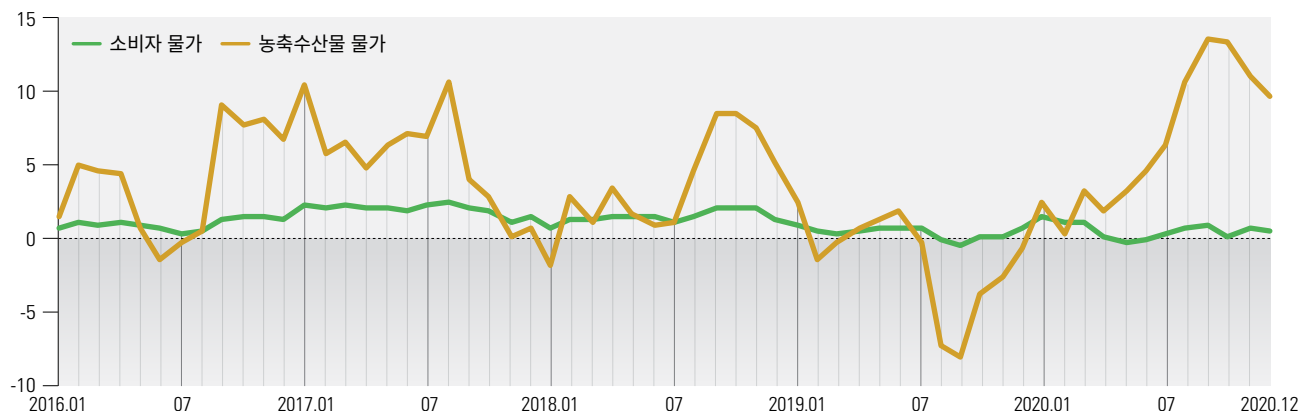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9

주 : 농가소득 = 경상소득+비경상소득, 경상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

승세는 이후 주춤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 내 육류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한, 채소류 가격의 경우에도 2018년은 여름 공식 관측 이래 최대 폭염 등으로 급등했으며, 2020년에도 계속되는 여름 장마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증감률, 2016~2020

(단위: %, 전년동월비)



출처: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각 연도



#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건강과 복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SDGs 3번 목표는 전 인류의 '건강권' 보장을 모토로 모든 인류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모성 및 아동의 건강 향상, 각종 감염병 퇴치, 비감염성 질환 감소,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 등 개별 이슈를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건강, 경제, 사회 위기가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SDGs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가져왔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기타 감염병 및 만성 질환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이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중하위소득국가(LMIC) 10억여 명이 가구소득의 최소 10%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등 가계 부담으로 인한 빈곤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UN, 2020b). 무엇보다도 노인, 장애인,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은 개별적인 건강 및 경제사회적 여건 때문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한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키우고, 공공의료 자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핵심역량은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보건의료 자원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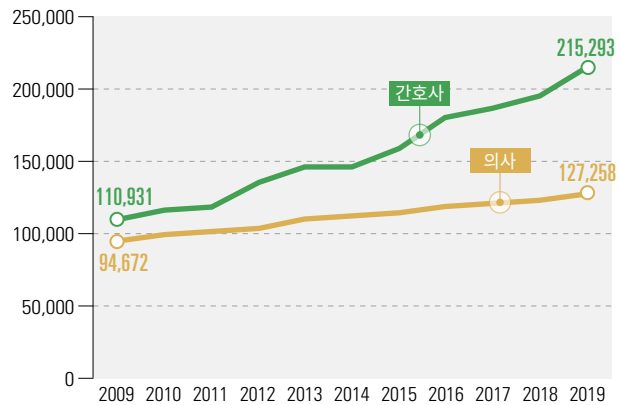
##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별 편차

2019년 한국 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는 12만 7258명, 간호사는 21만 5293명으로 2009년에 비해 의사 및 간호사 수가 각각 34.4%, 94.1%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지역별 의사 및 간호사 수를 비교해보면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5명인 가운데,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7명이었고, 반대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2명)이었다. 전체 17개 광역시도에서 전국 평균을 넘지 않는 시도는 11곳이었는데 이 중 9곳이 도지역이었다. 간호사 수는 대체적으로 1000명당 3.5명~5.5명으로 나타

의사 및 간호사 수,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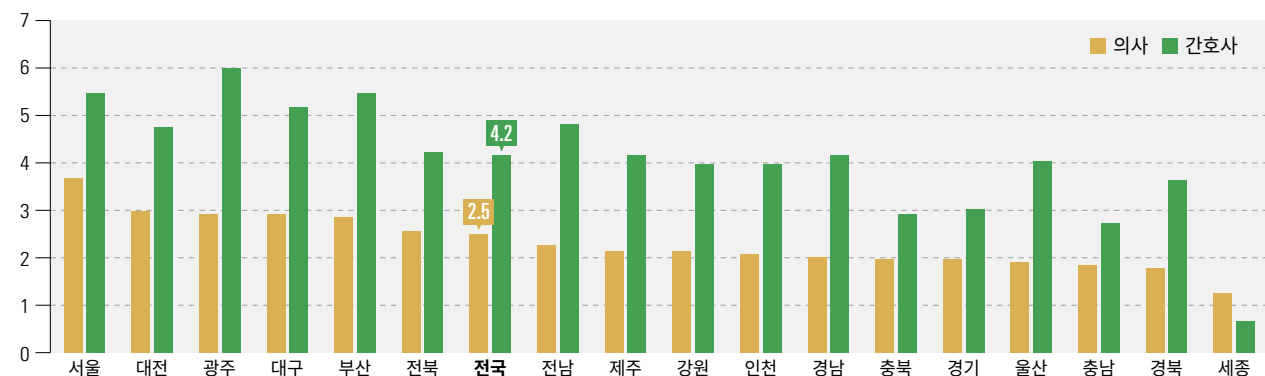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주 : 의사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를 미포함함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2019

(단위: 명)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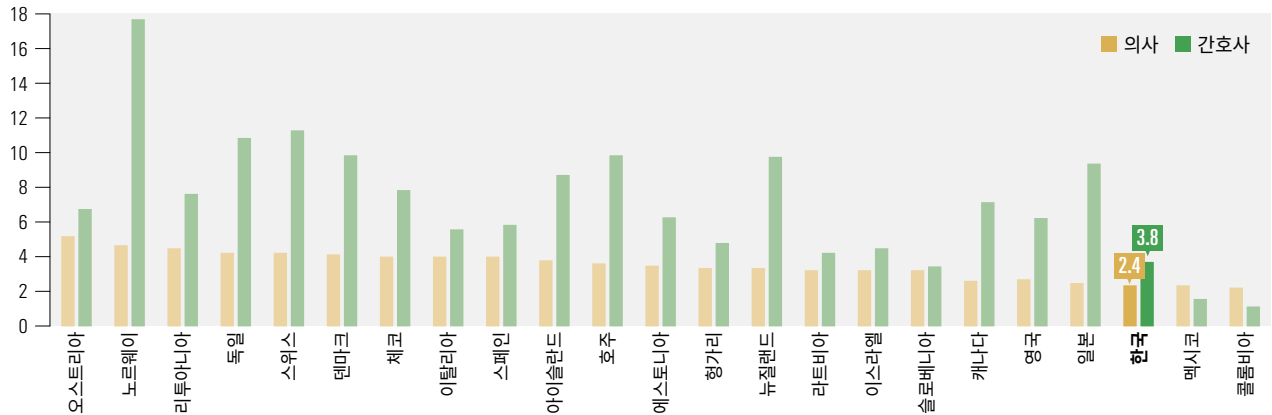
주1 : 의사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를 미포함함

주2 : 인구 1000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는 장래인구추계(2017) 기준으로 계산함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2018

(단위: 명)



출처: OECD Statistics, Health Care Resources(2020.12.18. 인출)

주 : 데이터 없는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함

나는데, 충북, 경기, 충남, 세종 지역은 간호사 수가 3명 이하였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인데 반해 오스트리아는 5.2명, 노르웨이 4.8명, 리투아니아 4.6명, 독일 4.3명이었다. 간호사 수는 한국이 1000명당 3.8명이었는데 이는 독일 11.1명, 스위스 11.5명의 3분의 1 정도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도 낮은 의료 인력 밀도가 일부 특·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 거주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함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특히 어린이와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응급, 중증 질환 등에 대한 양질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

우며, 지역 의료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어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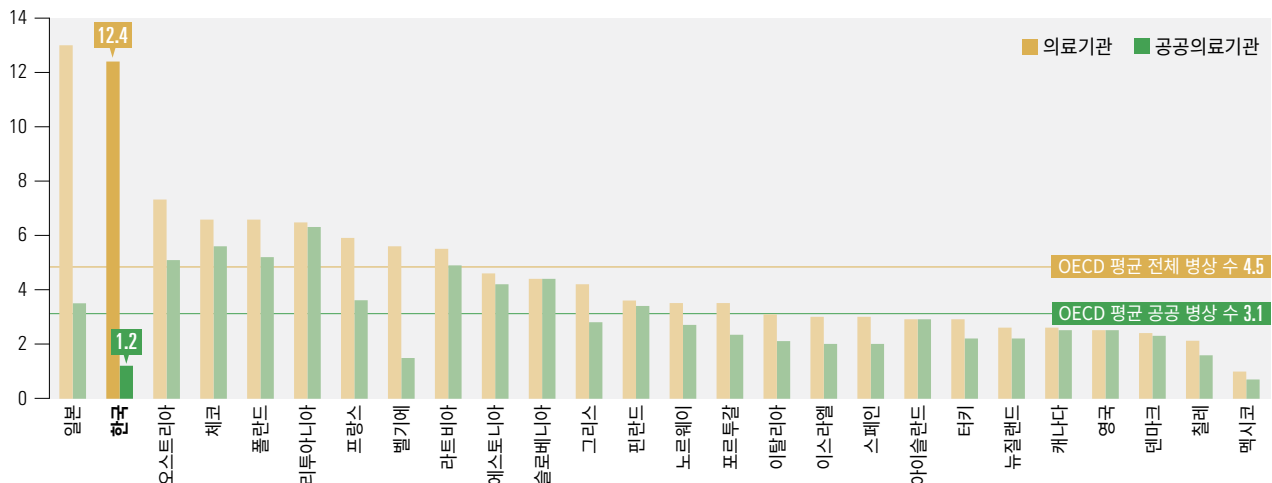
### OECD 국가 비교, 공공 병상 수 열악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뜻한다.

2018년 한국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총 12.4개로, 일본(13.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4.5개)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인데, 한국과 일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인 요양병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및 공공 병상 수 비교, 2018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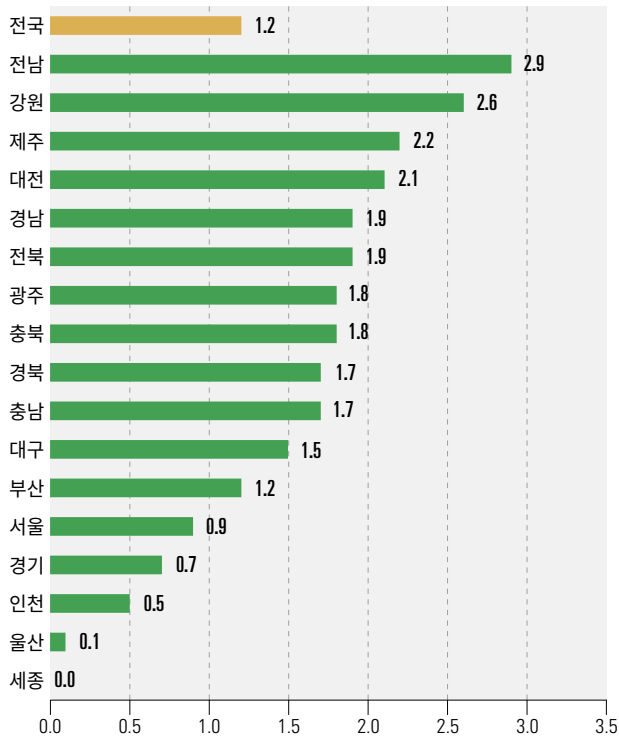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istics, Health Care Resources(2020.11.03. 인출)

주 : 데이터 없는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함

지역별 인구 1000명당 공공 병상 수, 2018

(단위: 개)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2018.12.31. 기준)

주 :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장래인구추계(2017) 기준으로 계산함

원이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다른 OECD 국가와 병상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OECD, 2019).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보유 수준을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2018년 OECD 평균 1000명당 공공 병상 수는 3.1개인데 비해, 한국은 1.2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과

병상 등 공공의료로 자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 병상 수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같은 시기에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울산, 세종 지역은 인구 1000명당 1개를 넘지 않았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병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감염병 등 기간·규모·파급력 예측이 불확실한 사태에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자원은 여전히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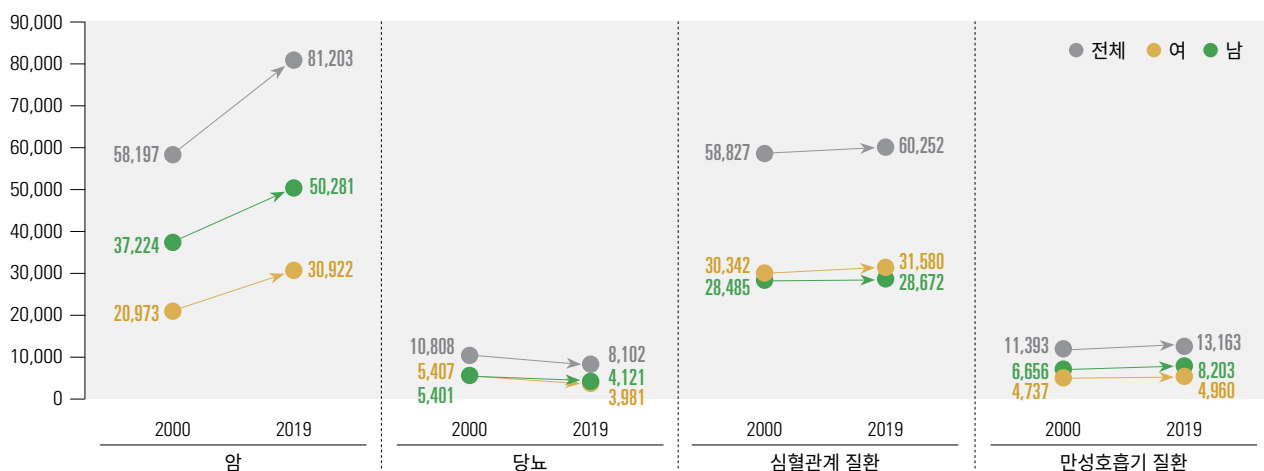
### 고령층의 비감염성 질환 사망자 수 증가 추세

암, 당뇨 등 비감염성 질환(NCDs)은 더 이상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유엔은 비감염성 질환을 21세기의 주요 관리 의제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25년까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25%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각 나라에도 국가 단위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및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 증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국가적 차원의 감시체계 구축 등 만성 질환 예방관리 정책·사업으로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의한 2019년 현재 사망자 수는 2000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당뇨를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가 계속해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전체), 2000, 201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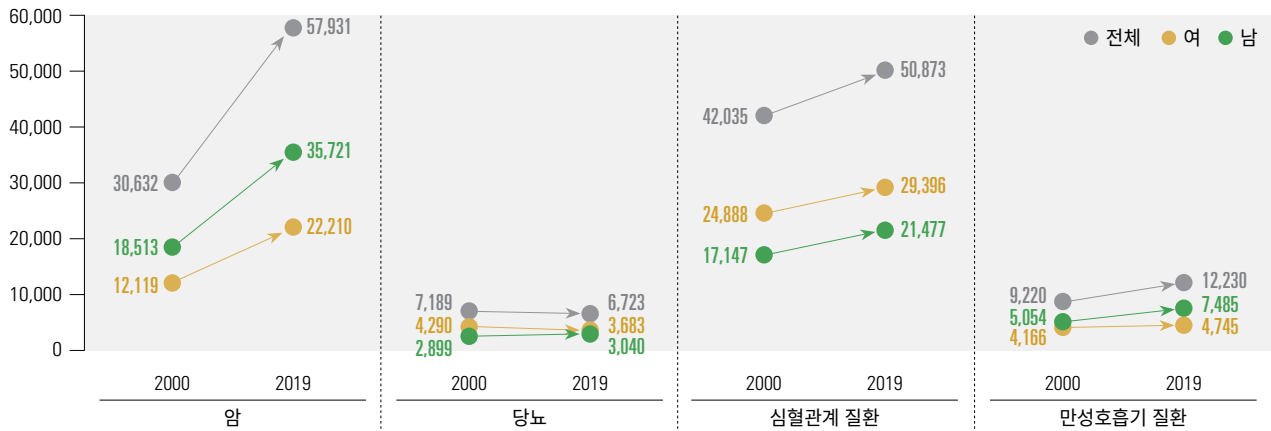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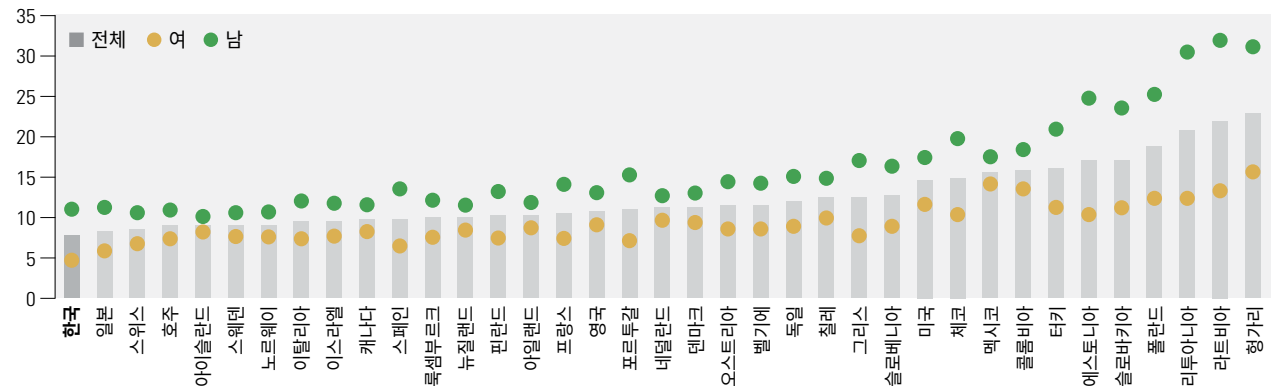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단위: %)



출처: WHO, Global Health Estimates 2016: Death by Cause, Age, Sex, by Country and by Region, 2000~2016

주 : 30~70세 사이에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로 생명표 방법(Life table methods)을 사용해 계산함

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여자의 사망자 수가 많은 반면에 암과 만성호흡기 질환에서는 남자의 사망자 수가 많았다.

한국에서 네 가지 유형의 질환으로 인한 30세 인구의 70세 이내 사망 확률은 2016년 7.8%로 나타났다. 4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확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국가로 일본은 8.4%, 스위스는 8.6%였다.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확률은 성별로 비교해보면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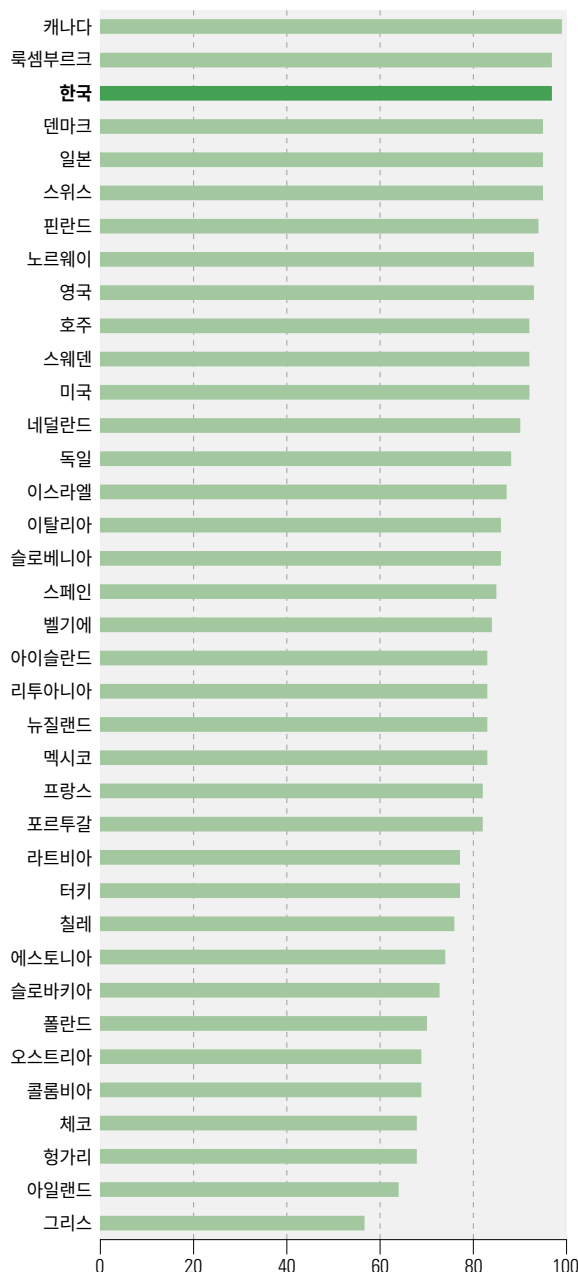
한편, 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질환 위험 요소를 고령자, 기저 질환(당뇨,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신장 질환, 암 등), 흡연으로 규정했다(WHO, 2020). 미국 및 유럽의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기저 질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했다. 한국 질병관리청도 2020년 5월 21일 0시 기준 한국 코로나19 사망자 중 기저 질환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98.5%\*였다고 보고했다. 이는 기저 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심뇌혈관 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 76.5%,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7.7%, 치매 등 정신 질환 43.9%, 만성폐쇄성폐 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23.5% 등(중복 포함)

##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 97% 달성, 세계 최상위 수준

국제보건규정(IHR)은 공중보건 위기를 예방, 감지, 평가, 신고 및 대응하기 위해 WHO 회원국이 자국의 역량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규제이며, IHR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적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감시와 대응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 지표는 회원국이 합의한

OECD 국가별 IHR 핵심역량(총점 평균), 2019 (단위: %)



출처: e-SPAR(WHO), [www.extranet.who.int/e-spar](http://www.extranet.who.int/e-spar)(2020.10.2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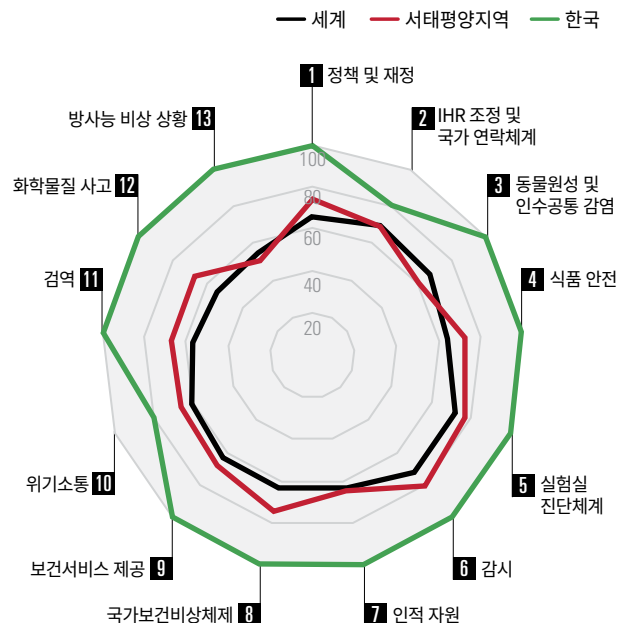
주 : IHR에서 요구하는 13개의 핵심역량에 대한 24개 세부지표로 구성했으며, 역량수준은 세부지표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세부지표는 5점 만점에 대한 평가점수의 백분율로 계산함

13개 핵심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13개 핵심역량은 ①정책 및 재정(Legislation and Financing), ②IHR 조정 및 국가 연락체계(IHR Coordination and National IHR Focal Point Functions), ③동물원성 및 인수공통 감염(Zoonotic Events and the Human-animal Interface), ④식품 안전(Food Safety), ⑤실험실 진단체계(Laboratory), ⑥감시(Surveillance), ⑦인적 자원(Human Resources), ⑧국가보건비상체제(National Health Emergency Framework), ⑨보건서비스 제공(Health Service Provision), ⑩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 ⑪검역(Point of Entry), ⑫화학물질 사고(Chemical Events), ⑬방사능 비상 상황(Radiation Emergencies)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2019년 IHR 핵심역량 평가에서 2번과 10번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총점 평균 97%)했다. 2018년도 100%를 달성한 항목이 8개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역량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수준은 같은 기간(2019년 기준) 캐나다(12개 달성, 총점 평균 99%), 일본(11개 달성, 총점 평균 95%), 영국(10개 달성, 총점 평균 93%) 등과 함께 최상위 수준이며, 세계 평균 및 WHO 기준에 따른 서태평양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높았다.

한국 IHR 핵심역량별 국제 비교, 2019 (단위: %)



출처: e-SPAR(WHO), [www.extranet.who.int/e-spar](http://www.extranet.who.int/e-spar)(2020.10.29. 인출)



# 4 QUALITY EDUCATION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나이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 2000년 1억 명에서 2015년 5700만 명으로 약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UN, 2015).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학생들의 학습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SDGs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내용의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대유행이 감염 확산을 우려한 학교 폐쇄로 이어지면서 교육시스템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따르면, 2020년 4월 23일 기준 165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및 휴학을 결정했는데, 이는 당시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 세계 등록 학생의 84.5%가 되는 약 14억 7870만 명의 교육에 차질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2020년 3월 예정이었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었다. 다행히도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부터 원격수업이 시작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했다.

그런데 원격수업 과정에서 수업 집중도 저하, 학생별 피드백 한계 등이 학습격차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0년 1학기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약 79%가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상대적으로 원격수업에 취약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0). 한국은 매년 국가 수준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추이 분석을 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읽기 및 수학 최소숙달수준 달성 학생 비율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져

만 15세 한국 학생의 읽기 및 수학영역에서의 최소숙달수준이 최근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읽기영역 최소숙달수준을 달성한 비율이 2000년 94.2%에서 2018년 84.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수학영역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은 92.8%(2000년)에서 85.0%(2018년)가 되었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0~2018년간 읽기영역에서 여학생은 7.4%p, 남학생은 11.4%p, 수학영역에서 여학생은 5.4%p, 남학생은 9.8%p 최소숙달수준 달성 비율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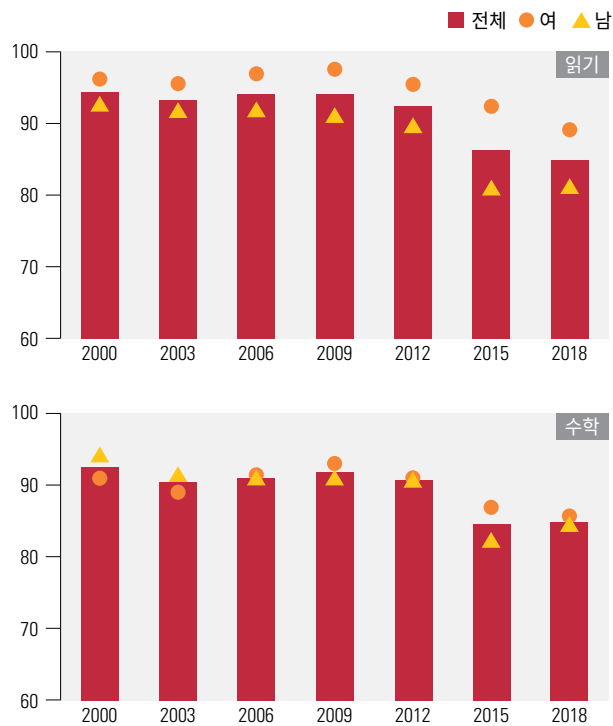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 읽기 및 수학 최소숙달수준 차이 확대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집단 대비 취약한 집단 간의 비(ratio)를 통해 집단 간 형평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읽기영역 최소숙달수준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parity index)는

만 15세 학생 읽기 및 수학 최소숙달수준 달성 비율, 2000~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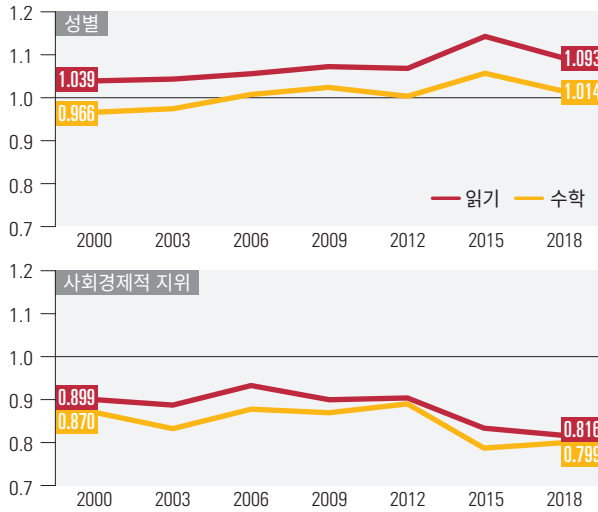


출처: OECD, PISA, 각 연도

주 : 읽기 및 수학 성취수준은 6수준으로 구분되며 2수준 이상이면 최소수준이 달성되었다고 봄. 2수준은 상황과 목적에 맞게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기본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함(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 최소숙달수준 달성 비율에 대한 형평지수, 2000~2018



출처: OECD, PISA, 각 연도

주 : 형평지수는 읽기 및 수학영역 최소숙달수준 달성 비율에 대해 남학생(분모) 대비 여학생(분자),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25% 집단 대비 하위 25% 집단 간 비로 계산함. 따라서 1보다 크면 취약집단에 우호적으로, 1보다 작으면 취약집단에 덜 우호적으로 해석함

조사 시작 이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최소숙달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2000년 1.039에서 2018년 1.093으로 균형점인 1에서 더 멀어져 차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수학영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형평지수가 1 미만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지수가 1을 초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최소숙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도 성취도가 달라졌다.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25% 집단을 기준으로 하위 25% 집단의 읽기 및 수학영역에서 최소숙달수준을 비교해본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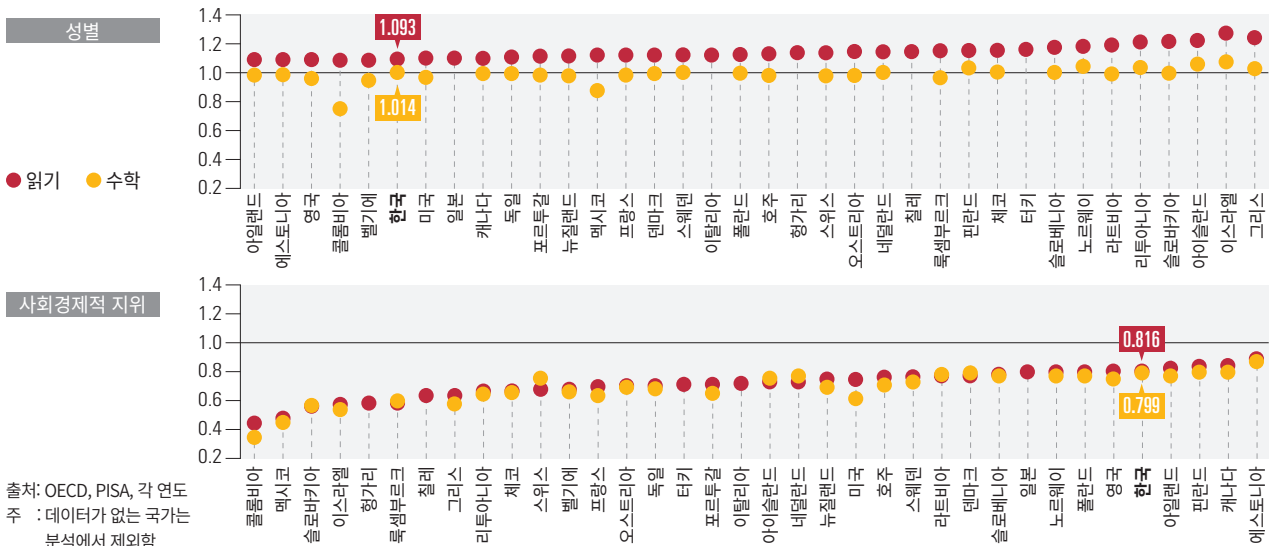
과, 읽기와 수학 두 영역 모두 지수 값이 1 미만으로 하위 25% 집단 학생의 수준이 낮았다. 게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균형점인 1에서 더 멀어져 집단 간 차이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 간 격차 확대가 더 견고해질 것이 우려된다.

OECD 국가에서도 읽기영역에서 최소숙달수준을 달성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다. 비교적 성별 차이가 큰 국가는 그리스(1.288), 이스라엘(1.288), 아이슬란드(1.235)로 나타났다. 수학영역에서는 성별 효과가 국가에 따라 혼재되어 있었는데, 형평지수가 1점인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이스라엘(1.093), 아이슬란드(1.071) 등에서는 여학생의 수준이, 콜롬비아(0.749), 멕시코(0.877) 등에서는 남학생의 수준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형평지수는 모든 국가, 모든 영역에서 1 미만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위 수준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읽기 및 수학 최소숙달수준이 높은 경향이 견고했다. 최댓값과 최솟값을 보이는 국가는 읽기영역과 수학영역 모두에 에스토니아(각각 0.895, 0.882), 콜롬비아(각각 0.440, 0.337)이며, 한국은 0.816, 0.799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군에 속했다.

### 학교 정보화 수준은 학교급별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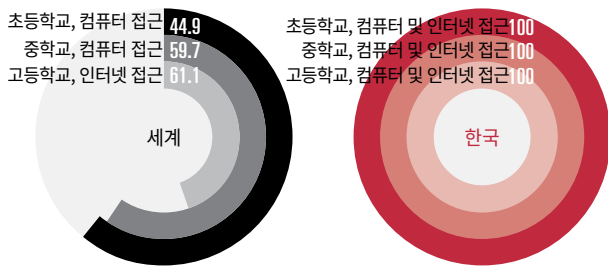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의 대안으로 온라인 기반의 원격수업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

### OECD 국가별 성별 및 사회경제적 형평지수, 2018



출처: OECD, PISA, 각 연도  
주 : 데이터가 없는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함

## 교육목적의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가능 학교 비율 (단위: %)



출처: UIS, 2015, 201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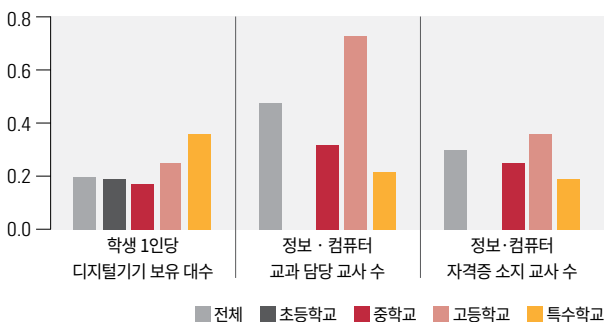
주1 : 국제교육표준분류의 초등(Primary), 전기 중등(Lower Secondary), 후기 중등(Upper Secondary)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응해 제시함

주2 : 세계 데이터는 초등학교 2016년, 중학교 2015년, 고등학교 2017년, 한국은 일괄적으로 2016년 데이터임

기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교육목적의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이 100% 가능한 상황(2016년 기준)이다. 대다수 OECD 국가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육목적의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 시설이 확보된 학교의 비율은 높지 않다. 컴퓨터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초등학교 44.9%(2016년), 중학교 59.7%(2015년)였으며, 인터넷의 경우 61.1%의 고등학교(2017년)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다.

한국의 학교 정보화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나, 학교급 및 정보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20년 기준 학생 1인당 디지털기기 보유 대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0.20대인 가운데, 고등학교가 0.25개였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순이다. 정보 및 컴퓨터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수 및 해당 교사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각각 학교당 평균 0.48명과 0.3명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관련 담당 교사 및 자격증 소지 교사가 가장 많았고, 특수학교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교육 정보화 현황, 2020 (단위: 개, 명)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년 초·중·고등학교 교육정보화 실태 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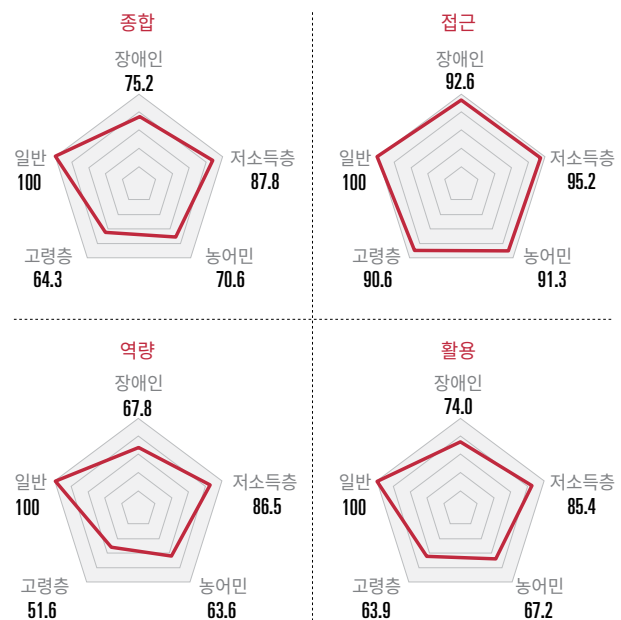
주 : 정보·컴퓨터 교과 담당 교사 수에 초등학교는 해당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수준 낮아

한국의 정보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등의 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75.2%, 저소득층은 87.8%, 농어민은 70.6%, 고령층은 64.3%였다.

정보화 수준을 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접근 차원은 취약계층 모두 일반 국민 대비 90%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기기 이용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이나 인터넷 활용수준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은 역량수준 51.6%, 활용수준 63.9%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되고 있는 원격수업이 학생의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 등을 통해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화 역량 및 활용수준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 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19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 2019

주 : 정보화 접근은 유무선 정보 기기 보유 여부 및 인터넷 상시접속 가능 여부로, 정보화 역량은 컴퓨터 이용 능력과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으로, 정보화 활용은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로 측정함



# 5 GENDER EQUALITY





#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성평등 역사에서 변곡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와 같은 표현이 확립되었으며, 사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여성의 권리 향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돌봄과 같은 필수 노동 최전선에 여성이 다수 포진해 있는 등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모습이 여전하다는 것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해 정치, 사회, 경제, 일상생활 영역에서 성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SDGs에서 독립적인 목표로 둔 이유다.

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상점 및 음식점 휴업 등은 가족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 더 많은 책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아태 지역 내 여성의 63%, 남성의 59%에서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증가했다(UNWOMEN, 2020a). 또한, 가정이라는 제한된 생활공간 내에서 건강, 경제형편, 안전 등에 대한 걱정이 긴장상태를 유발하고 이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팬데믹의 그림자(shadow pandemic)’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UNWOMEN, 2020b).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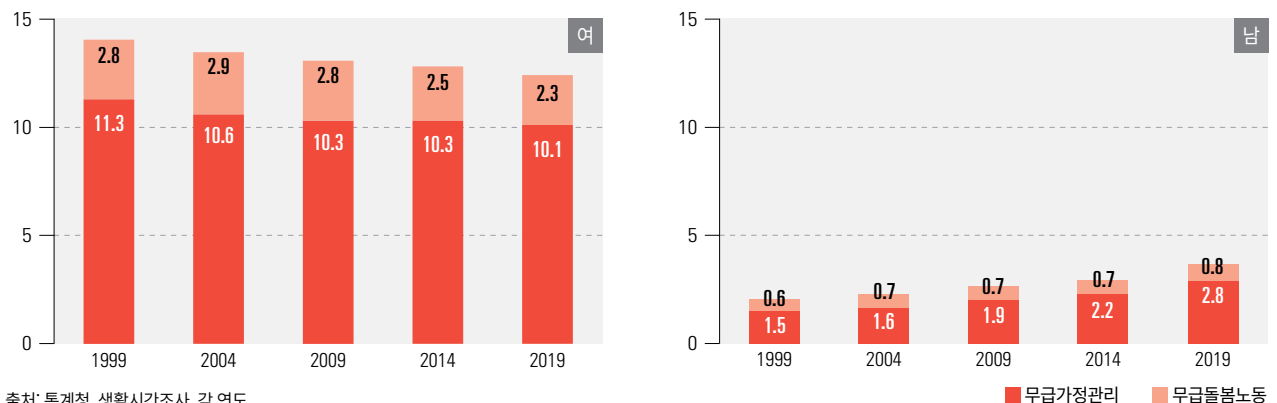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한국에서는 여성의 권리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구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평가제도,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추천 50% 이상 할당제도 등이 그러하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성평등이 달성되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 감소경향이 코로나19로 2020년 반전 예상

지난 20년간 성별에 따른 무급가사노동시간은 여성에서는 감소, 남성에서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하루 24시간 중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9년 여성은 14.2%(204분)에서 2019년 12.4%(178분)로 1.8%p(26분) 줄었고, 같은 기

간 남성은 2.0%(29분)에서 3.6%(52분)로 1.6%p(23분)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 간 무급가사노동시간 차이가 1999년 175분에서 2019년 126분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하루 2시간가량 무급가사노동을 더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무급가사노동시간 또한 늘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휴원 및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증가했는데, 돌봄의 주체가 여성인 경

10세 이상 인구의 무급가사노동시간 비율, 1999~201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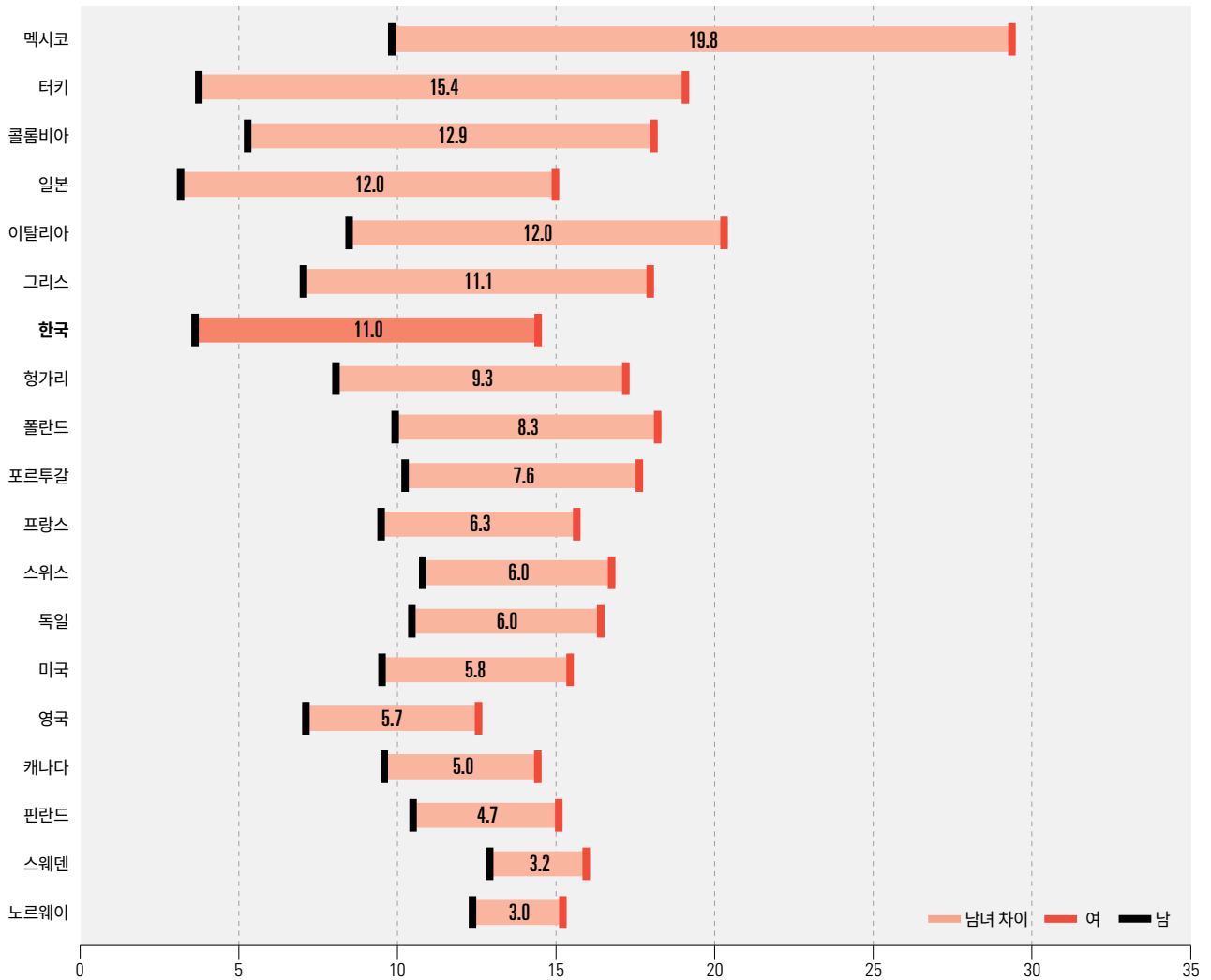
주1: 무급가사노동시간은 무급가정관리 및 무급돌봄노동시간을 합한 시간임

주2: 시간 비율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 수치 마지막 단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OECD 국가별 15세 이상 인구의 무급가사노동시간 비율

(단위: %)



출처: UNSD, 국가별 생활시간조사

주1 : 데이터 없는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함. 국가별 조사연도[핀란드·프랑스·헝가리 (2010), 노르웨이·스웨덴(2011), 독일·폴란드(2013), 그리스·이탈리아·멕시코·한국(2014), 포르투갈·터키·영국(2015), 캐나다·일본·스위스(2016), 콜롬비아(2017), 미국(2018)]

주2 : 한국 데이터는 무급가사노동 관련 이동시간이 보정된 데이터이며, 2019년 데이터는 UNSD에서 아직 취합하지 않은 상황임

우가 우세한 것으로 여러 비공식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급가사노동시간 중 돌봄노동시간 또한 1999년 2.8%(40분)에서 2019년 2.3%(33분)로 감소해왔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통계청은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320조 원가량이 무급가정관리와 무급돌봄노동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245조 원으로 남성 76조 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경향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OECD 국가의 생활시

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 비율이 남성에 비해 일관되게 더 많았다.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한국(11.0%p)보다 큰 국가로는 멕시코(19.8%p), 터키(15.4%p), 콜롬비아(12.9%p), 일본과 이탈리아(12.0%p), 그리스(11.1%p)가 있었다. 반면 그 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로는 노르웨이(3.0%p), 스웨덴(3.2%p) 등이 포함되었다.

### 한국에서 여성의원 및 여성 관리자는 10명 중 2~3명 정도

2020년 1월 기준, 한국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



출처: 국회의원은 IPU, 지방의원은 유엔지역위원회와 UNWOMEN 취합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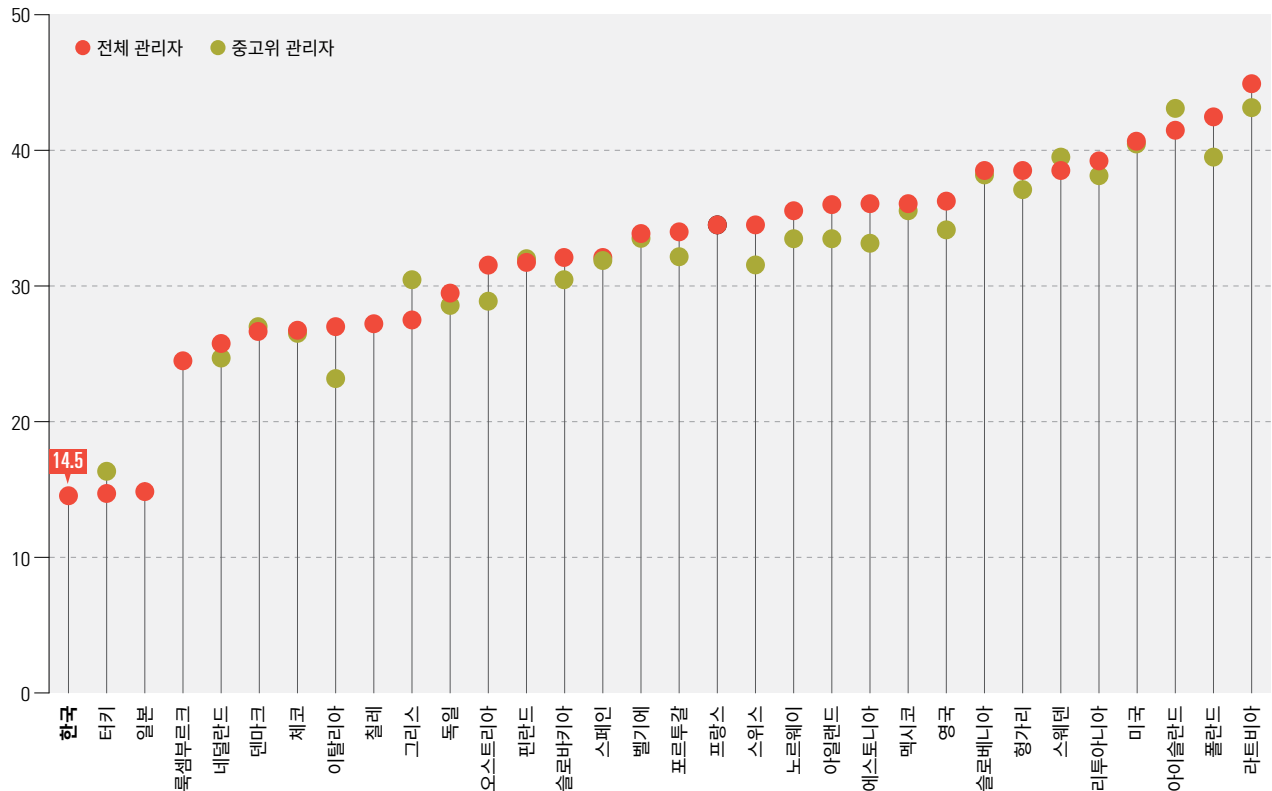
주 : 국회의원은 2020년 1월, 지방의원은 2018년 기준이며, 지방의원인 경우 오스트리아·영국은 2019년, 체코·에스토니아·일본·폴란드는 2017년, 그리스·포르투갈·미국은 데이터 없음

율은 17.3%였다. OECD 국가 중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9.9%), 헝가리(12.1%)이며, 다음으로 한국이다.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여성의원원은 57명으로 전체 300명 중 19%로 약간 증가했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이다. 지방의회 의원 중 여성 비율은 28.3%(2018년 기준)로 여성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전체 의석의 절반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각각 48.2%, 45.0%)와 스웨덴(각각 47.0%, 43.8%)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가 채 안 된다. 한국에서 전

체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해 2018년 14.5%에서 2020년 15.7%가 되었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상황이다. 2018년 기준으로 터키(14.8%)와 일본(14.9%)이 한국과 유사한 정도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20%를 넘는 가운데 라트비아(44.9%), 폴란드(42.5%), 아이슬란드(41.5%), 미국(40.7%)은 40%를 상회했다. 그러나 분석대상 국가 모두에서 관리자 중 여성이 절반(50%)에 근접하거나 넘는 국가는 없었다.

중고위 관리자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여성 중고위 관리자 비율은



출처: UNSD, 국가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주 : 데이터 없는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함. 한국은 전체 관리자 중 여성 비율 데이터만 있음

23.2%로 관리자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7.0%에 비해 3.8%p가량 더 적었다. 다수의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터키만이 여성 중고위 관리자 비율이 전체 여성 관리자 비율보다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 친밀한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증가

범죄는 친척, 친구, 애인, 직장동료 및 상사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피의자원표를 기준으로 2010~2018년에, 아는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법범의 수는 연평균 약 24만 명(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거친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2010년 2만 3261명(2.5%)에서 2018년 4만 4693명(4.6%)로 약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범죄는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범죄는 동거친족보다는 애인 사

이에서, 강력폭력범죄는 애인보다는 동거친족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벌어졌다. 특히, 동거친족 간에 범죄를 저지른 강력폭력범죄자 수는 2014년 1만 2857명에서 2015년에는 2만 5253명으로 약 2배 가깝게 증가했다. 2014년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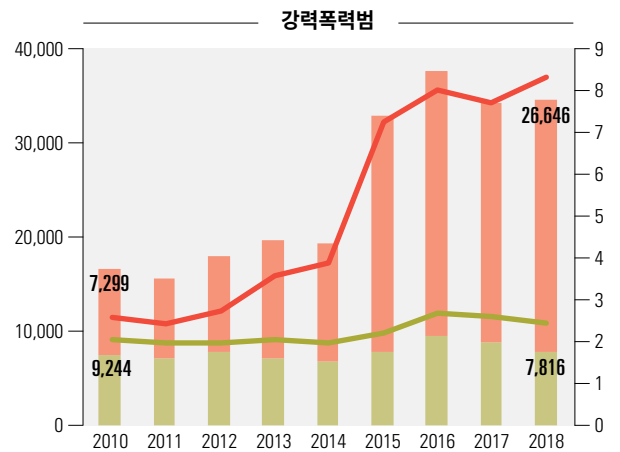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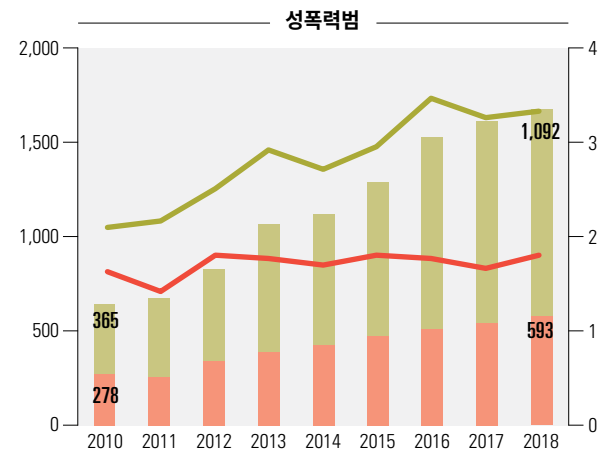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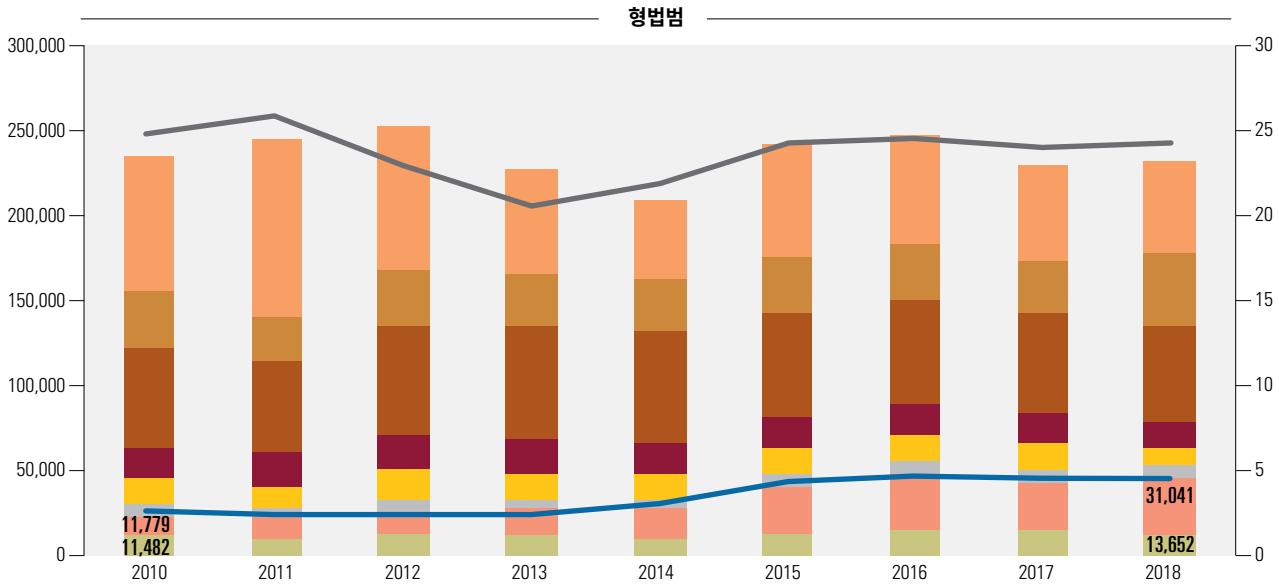
그러나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만 포착된 것으로, 가정 내 배우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숨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은 10.3%, 남성은 6.2%였다. 두 집단 모두 피해율은 2016년도(12.1%, 8.6%)에 비해 감소했으나, 성별 피해율격차(여성-남성)는 2016년 3.5%p에서 2019년 4.1%p로 증가했다. 여성의 피해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은 감소했으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는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현황, 2010~2018

(단위: 명, %)

— 아는 관계 전체 비율 — 친밀한 관계 비율 — 애인 비율 — 동거친족 비율 — 애인 — 동거친족 — 기타친족 — 친구 — 이웃 — 업무상관계 — 지인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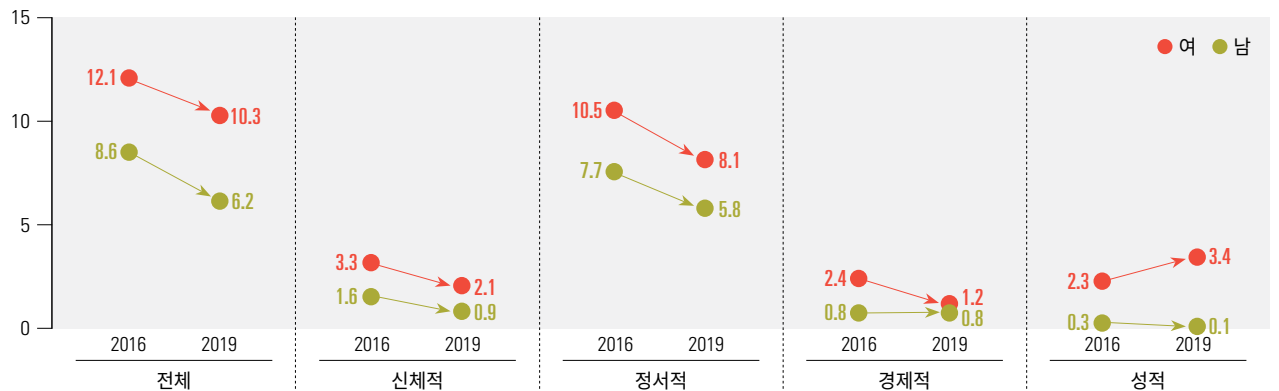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주1: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피의자원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관계 유형은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으로 분류하며, 여기에서 아는 관계는 국가, 공무원, 타인, 미상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자-피고용자-직장동료-거래상대방은 업무상관계로 재분류함

주2: 대검찰청은 형법 및 특별법에 근거해 통계를 수집한 후 자체적으로 죄명을 설계해 통계를 공표함. 형법범죄는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성폭력범 포함), 강력폭력범죄(폭행 포함) 등으로 구분됨. 한편, 성폭력범죄는 2013년까지는 강간으로 분류함. 자세한 설명은 대검찰청(2019) 참조

## 지난 1년간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2016, 2019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보고서 2019

주: 조사 시점마다 피해유형 정의에 일부 차이가 있어 2016년과 2019년 동일항목에 대한 폭력 피해 경험률만 계산해 비교함



#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최근 발현하는 각종 감염병의 문제는 물과 위생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끗한 물에 손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규칙만 잘 지키더라도 감염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충분하고 양호한 수질의 물 공급이 부족하고 분뇨처리와 같은 기초적인 위생시설이 부족해 보건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유엔의 2020 SDGs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인구의 비율이 2000년 61%에서 2017년 71%까지 늘었고 안전한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28%에서 45%로 상승했다. 그러나 42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여전히 열악한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0억 명은 기초 위생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 특히 2017년 기준 비누를 사용할 수 있는 손씻기 시설이 구비된 주택에서 사는 인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는 25%, 최저개발국(LDC)의 경우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초 위생시설의 보급률이 100%에 가깝고, 상하수도 보급률도 90%가 넘고 있어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초 위생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어 물을 자원의 측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지를 통합 관리하는 장기적인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인간 활동의 위생뿐만 아니라 농업(SDGs 2), 산업(SDGs 8, 12), 에너지(SDGs 7), 도시(SDGs 11), 환경(SDGs 13~15) 이슈와도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처음 채택된 이 개념이 SDGs 6번 목표에 반영된 이유이기도 하다.

## 자원의 측면에서 ‘통합수자원관리’ 중요성

SDGs 6.5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관리를 이행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인 6.5.1의 통합수자원관리(IWRM)란 ‘핵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평한 방식으로 경제 및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 토지 관련 자원의 협력적 개발 및 관리를 증진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수자원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즉 물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환경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다. 그리고 통합수자원관리의 이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적 모니터링과 보고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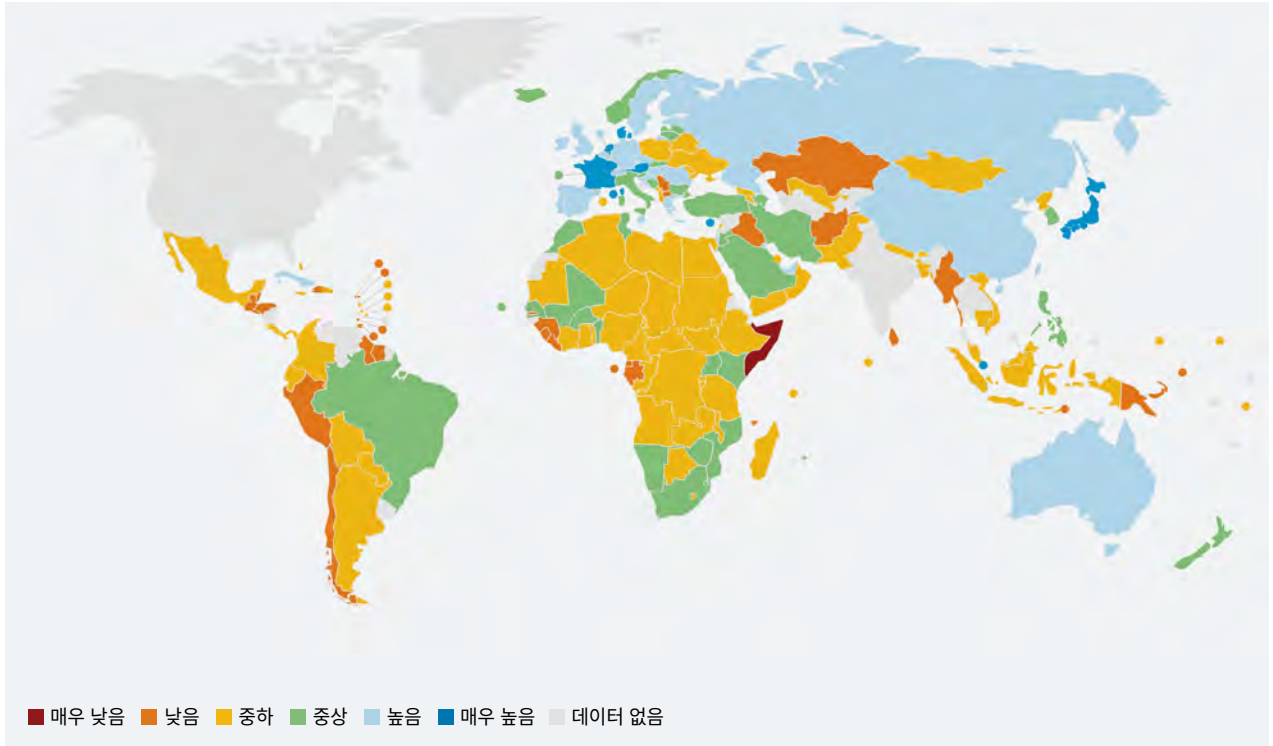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의 통합수자원관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IWRM 지표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IWRM 지표는 크게 네 가지 세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행 환경(enabling environment), 시행 기관(institutions and participation), 관리 도구(management

instrument), 재정(financing) 등이다. 시행 환경은 통합수자원관리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법률, 계획 등의 구비 여부를 의미하며, 시행 기관은 통합수자원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특히 공공, 민간,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성인지적 방향성 등을 의미한다. 관리 도구는 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도구와 관리 방법, 활동들을 의미하며, 재정은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이다.

UNEP는 각국의 IWRM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며, 설문문항은 전국(national), 지역(sub-national) 수준에서의 현황 및 유역 및 대수층, 초국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별로 수집된 응답 자료는 관련 부처, 시민사회 등의 투명한 검토를 거쳐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각 설문에 대한 응답은 지표 0(아직 시행되지 않음)에서 100(충분히 시행됨) 사이의 점수로 환산된다. 이 지표는 2년에 한 번씩 각국을 통해 조사된다.



## 국가별 IWRM 이행수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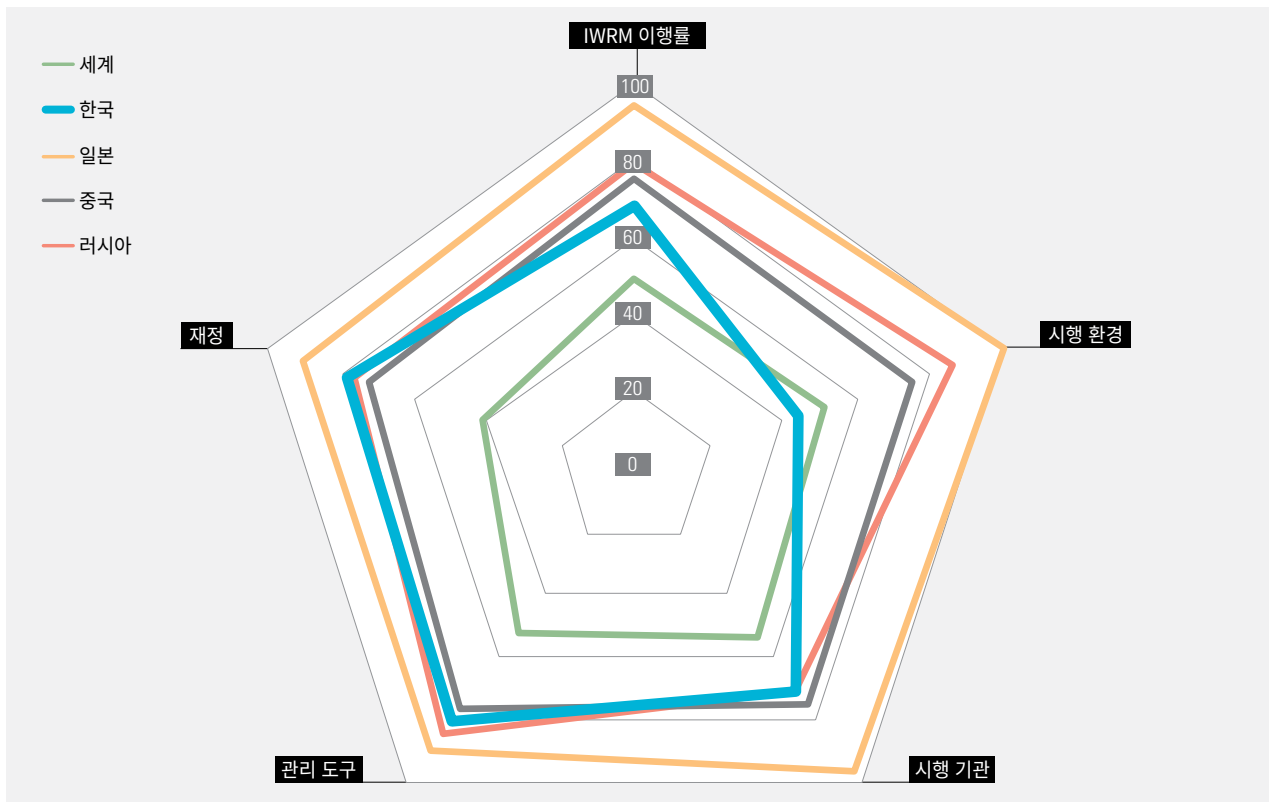


출처: UNEP(20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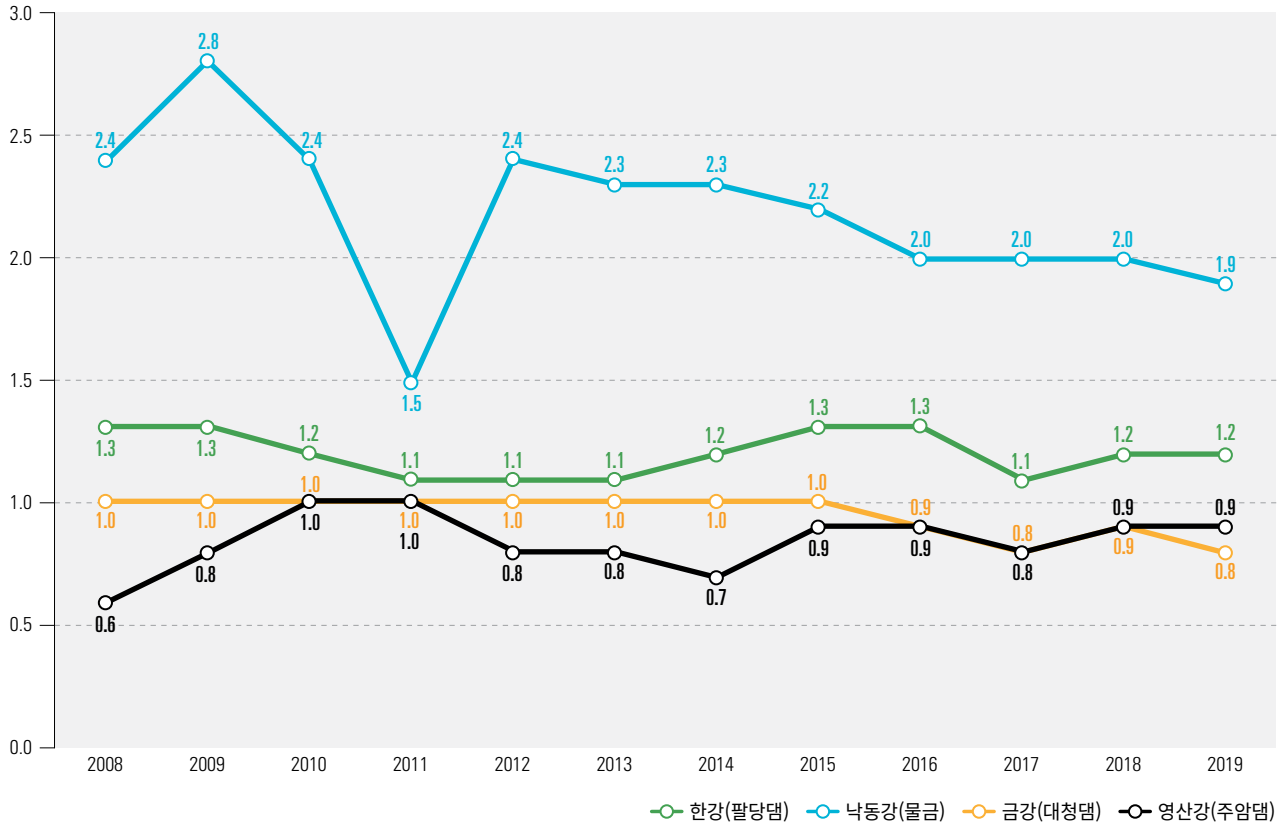
42

## 한국 IWRM 부문별 이행률 및 주요국 비교, 2017

(단위: %)



출처: sdg6data.org/indicator/6.5.1(2020.11.20. 인출)



출처: 환경부, 전국수질측정자료(국가주요지표, index.go.kr, 2020.11.25. 인출)

주1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BOD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봄

주2 : 4대강별 측정 위치는 수돗물 취수구역임

## 한국은 중상(Medium-High) 수준의 IWRM 이행을 보여

2017년 실시된 기초조사(baseline report)에는 172개 국가가 참여했으며, 전 세계 통합물관리의 평균 이행률은 49%(100점 기준으로 49점)를 보였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100% 이행률을 보였으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등은 90% 이상의 이행률을 보였다. 한국은 68%로 중상(Medium-High)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OECD 국가 기준으로는 22위이며 전 세계에서는 36위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의 이행 점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관리 도구 부문에서 가장 높은 80%를 받았으며, 재정 부문에서 78%, 시행 기관 부문에서 70%를 받았다. 반면 시행 환경에서 44%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 통합물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물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 4대강 수질 BOD 기준 ‘ 좋음 ’ 수준 유지

한 국가가 보유한 전체 수계(bodies of water) 중에 좋은 수질의 수계를 파악하는 것은 물 관련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2017년 UNEP가 48개국을 대상으로 수질이 좋은 수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65%가 나왔으며, 한국은 87.3%로 조사 대상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한국 4대강 하천수를 기준으로 하천의 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살펴보면, 4대강의 수질은 2mg/l 이하로 대체로 ‘ 좋음 ’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4대강의 BOD 추이를 보면 한강은 1.1~1.3mg/l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강도 0.8~1.0mg/l으로 비교적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영산강의 경우 2008년 0.6mg/l에서 2019년 0.9mg/l로 높아졌으며, 낙동강은 같은 기간 2.4mg/l에서 1.9mg/l로 개선되었으나 다른 강에 비하면 여전히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에너지는 인간 생활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왔다. 기본적으로는 추위를 막고 음식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부터 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화석연료까지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해왔다. 그러나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초래했고 여전히 많은 국가의 빈곤층은 전기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SDGs 7번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 보장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교류가 줄어들자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봉쇄와 격리가 장기화되면서 이동 수단 사용이 감소한 데다 상당수의 산업시설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원유는 매일 1억 배럴 수준이었으나, 현재 원유 소비는 종전 대비 29% 감소한 7100만 배럴 수준이다. 이처럼 화석연료 소비가 서서히 경직돼 가는 동안,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소비자가 사는 지역, 또는 국가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화석연료처럼 먼 거리를 오가는 연료 자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코로나19 이후 여러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수요만이 전년(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가량 증가해 유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맹미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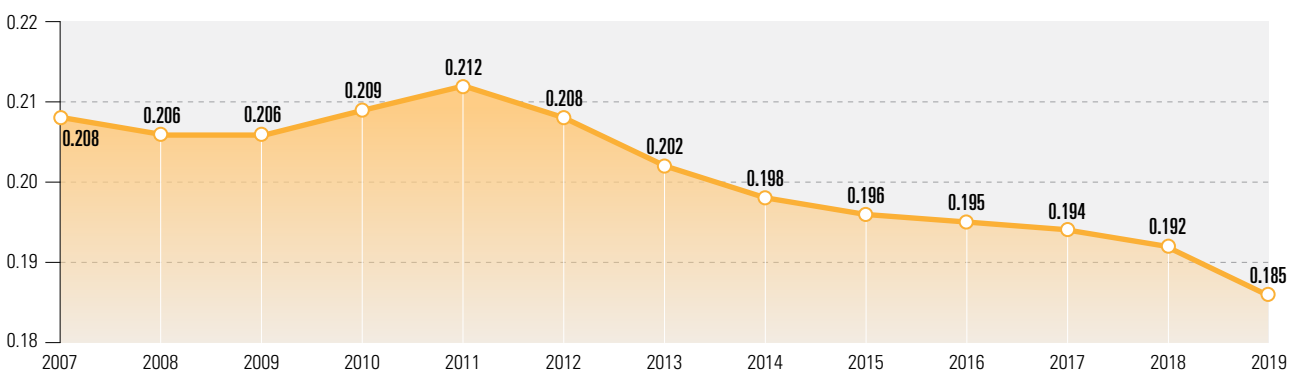
## 에너지 효율성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개선

에너지 집약도는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생산에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이는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국내총생산(GDP)당 1차에너지\* 소비량이 얼마 정도인지로 측정되며, 한 국가의 산업구조, 부가가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수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에너지 효율성이 높을수록, 국민경제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

중이 작을수록, 같은 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에너지 집약도가 낮아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는 2019년 GDP 단위당 0.185toe로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추정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에너지 집약도, 2007~2019

(단위: toe/GDP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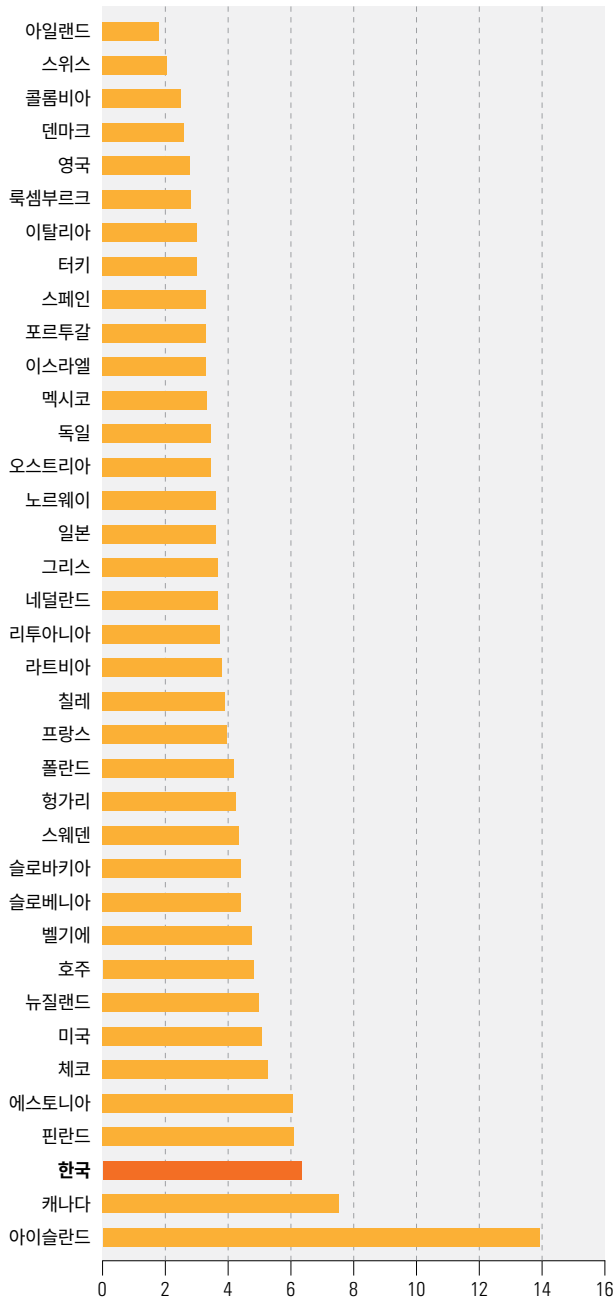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20

\* 생산, 수출입 및 재고 증감에 의해 국내 공급된 에너지이며, 타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와 산업, 수송, 가정, 상업용으로 소비되는 최종에너지의 합으로 계산함.  
현행 국가에너지밸런스에서는 원유의 투입과 석유 제품의 생산에 해당하는 석유정제를 전환통계로 보지 않고, 대신 생산된 석유 제품을 1차에너지 수입으로 간주해 작성함



OECD 국가별 에너지 집약도, 2017

(단위: MJ/USD)



출처: IEA(unstats.un.org/unsd/energystats/data, 2020.12.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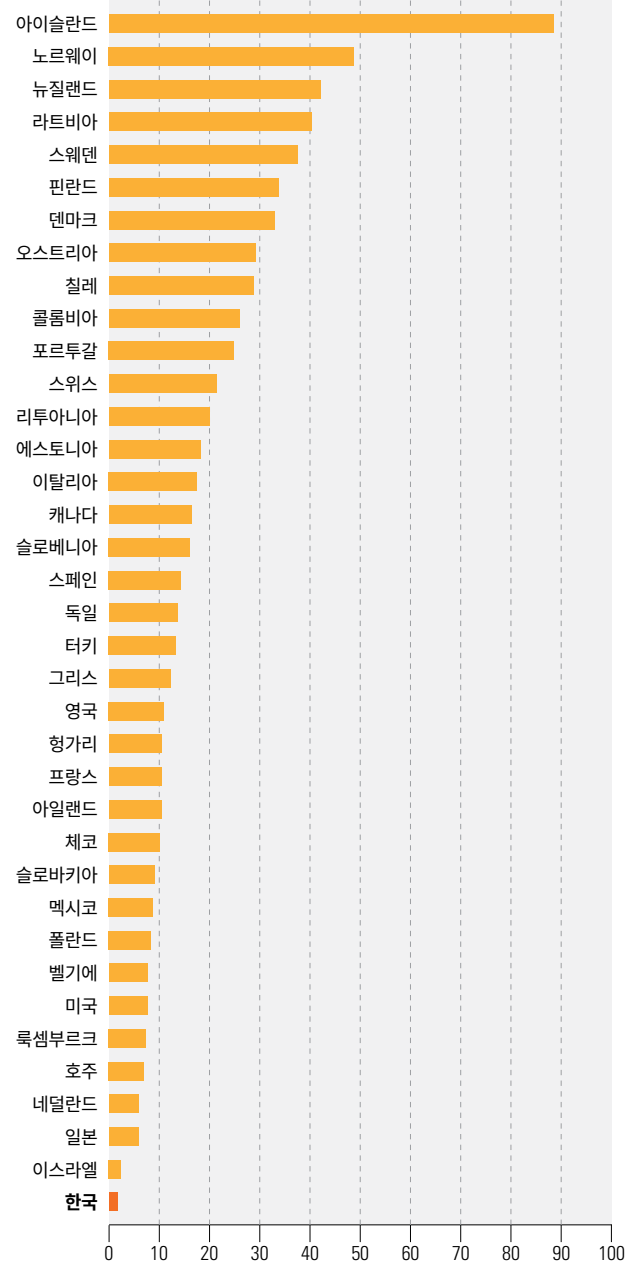
주 : MJ/USD는 USD 실질 PPP GDP당 Megajoules를 의미함

###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 증가

재생에너지의 이용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1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가 8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개 국가가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며,

OECD 국가별 1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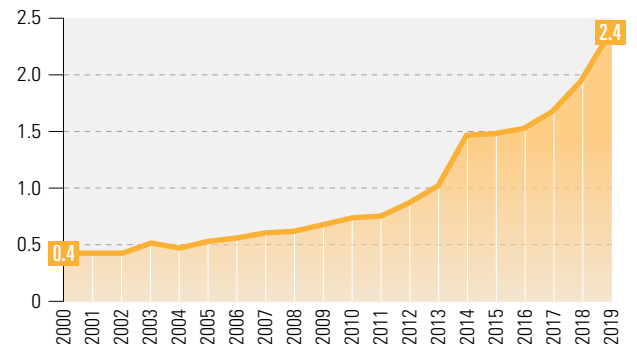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iLibrary World energy balances(2020.12.18. 인출)

1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00~2019

(단위: %)



출처: OECD iLibrary World energy balances(2020.12.18. 인출)

2019년에는 2.4%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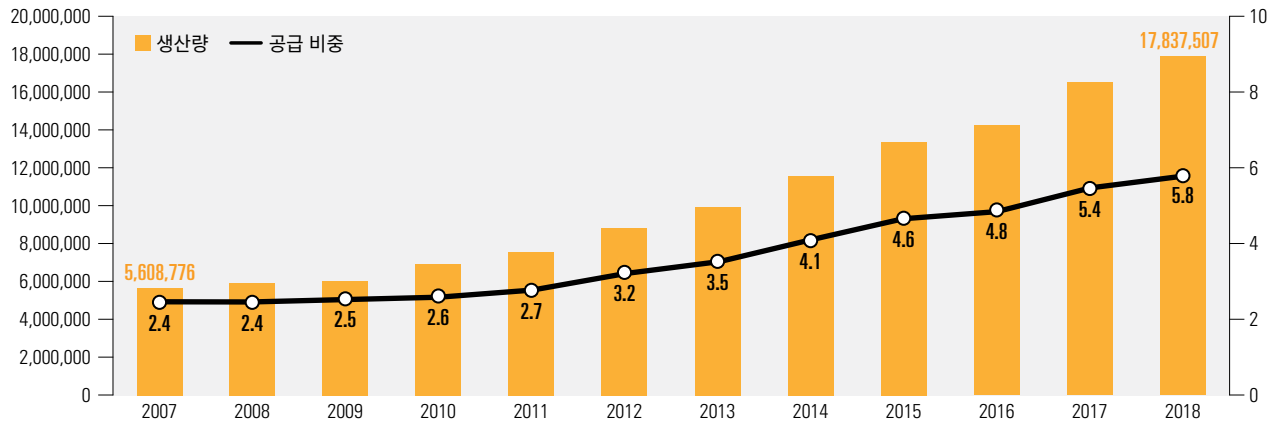
한국은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07년 560만 8776toe에서 2010년 685만 6284toe, 2018년 1783만 7507toe으로 2010년은 2007년의 1.2배, 2018년은 2007년의 3.2배로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 결과 1차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

하는 비중도 2007년 2.4%, 2010년 2.6%, 2018년 5.8%가 되었다.

신·재생에너지를 구성하는 에너지원별로 보면 2018년 기준 폐기물 50.9%, 바이오 24.9%, 태양광 11.1%, 수력 4.0%, 풍력 2.9%, 연료전지 2.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폐기물, 바이오, 태양광에너지 공급량의 증가 속도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도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 비중, 2007~2018

(단위: to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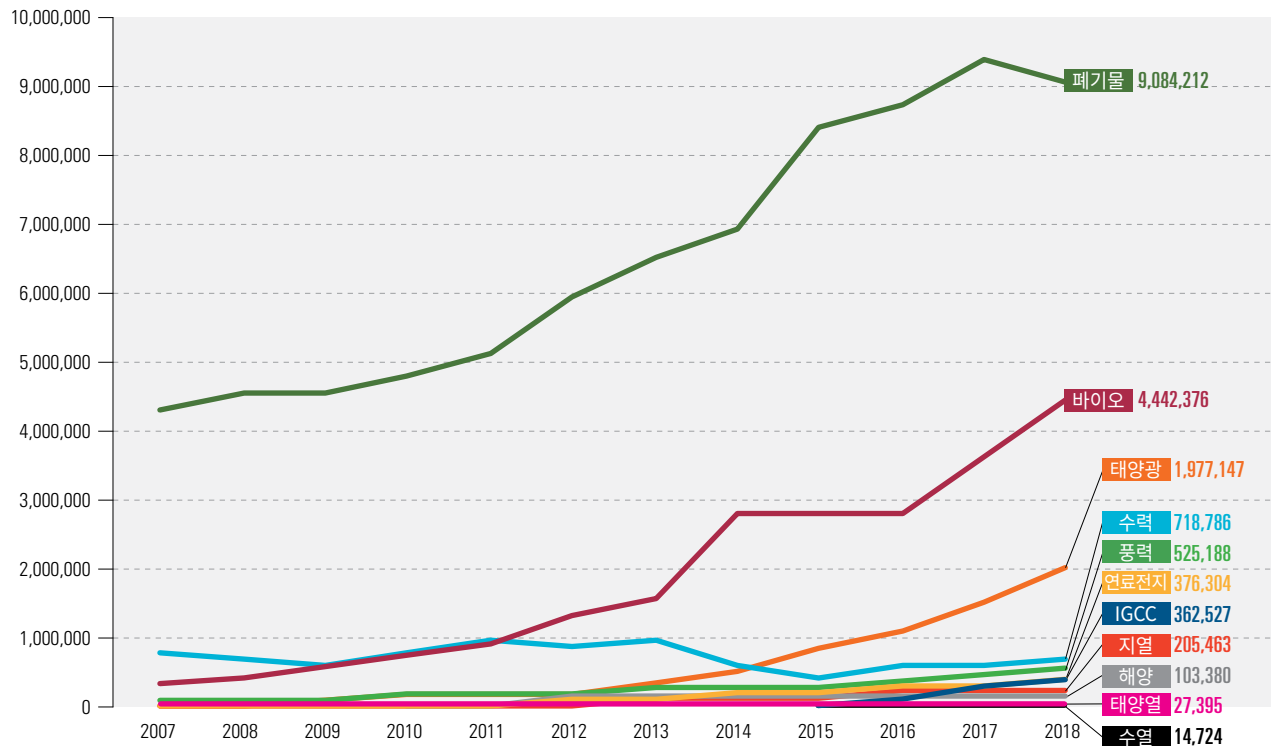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연도

주 :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고,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해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칭함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007~2018

(단위: to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연도

주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복합발전)



#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s 8번 목표는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자국민들이 그들의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적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을 지향한다. 사회·환경적인 발전 요소들도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목표는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 부문의 취약계층, 즉 아동, 여성,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통한 산업의 다변화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아동 노동의 근절, 이주 근로자의 보호 등을 통해 생산적 고용 환경 조성, 청년 실업률 감소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세부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은 비대면 중심의 업종들은 빠르게 회복되거나 오히려 기회를 맞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비정규직, 여성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과거보다 경제력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약 556만여 명으로 전년 8월(약 566만 명)과 비교했을 때보다 약 10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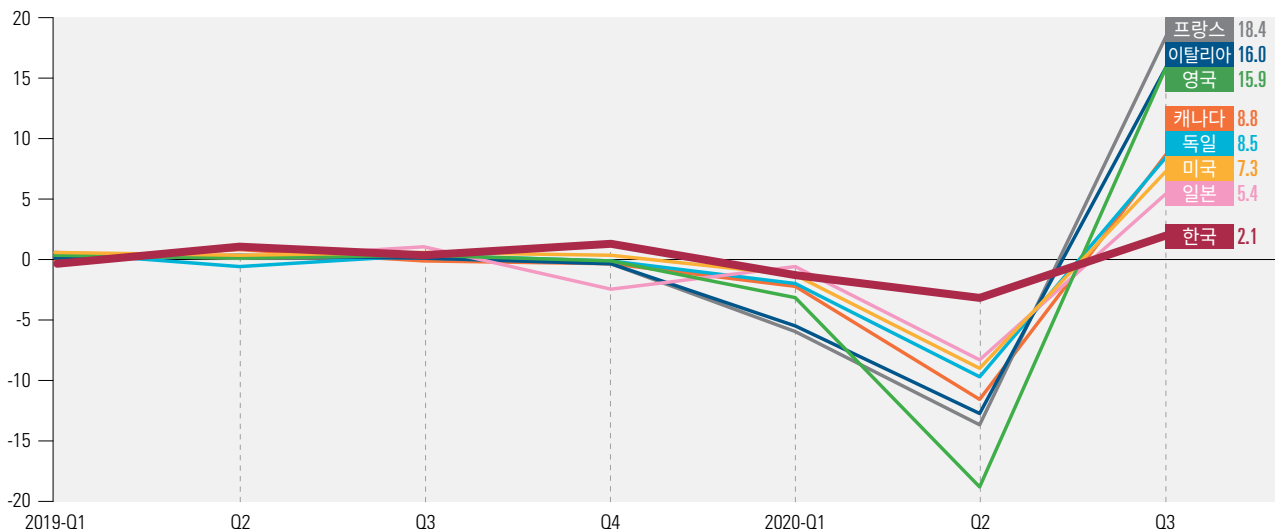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2020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3분기 소폭 반등 모습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 한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1분기 -1.4%, 2분기 -3.2%로,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성장하는 모습이었다. 2020년 1분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 서비스 부분의 소비가 크게 감소했

고, 2020년 2분기에는 각국 봉쇄에 따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3분기 성장률은 2.1%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계속되는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와 함께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호조를 보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OECD 모든 국가에서 일관적인 현상이었다.

OECD 국가별 1인당 실질GDP 분기별 성장률, 2019~2020

(단위: %)



출처: OECD(<http://stats.oecd.org>, 2021.02.0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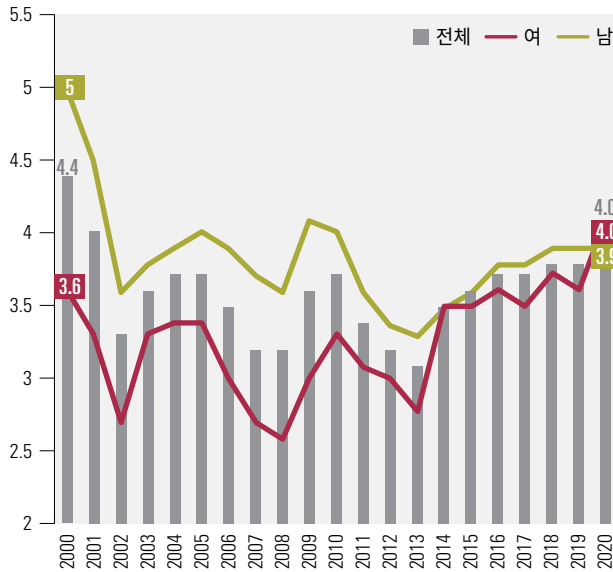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여자 실업률 남자에 비해 높아져

한국의 실업률은 2000년 4.4%, 2001년 4.0%를 기록한 후 2019년까지 3%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실업률이 다시 4.0%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0~2019년 동안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의 실업률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으나, 2020년에는 여자의 실업률(4.0%)이 남자의 실업률(3.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실업률, 2000~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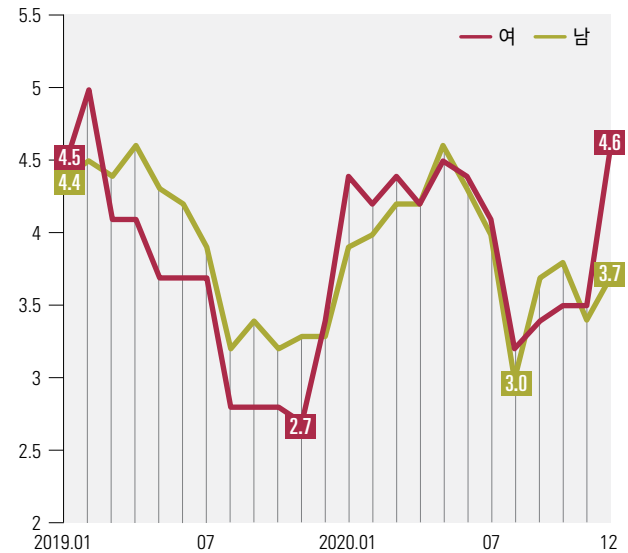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019년과 2020년 월별 실업률을 통해 남녀 간 비교를 세부적으로 해보았다. 2019년에는 여자의 실업률이 높았던 달이 1월, 2월, 12월 세 달이었으나, 2020년에는 남자의 실업률이 높았던 달이 5월, 9월, 10월 세 달이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여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한편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

월별 실업률,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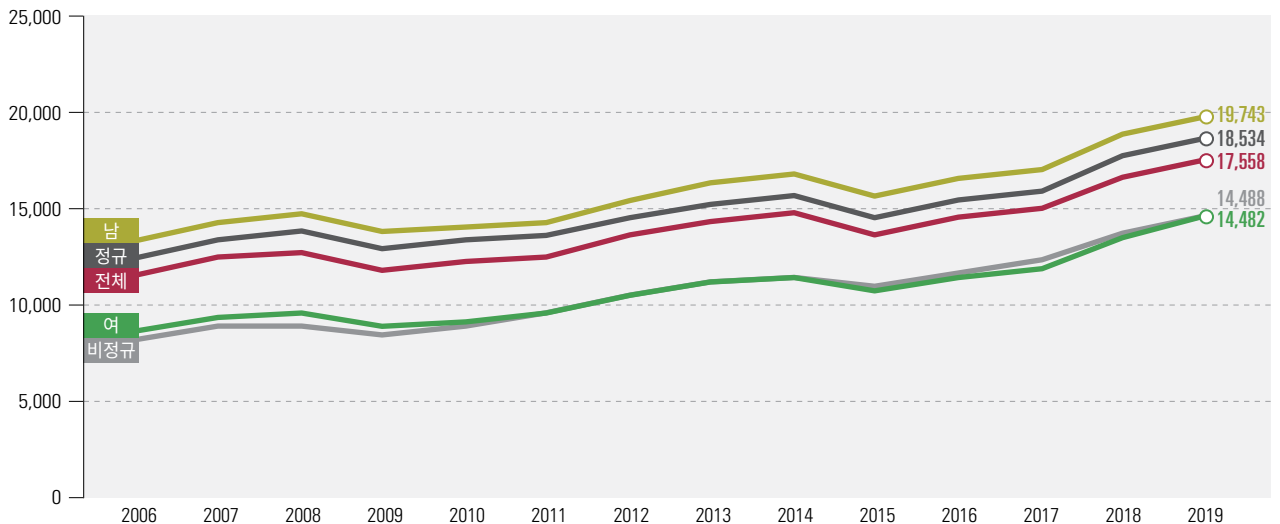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고용동향 2020년 12월(원계열 수치)

근로자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 2006~2019

(단위: 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9

주 : 해당 데이터는 평균 시간당 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통계청, 2015=100)로 나누어 실질화한 데이터임



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실질 기준)은 2019년 1만 7558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 1만 1974원에 비해 5584원 상승했다. 성별 및 정규직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이 2019년 1만 9743원, 여자는 1만 4482원으로 평균적으로 남자가 5261원 더 높고, 비정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1만 8534원)에 비해 시간당 4046원 낮은 1만 4488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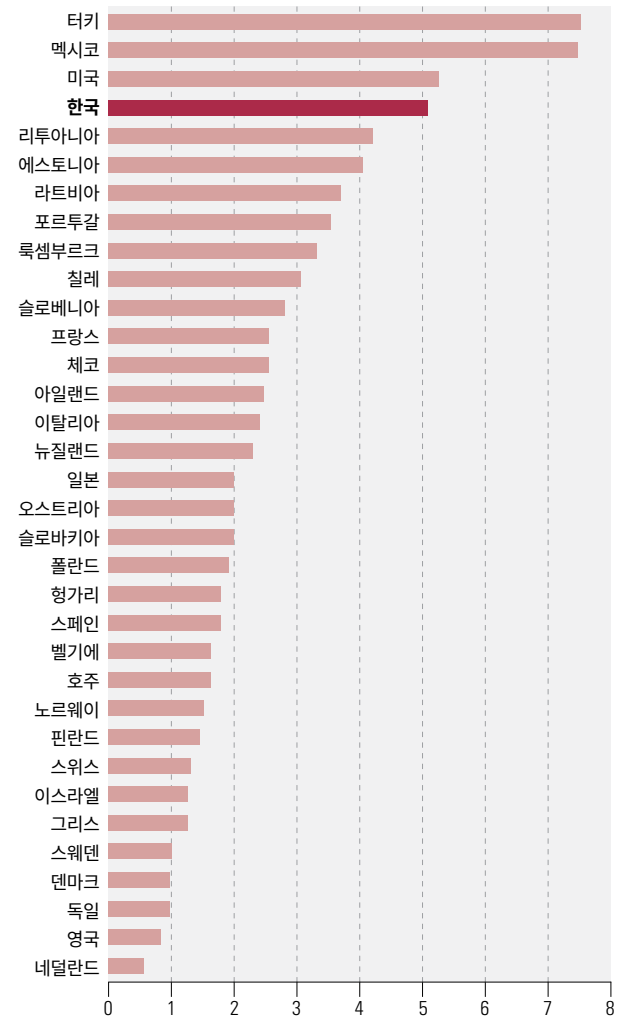
### 안정적 근로 환경 증진

2019년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10만 2305명)에 비해 6937명(6.8%) 증가해 10만 924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2018년(2142명)에 비해 122명(-5.7%) 감소해 2020명이었다. 사망 유형은 사고에 의한 경우와 질병에 의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질병 사망자의 경우도 2019년에 1165명으로 전년(1171명)에 비해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산업재해자 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높은 편이었다. 가장 최근 시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5.09명(2018년)으로 OECD 국가 중에 터키(7.52명, 2016년), 멕시코(7.46명, 2017년), 미국(5.24명, 2016년) 다음으로 4번째였다.

OECD 국가별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사망자 수, 2015~2018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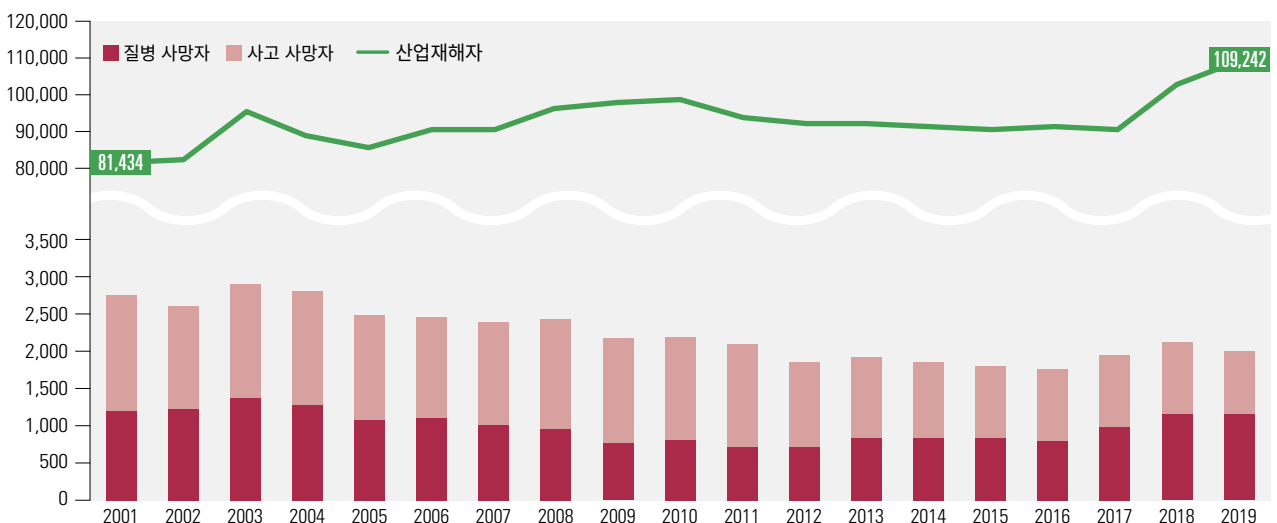


출처: ILO, <http://ilostat.ilo.org>

주 : 기준시점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2016년은 그리스, 리투아니아, 미국,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터키, 헝가리, 2017년은 멕시코, 호주, 2018년은 이스라엘, 일본, 칠레, 한국이며 나머지 국가는 2015년 기준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01~2019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52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SDGs 9번 목표는 산업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과학·기술·혁신의 적용을 위한 기술과 교육 투자, 이를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확보를 지향한다. 이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2013년 채택한 리마선언(Lima Declaration)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ISID)’ 목표에 기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조업의 성장세는 이전부터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주요 강대국 간 무역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산업, 숙박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등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택근무, 직장 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및 쇼핑, 원격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 역시 성장 산업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 기존 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찾아내는 것이 회복의 관건이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포용 정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및 화물 운송량 급감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중 하나는 항공운송산업이다. 국내 및 국가 간 이동제한조치로 세계적으로 항공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항공사들도 운항을 중단하면서 항공교통량이 급감했다. 한국의 항공 여객 운송량은 2020년 3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5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월에는 여객 운송량이 80.3% 급감했다. 화물 운송량 역시 하락률에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전년동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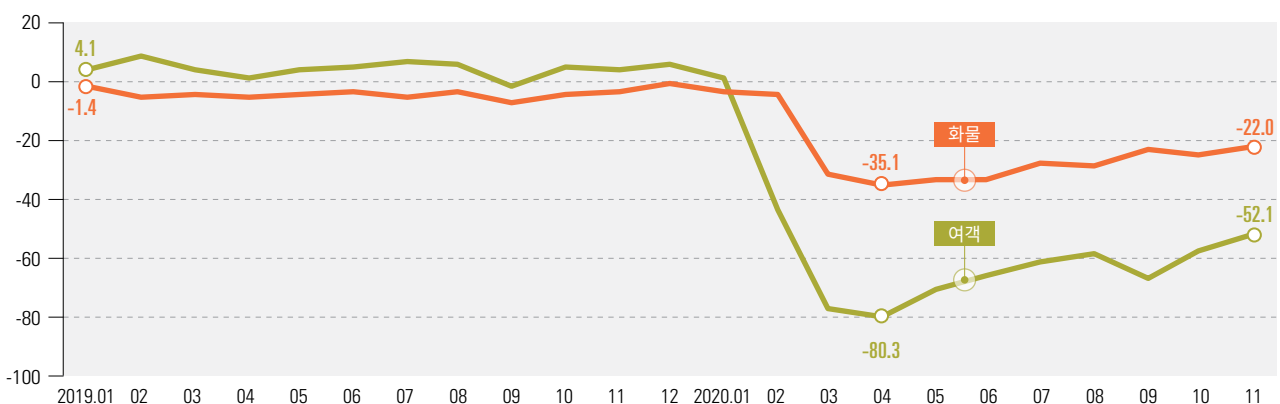
에 비해 35.1% 감소한 이후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4분기에 들어서 여객 및 화물 운송량의 감소세가 소폭 완화되었다.

## 주요 산업별 고용시장 변화

한국의 제조업은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생산과 고용의 동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18년 이후 감소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량 증감률, 2019~2020

(단위: %, 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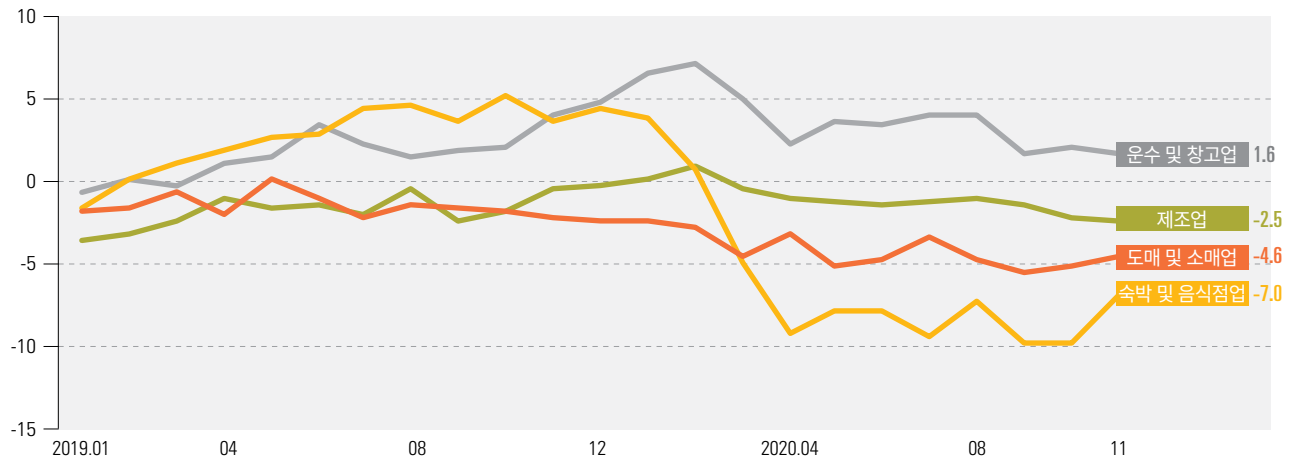


출처: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020.12.20. 인출)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률, 2019~2020

(단위: %, 전년동월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020.12.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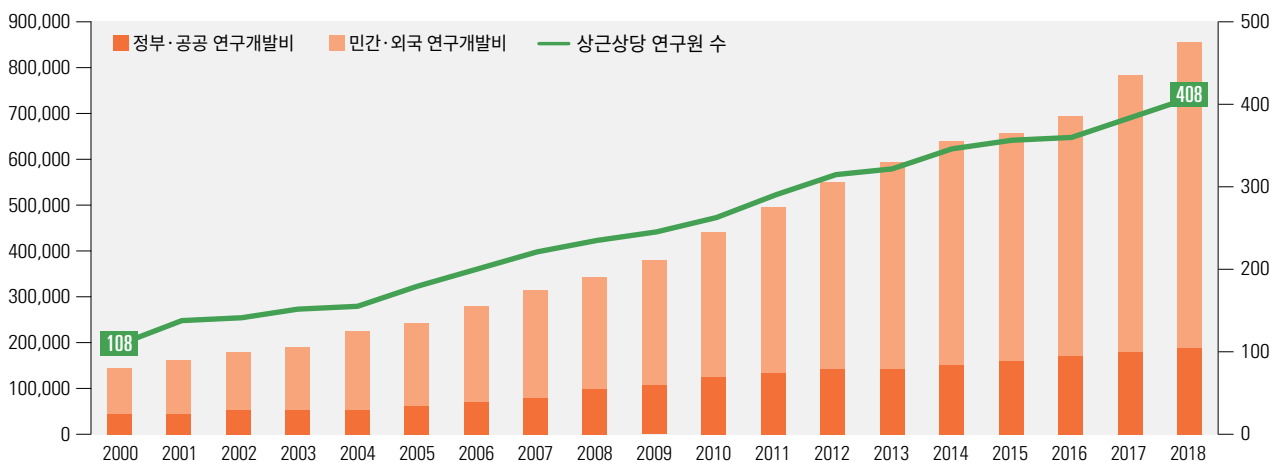
세를 이어가고 있다(김종욱, 2019). 특히, 2019년에는 제조업 성장세 악화 등으로 취업자 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2020년에 들어와서도 고용시장은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0년 3월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4월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9.2% 급감한 이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역시 2020년 이후 감소폭이 더 커진 가운데 9~11월에는 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2020년 2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7.0%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GDP 대비 연구개발비 세계 2위 수준 유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2018년 85조 7287억 원으로 2000년(13조 8485억 원)에 비해 8배 이상, 상근상당(FTE) 연구원도 2000년 10만 8370명에서 2018년 40만 837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18년 4.5%로, 2012년 이후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원별로 보면, 민간·외국 비중이 2000년 73%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민간·외국 대비 정부·공공재원 비율은 79:2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재원별 연구개발비는 정부 17.9조 원(20.8%), 공공 0.5조 원(0.6%), 민간 65.7조 원(76.6%), 외국 1.7조 원(1.9%)으로 민간 비

총연구개발비 및 상근상당 연구원 수, 2000~2018

(단위: 억 원, 천 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주 :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연구원 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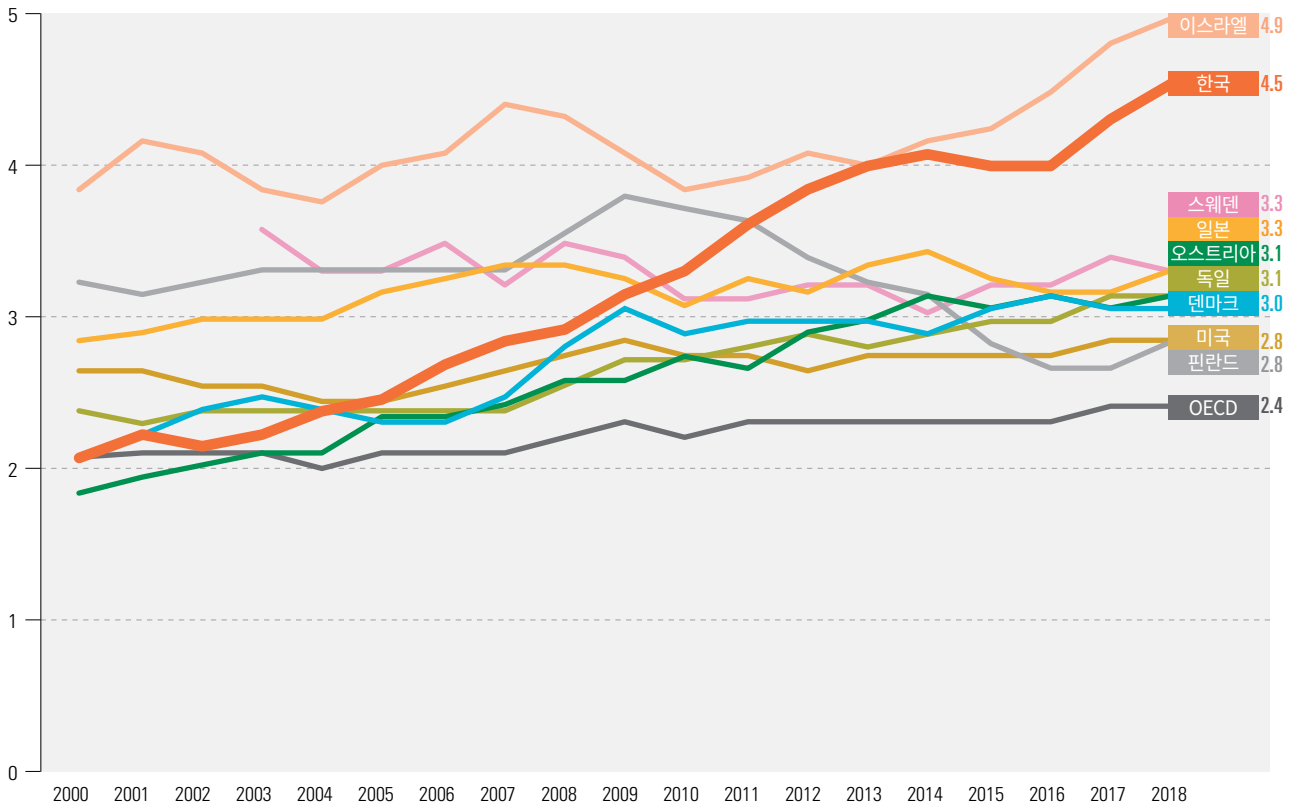
중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 연구개발비 중 60% 이상이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6T는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여섯 가지 첨단기술 산업 분야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우주항

공기술(ST)을 말한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04년 13조 7819억 원에서 2018년 56조 360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정보기술(35.8%), 나노기술(10.2%), 환경기술(9.3%) 분야의 연구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절반 이상(55.3%)을 차지하고 있다.

OECD 주요국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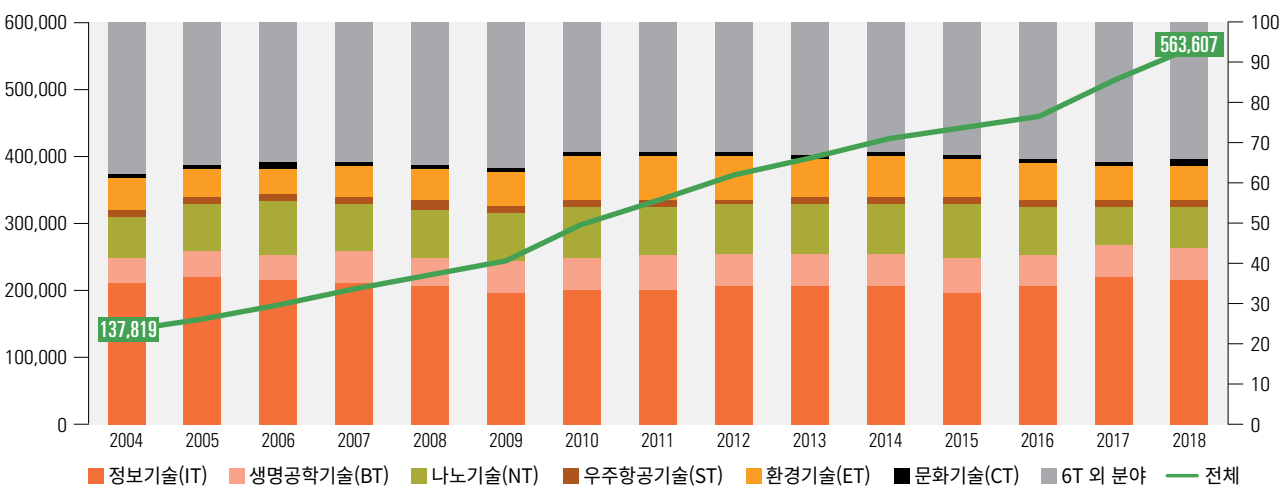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0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 현황, 2004~2018

(단위: 억 원,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 10 REDUCED INEQUALITIES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 국가 안에서 또는 국가 간의 소득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성, 연령, 장애 여부, 종교, 민족 등 사회적 배경에 의한 불평등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보건 수준의 차이, 환경 문제에 따른 인간 생활의 변화 등에서도 불평등의 요소가 나타난다. SDGs 10번 목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 완화를 지향한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적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부터, 각종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철폐, 질서 있는 이주 정책을 통한 책임성 있는 이주민 대우,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발언권 보장과 더불어 ODA의 확대, 국가 간의 금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 등을 지향한다. 또한, 이를 인구집단별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도 요구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David et al.,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가해지는 불평등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00년대의 사스(2003년), H1N1(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4년), 지카(2016년)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이후 5년간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거의 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적 재분배 노력에도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교육수준에 따라 차별적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고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은 감염병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5%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소득 불평등은 전년 대비 감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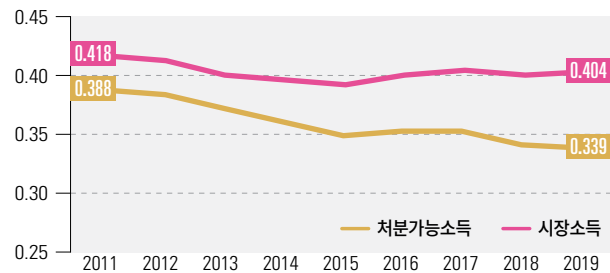
지니계수는 소득의 빈부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계층 간 어느 정도로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지표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OECD 권고에 따라 작성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16년 0.355로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로 낮아졌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의 재배분 정책 효과를 반영한다. 이에 의하면 정부 정책 효과는 2011년 0.030에서 2018년 0.057, 2019년 0.065로 증가했다. 한편,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미국은 0.390, 영국은 0.357로 한국보다 높았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289, 0.292로 한국보다 낮았다.

## 상대적 빈곤율은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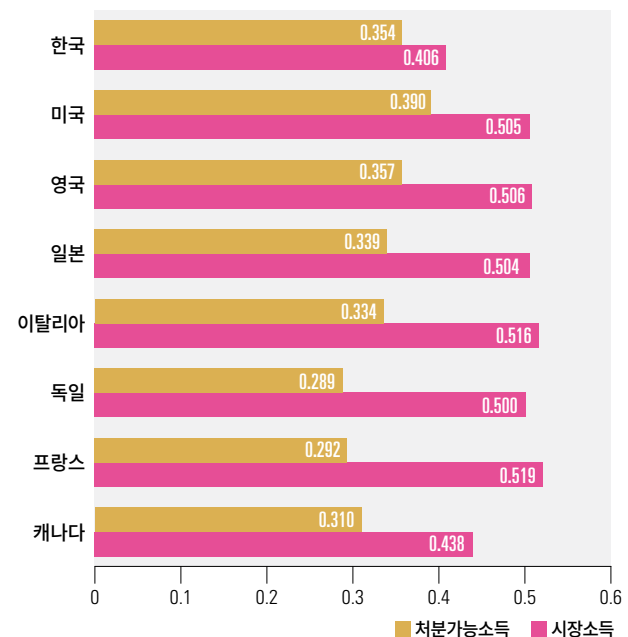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2019년 상

지니계수, 2011~2019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

주요국 지니계수 비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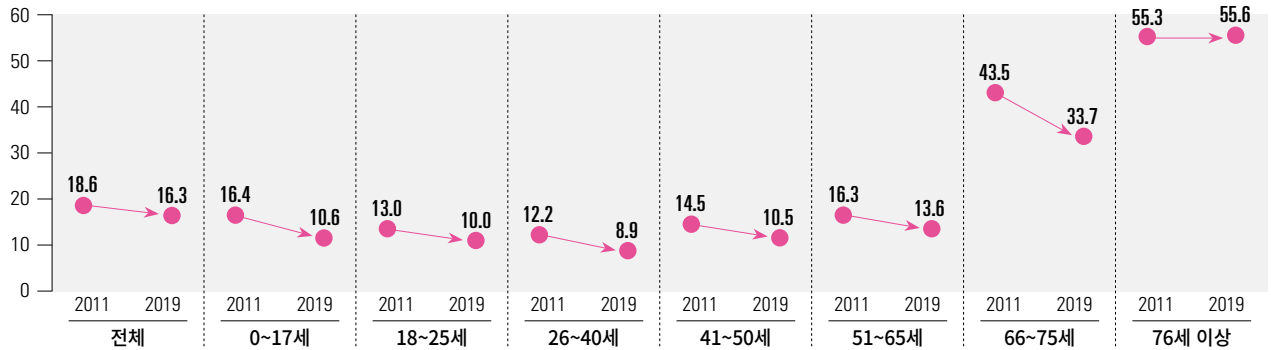
출처: OECD(<http://stats.oecd.org>, 2020.11.30. 인출)

주 : 일본 데이터는 2015년 기준임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2011, 2019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대적 빈곤율은 16.3%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령층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76세 이상에서 55.6%로 빈곤층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66~75세는 33.7%, 51~65세는 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6~40세의 연령대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8.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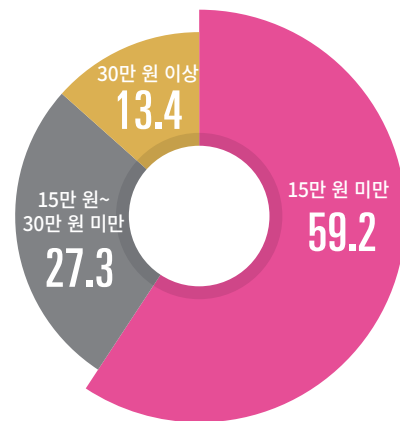
### 방문취업자의 약 13%는 취업소개료 지출

SDGs 10번 목표는 이주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이민자의 취업비용 또는 송금 수수료 등에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10월 기준, 취업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48만 630명으로 이 중 교수, 회화지도 등 전문인력은 4만 5055명이고 전체 90.6%에 해당하는 43만 5575명은 고용허가제(E-9) 또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의 동포 자격으로 방문취업하는(H-2) 인력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제도의 특성상 이미 입국 전 근무를 할 사업장이 확정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시험 준비 및 한국어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 입국 후 근무처를 구하는 방문취업(H-2)자격의 경우 2018년 기준 취업소개료를 지불하는 등 취업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H-2 자격의 조사 대상자 중 13.1%만 취업소개료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86.9%의 방문취업자는 별도의 취업소개료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소개료를 지불한 응답자 가운데, 실제

방문취업자(H-2)의 취업소개료 지출 규모, 2018

(단위: %)



출처: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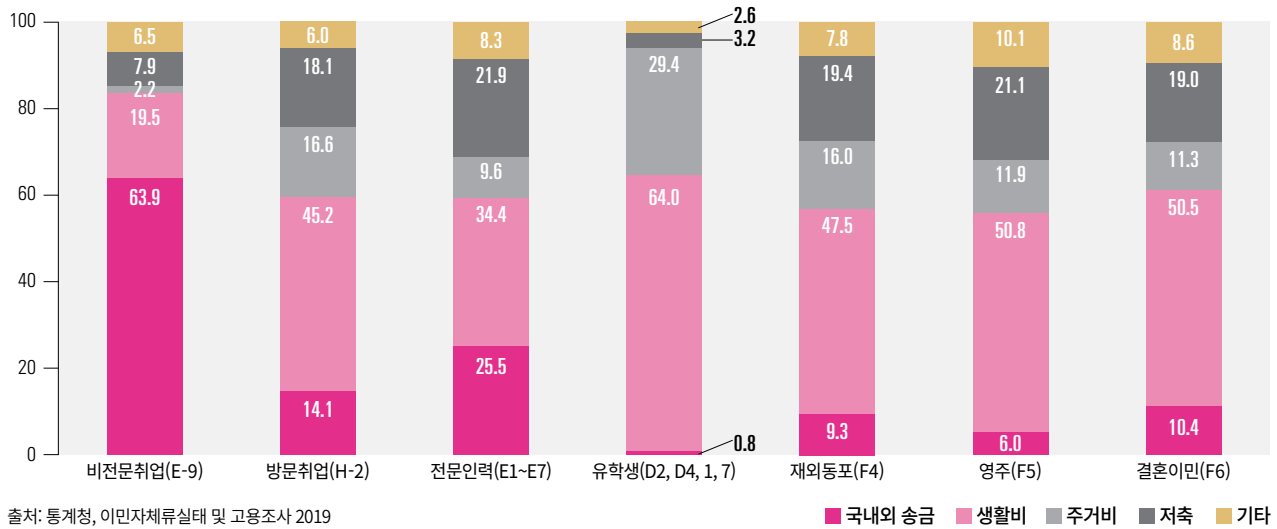
지불한 소개료는 15만 원 미만이 59.2%로 가장 많고 15만 원~30만 원 미만은 27.3%, 30만 원 이상은 13.4%로 나타났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총소득의 63.9%를 송금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2019년 5월 기준 조사 대상자의 51.3%는 월 평균 200~300만 원대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2%는 100~200만 원, 16.3%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총소득 중에 국내의 송금하는 비중은 24.4%로 생활비(41.6%)에 이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중 하나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는 비전문취업(E-9)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중 송금 비중이 63.9%로 생활비(19.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전문인력취업자의 송금 지출(25.5%), 방문취업(H-2)자의 송금 지출

체류자자격별 총소득 대비 지출 부문 구성비, 2019

(단위: %)



(14.1%)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하는 외국인 인은 38.7%(약 50만 7000명)로 송금 횟수는 연 12회 이상이 22.5%로 가장 많고 연 7~11회(3.9%), 연 6회(2.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해외 송금 규모는 연간 1000~15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고, 2000만원 이상은 19.3%, 1500~2000만원 미만은 17.9% 순이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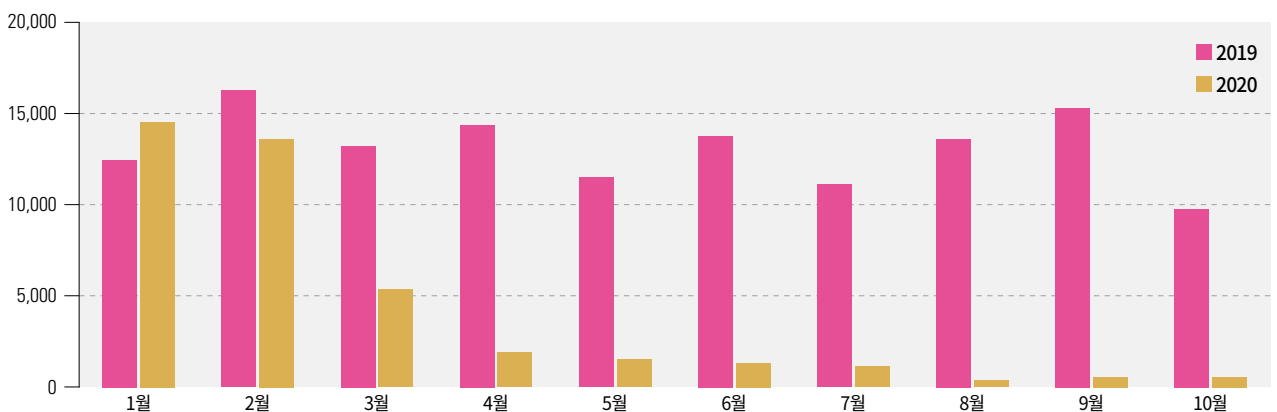
국내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 기준)의 체류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동월(2019년 10월) 대비 각각 12.5%(E-9), 26.7%(H-2)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월별 출입국 현황을 보면 좀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규모의 인력이 입국하고 있다. 즉, 2020년 1월에는 1만 4639명으로 전년동월(1만 2454명) 대비 많았으나, 2월에는 1만 3608명(2019년 2월: 1만 6373명)으로 줄기 시작하면서, 6월 1376명에서 10월에는 575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반면, 2019년 10월 입국 인력은 9735명이었다. 이들 근로자의 감소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업 분야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체류 중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하고, 농어촌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함과 동시에, 장기 체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비숙련 노동(E-9) 자격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 2019~2020

(단위: 명)





#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전 세계 3%에 불과한 면적에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이는 바로 도시다. 도시는 세계 GDP의 60%를 차지할 만큼,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에너지의 60~80%가량을 소비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등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와 시민이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0억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빈민가 지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UN, 2020b).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도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공공의료 시설 부족, 지역경제 침체, 재난에 대한 지방정부 간 대처 능력 차이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건강한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지침이 필요하다. SDGs가 그 지침 역할을 한다. 특히, 11번 목표는 모든 시민에게 적정 수준의 주택 및 기본 서비스, 안전한 교통체계,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자연재해와 재난의 위험에 대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폐기물과 대기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또한 시민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주도 해결 방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시 데이터를 제공해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침체된 도시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UNHABITA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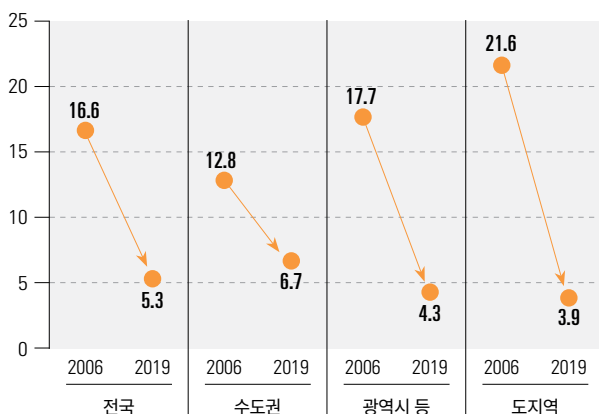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전국 106만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 면적이나 침실 기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사는 가구를 말한다. 국내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006년에 16.6%에 달했으나 2019년 5.3%로 감소했

다. 그러나 5.3%라는 수치는 여전히 106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6.7%로, 광역시(4.3%)와 도지역(3.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주택의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처도 있다. 고시원,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그 예다. 이와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2017년 기준 37만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고시원·고시텔이 41.0%(15만 가구)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거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에 39.0%(14만 가구), 숙박업소 객실에 8.2%(3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인 51.5%(19만 186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주택 이외 거처 유형은 대조적이었는데, 수도권에는 고시원 및 고시텔이, 비수도권에는 일터의 일부 공간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 주를 이루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06, 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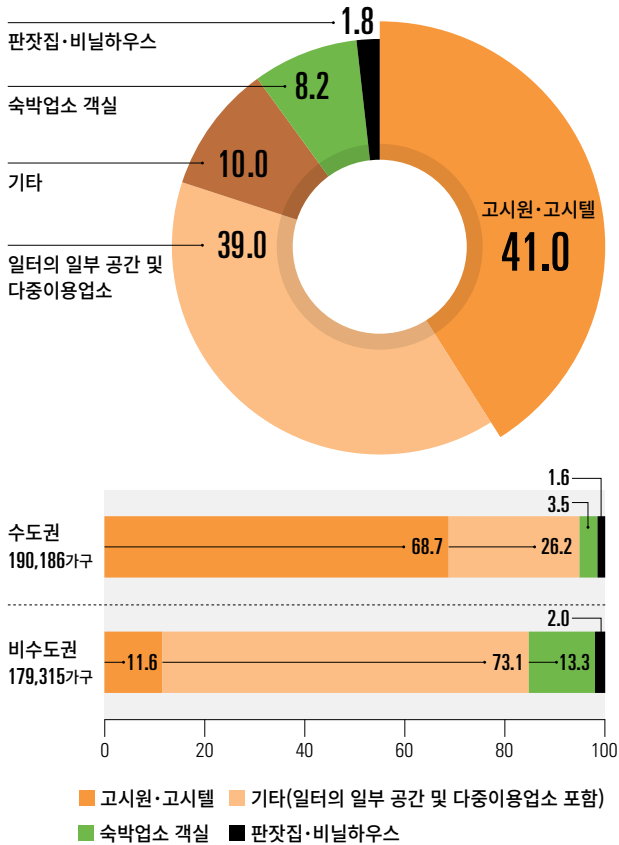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2019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주 :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도가 포함됨에 따라 광역시에서 인천이, 도 지역에서 경기도를 제외함



주택 이외의 거처 유형별 비중, 2017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주 : 거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함. 주택은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에 부합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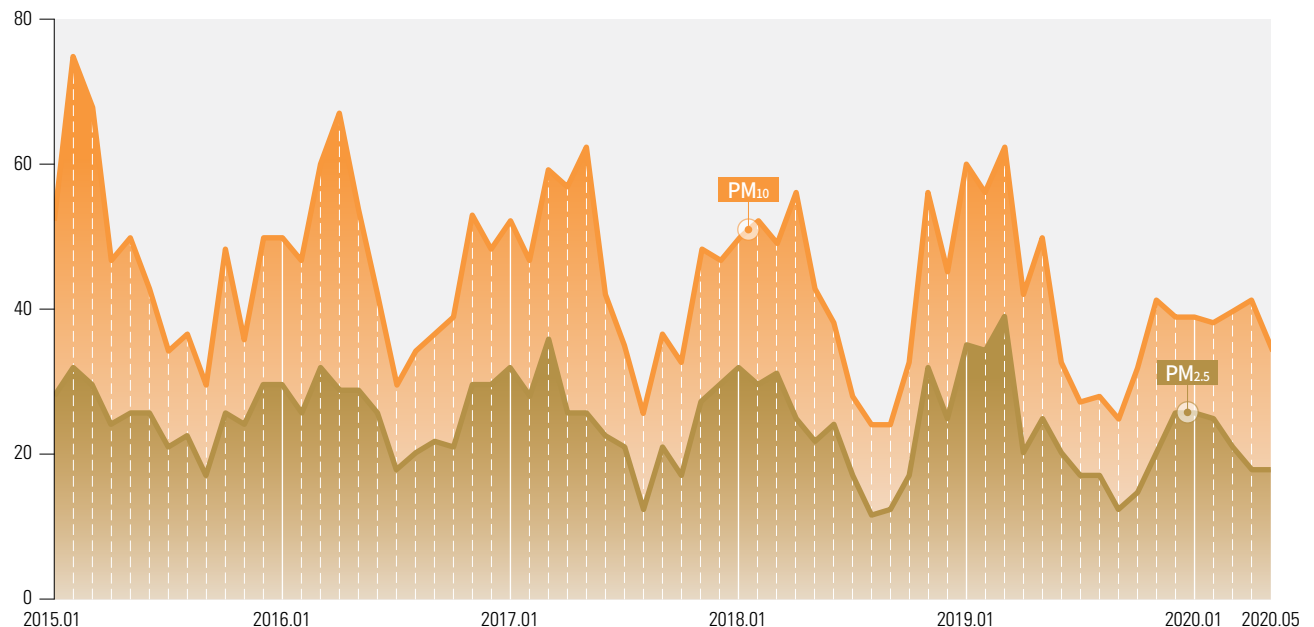
##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지름이  $10\mu\text{m}$  이하인 미세먼지( $\text{PM}_{10}$ )와 지름이  $2.5\mu\text{m}$  이하인 초미세먼지( $\text{PM}_{2.5}$ )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유해물질로,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공장·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 일수가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대체로 1월부터 5월 사이에 높게 나타났는데 이 기간을 중심으로 보면 미세먼지는 2015년 2월 최대  $75\mu\text{g}/\text{m}^3$ 를 보인 이후 2019년까지  $40\sim 60\mu\text{g}/\text{m}^3$ 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30\sim 40\mu\text{g}/\text{m}^3$ 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는 2015년 이후  $20\sim 30\mu\text{g}/\text{m}^3$ 대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20년  $10\sim 20\mu\text{g}/\text{m}^3$ 대로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고 공장가동이 일부 중단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대책 없이는 언제든 이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는 2019년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경기도, 초미세먼지는 충북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경기,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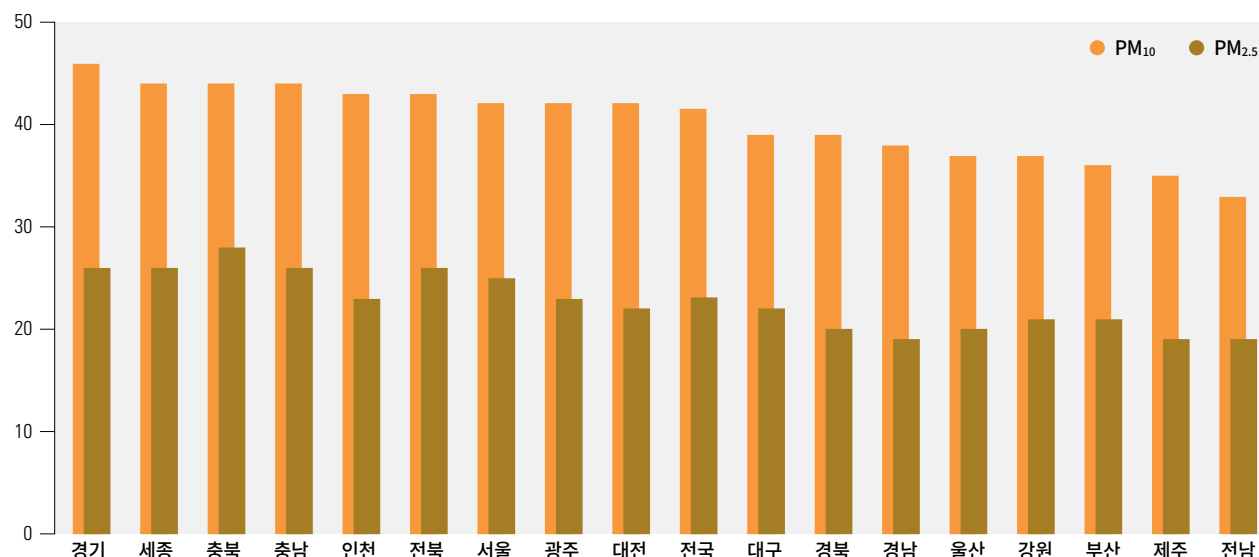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변화, 2015.01~2020.05

(단위:  $\mu\text{g}/\text{m}^3$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도현황(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020.12.20. 인출)



시도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019

(단위:  $\mu\text{g}/\text{m}^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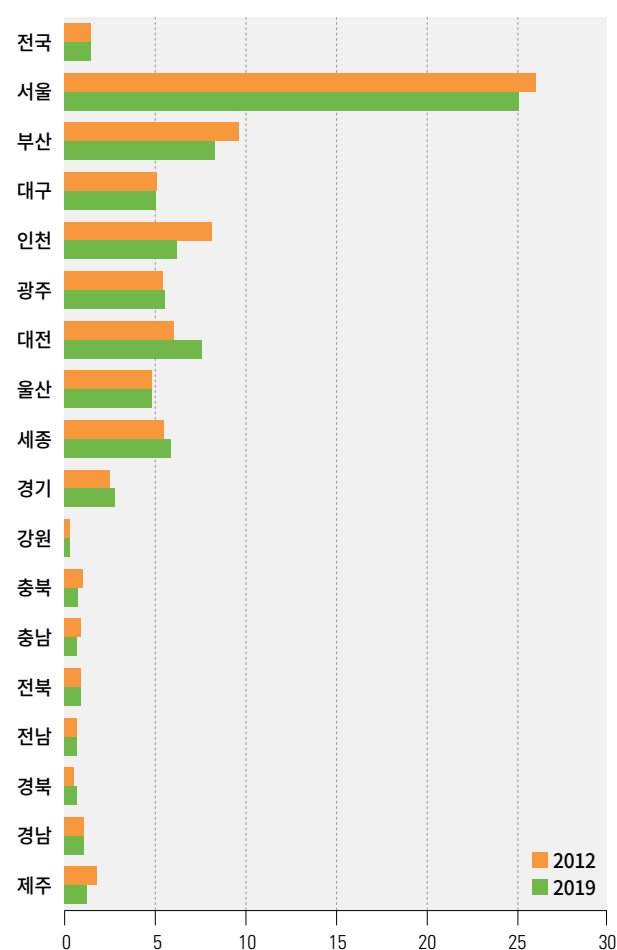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20

주 : 전국 농도는 시도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인구가중평균임

시도별 공공 공간 비율, 2012, 2019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020.12.20. 인출)

주 : 공공 공간 비율은 '공간 시설/해당 행정구역 면적×100'으로 계산함  
공간 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를 포함함

중, 충북, 충남, 전북 등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남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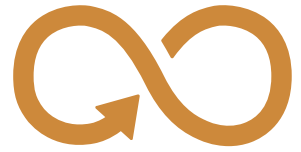
### 공공 공간 비율 지역마다 큰 차이 보여

도시 내에서 공공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의 공공 생활과 활동이 가능한 외부 활동 공간이다.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시 환경의 질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공공 공간에 대한 활성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이훈길 외, 2015).

한국의 경우 2019년 전체 면적에서 공공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나타났는데, 특광역시와 도지역 간에 비율 차이가 컸다. 서울이 25.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부산 8.2%, 대전 7.5%, 인천 6.2% 등을 기록했고, 강원(0.4%), 충남·전남·경북(0.7%), 충북(0.8%) 등 도지역은 1% 전후에 머물렀다. 공공 공간 비중의 변화를 보면, 2012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반면, 대전이 1.5%p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1.9%p)이었다.



#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꽤 분주했다. 한국은 2018년 8월부터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을, 2019년 4월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전면금지 정책을 마련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서울시는 2018년 9월 전국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에 도전, 일회용품 없는 유통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생산과 소비라는 단선적인 경제구조를 순환적인 체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배달 음식, 일회용 마스크 착용 등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는데, 이러한 생활 양식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의 이행에 역행 하듯, 많은 폐기물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 최근 유해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 가장 빨라

2018년도 국내 총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44만 6102톤으로, 2009년 36만 6921톤에 비해 21.6% 증가했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거의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정폐기물은 2009년(9060톤) 대비 2018년(1만 5389톤)에 69.9% 증가해 다른 유형의 폐기물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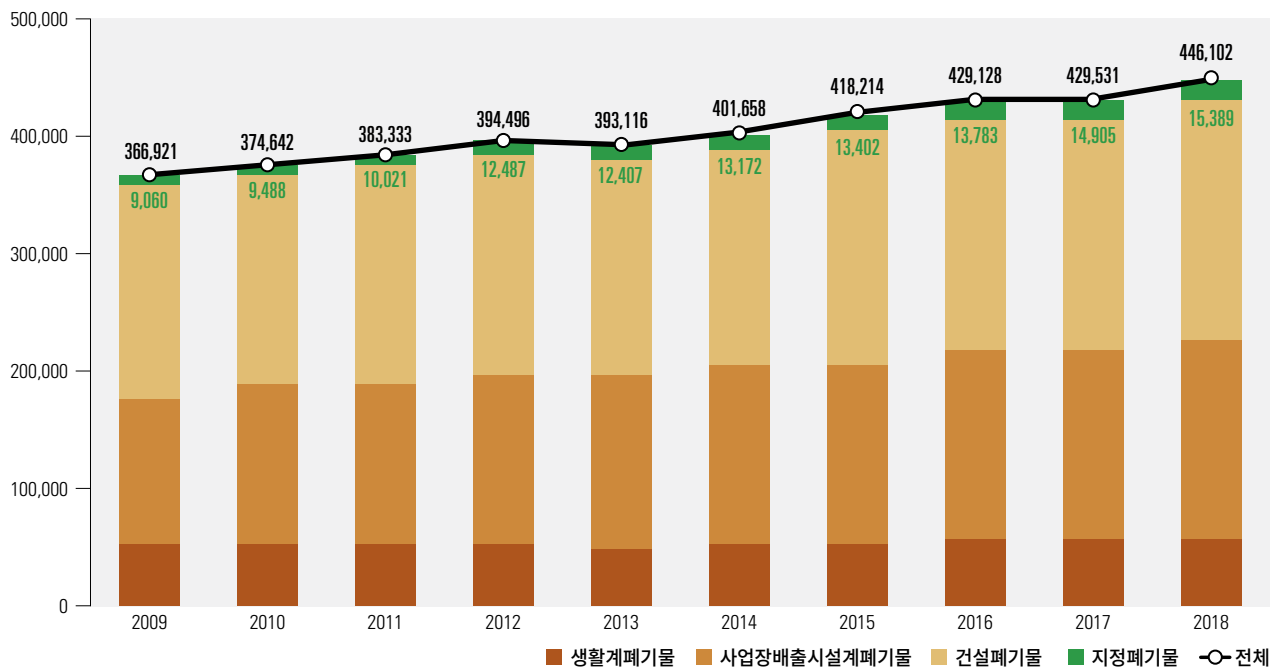
확진자 및 격리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고려한다면 향후 지정폐기물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유형에 따라서 지역별 발생량은 차이가 있었는데, 총폐기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은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발생량이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충남, 전남, 경북 순, 생활계폐기물은 경기, 서울, 경남 순, 지정폐기물은 경기, 경북, 충남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한편, 생활계폐기물은 2018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폐기물 유형별 발생량, 2009~2018

(단위: 톤/일)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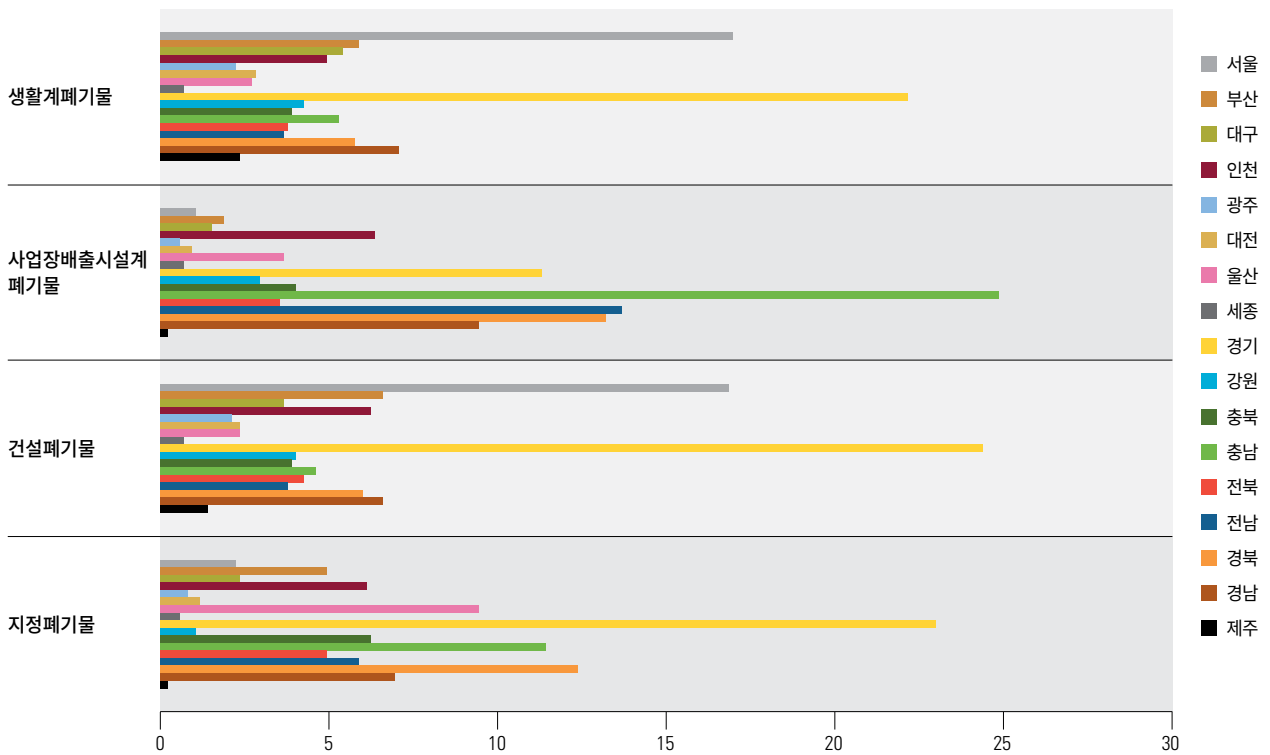
주1 : 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모두 합한 데이터임

주2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데이터임



##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2018

(단위: %)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9

66

1.06kg씩 발생했다. 그 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1.90kg)로, 가장 적은 광주(0.86kg)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앞서, 하루에 가장 많은 생활계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였는데 인구수로 나누어본 결과 경기는 1인당 하루 평균 0.92kg씩 생활계폐기물이 발생,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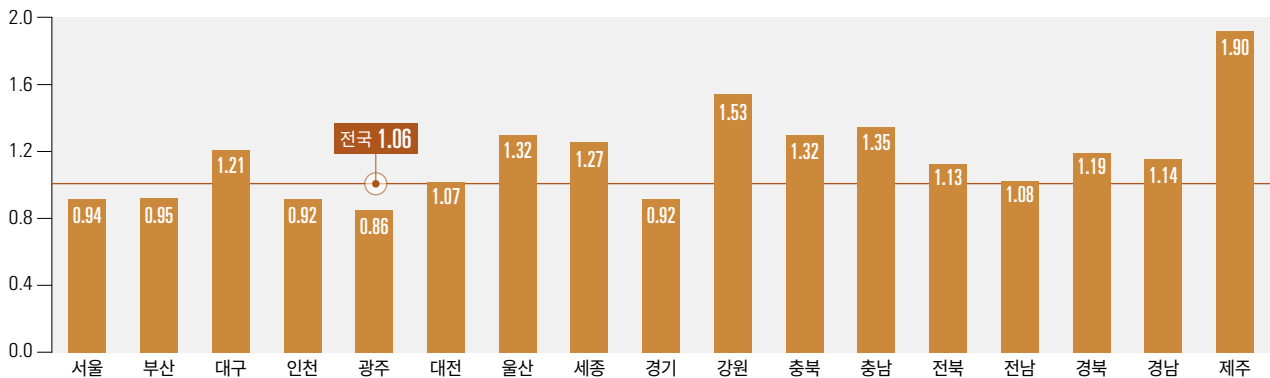
### 생활계폐기물 중 플라스틱류 발생 지속적 증가

지난 5년간 생활계폐기물 내 플라스틱류가 지속적으로 증

가했다. 2013년 하루 평균 4365톤이었던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2018년 6375톤으로 지난 5년간 46.0%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생활계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9.0%에서 11.4%로 높아졌다. 배출방식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되는 양보다 종량제봉투에 혼합되어 배출되는 양이 더 많았다. 또한,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큰 폭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종량제 배출량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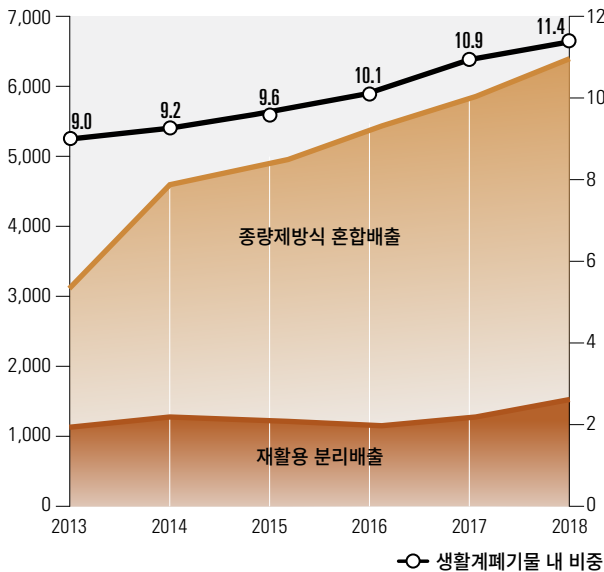
##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18

(단위: kg/일/인)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9

생활계폐기물 중 플라스틱류 발생량, 2013~2018 (단위: 톤/일, %)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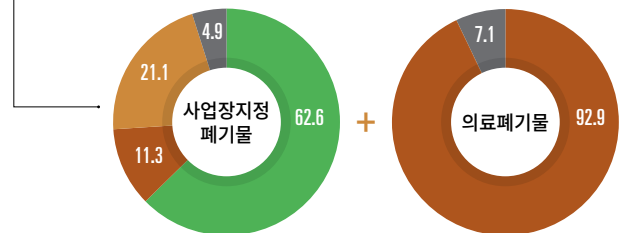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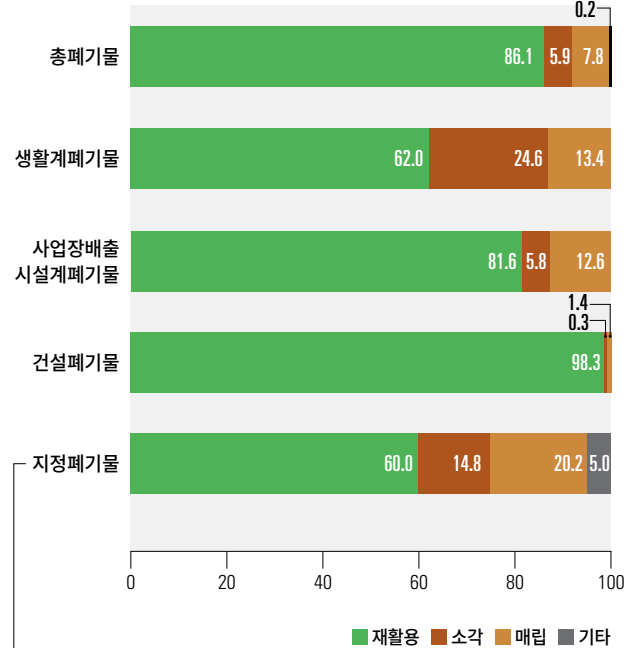
### 재활용 처리된 폐기물의 실질 활용률 높여야

2018년 기준 폐기물 처리 방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재활용으로 86.1%이었다. 폐기물 유형별로 보면 생활계폐기물의 62.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81.6%, 건설폐기물의 98.3%가 재활용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배출자 기준의 재활용률로, 발생한 폐기물이 최종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유해한 것으로 지정된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0.0%다. 이를 다시 사업장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업장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2.6%이고, 의료폐기물은 대부분(92.9%) 소각되고 있다.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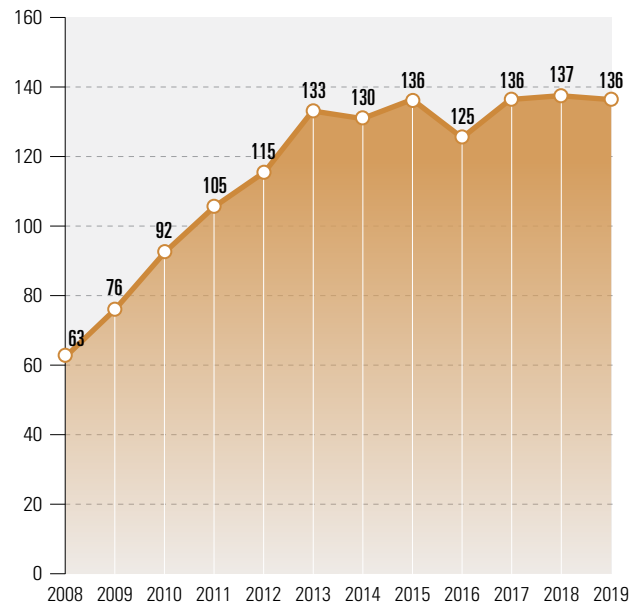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친환경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인식하듯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에 의하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 수가 2008년 63곳에서 2019년 136곳이 되었다.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향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유형별 처리 방법, 2018 (단위: %)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9 및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9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008~2019 (단위: 개)



출처: 한국표준협회(www.ksa.or.kr/ksi/5011/subview.do, 2020.11.25. 인출)





# 13 CLIMATE ACTION



68



#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SDGs 13번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로 인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낮춰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최근 몇십 년에 걸친 지구 온도의 상승은 인류의 존속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해 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906년에 비해 0.75°C 상승했으며, 현재와 같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C 이상 지속될 경우, 지구 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동 행동을 합의한 바 있다. SDGs 13번 목표는 그 연장선상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대응을 지향하며 세부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발전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반영하며, 이를 위한 시민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해, 최근 한국도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했다(환경부, 2020).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 위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순환 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등 5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분야 비중이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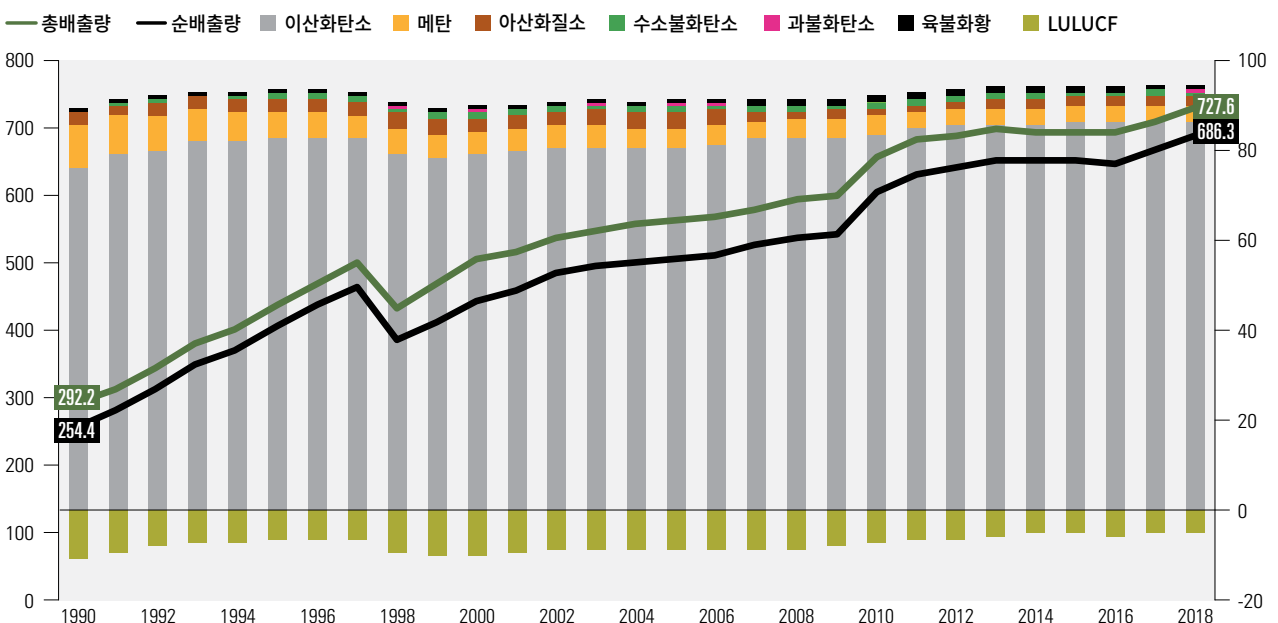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톤CO<sub>2</sub>eq.인데, 이는 1990년(292.2백만톤CO<sub>2</sub>eq.)의 약 2.5배에 달하는 양이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2019년 잠정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2.8백만톤CO<sub>2</sub>eq.으로 2018년에 비해 소폭 감

소한 것으로 최근 보고되었다(환경부, 2021). 한편,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나 흡수량이 더 많으며, 2018년 순흡수량은 41.3백만톤CO<sub>2</sub>eq.이다. 이에,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686.3백만톤CO<sub>2</sub>eq.이다.

온실가스 유형별 배출량을 보면 이산화탄소(CO<sub>2</sub>)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2018년 이산화탄소(CO<sub>2</sub>)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유형별 비중, 1990~2018

(단위: 백만톤CO<sub>2</sub>eq.,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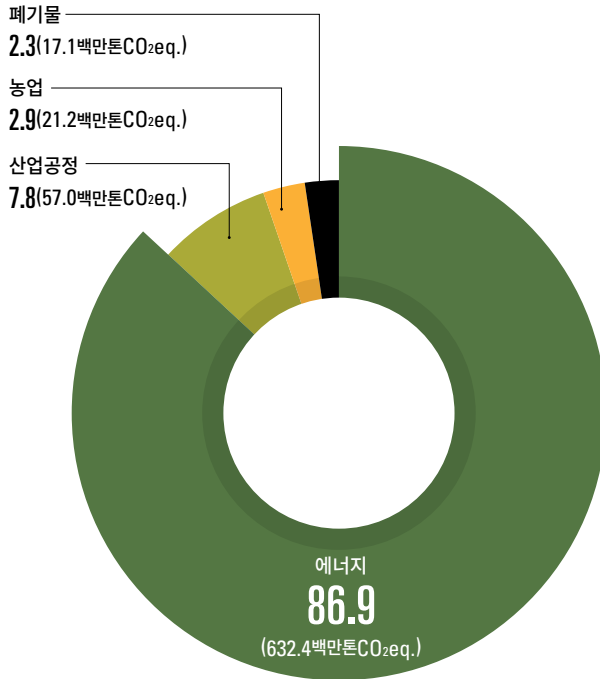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2019

주: LULUCF는 산림 등에서 배출되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능을 함에 따라 총배출 비중에서 차감(-) 항목(흡수율)이 됨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8

(단위: %, 백만톤CO<sub>2</sub>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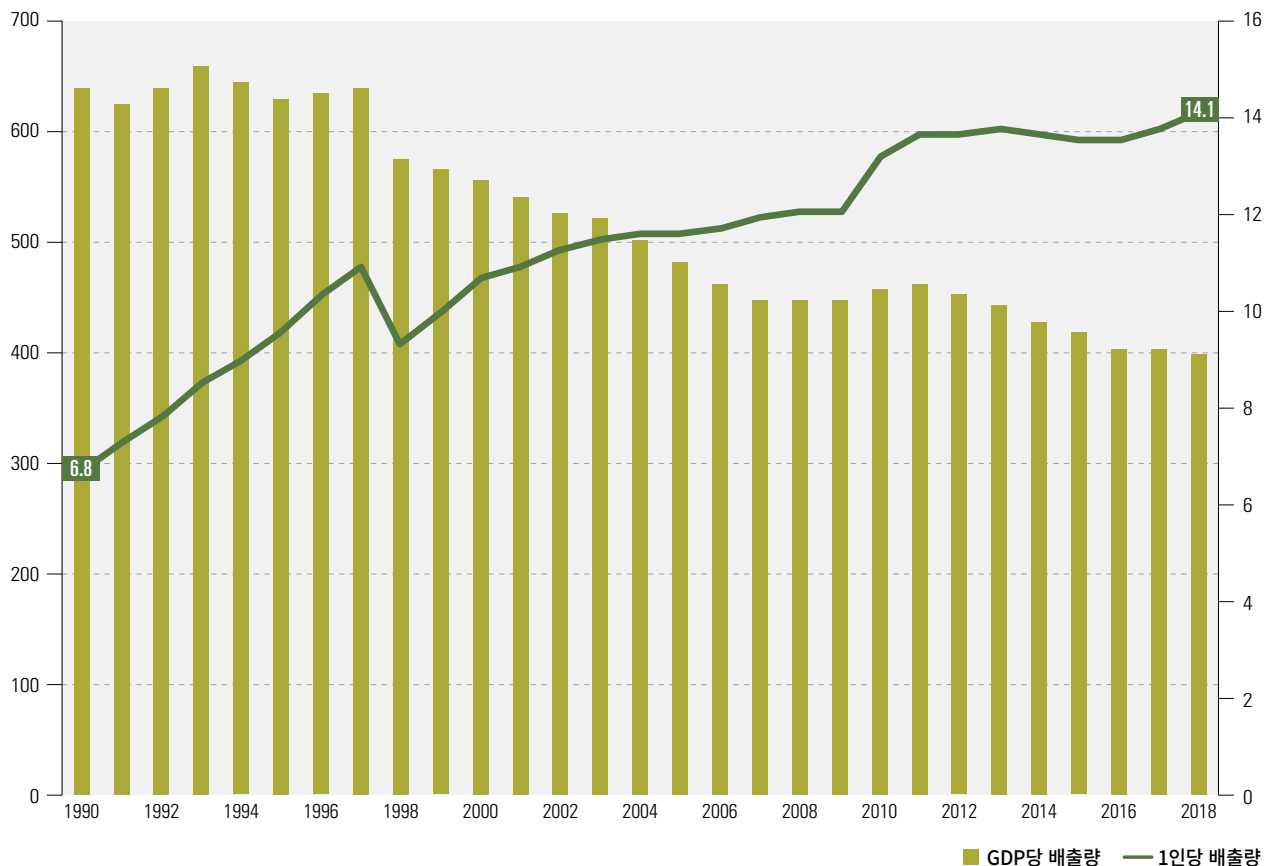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2019

배출량은 664.7백만톤CO<sub>2</sub>eq.으로 이는 총배출량의 91.4%에 해당한다. 이외, 메탄(CH<sub>4</sub>)이 3.8%(27.7백만톤CO<sub>2</sub>eq.), 아산화질소(N<sub>2</sub>O)가 2.0%(14.4백만톤CO<sub>2</sub>eq.), 수소불화탄소(HFCs)가 1.3%(9.3백만톤CO<sub>2</sub>eq.), 육불화황(SF<sub>6</sub>)이 1.2%(8.4백만톤CO<sub>2</sub>eq.), 과불화탄소(PFCs)가 0.4%(3.2백만톤CO<sub>2</sub>eq.)를 차지한다. 이산화탄소(CO<sub>2</sub>)의 경우, 2017년에 비해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p 감소했으나 절대적인 양은 15백만톤CO<sub>2</sub>eq. 늘어났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에너지로 86.9%이며, 산업공정 7.8%, 농업 2.9%, 폐기물 2.3% 순이다.

실질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401.6톤CO<sub>2</sub>eq./10억 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1인당 총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다.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OECD 국가 간 비교해보면, 한국은 34개국 중 6번째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다. 한국보다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는 에스

## 실질GDP 대비 및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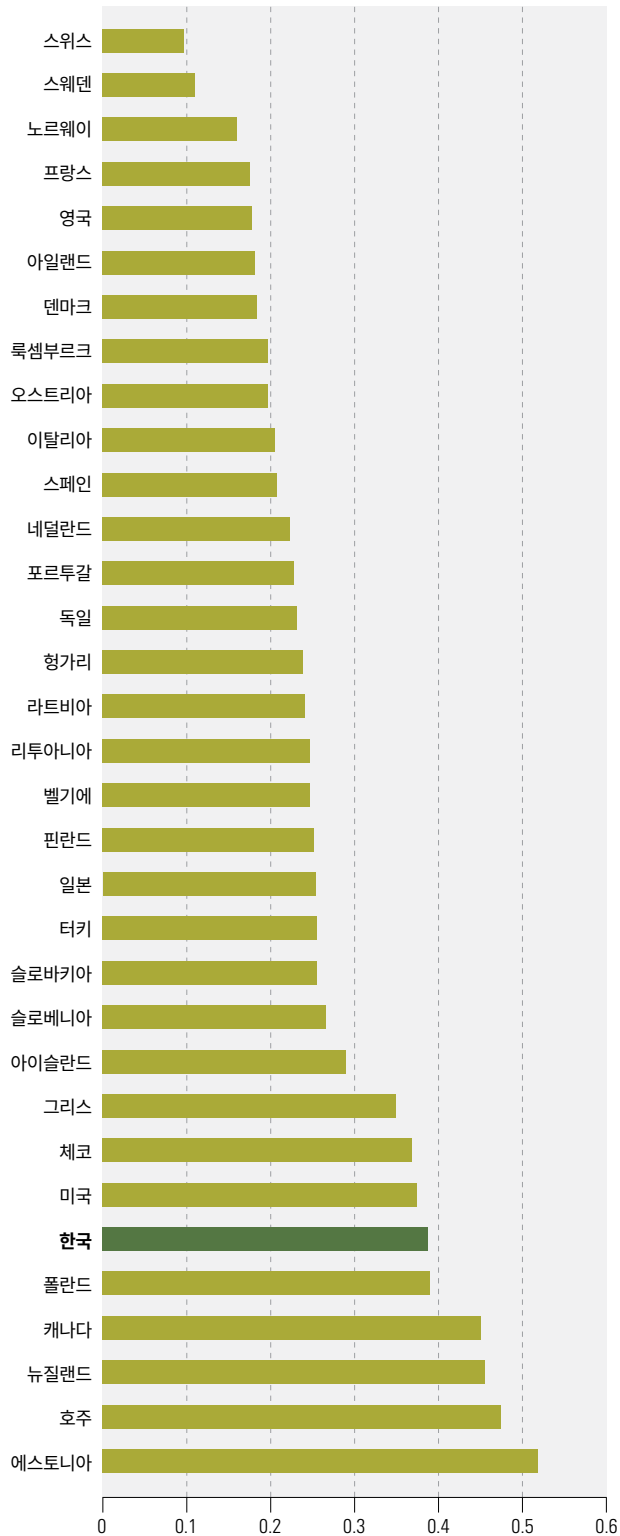
(단위: 톤CO<sub>2</sub>eq./10억 원, 톤CO<sub>2</sub>eq./1인)



출처: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2019

토니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다. 한편, 비교대상국 중 온실가스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는 스위스였다.

OECD 국가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단위: kgCO<sub>2</sub>eq./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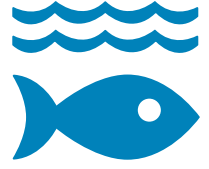
출처: OECD(<http://stats.oecd.org>, 2020.11.25. 인출)

주 : 한국 데이터는 2016년 기준임





# 14 LIFE BELOW WATER



72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최근 폐사한 해양동물의 몸에 끼어 있거나 위 속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SDGs 14번 목표는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해양자원을 좀 더 지속가능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특히,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와 더불어 해양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해양 보호구역의 선정,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군소도서 개도국 등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 지원과 소규모 어업인의 시장접근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해양수산부·환경부·해양경찰청 등 해양 관련 부처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수거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그간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인간 활동의 축소는 해양 환경의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고, 언택트(Untact)를 위한 배달과 택배가 늘고, 사람 간 전염을 막기 위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이 다시 증가하면서, 그간 국제사회의 해양쓰레기 감소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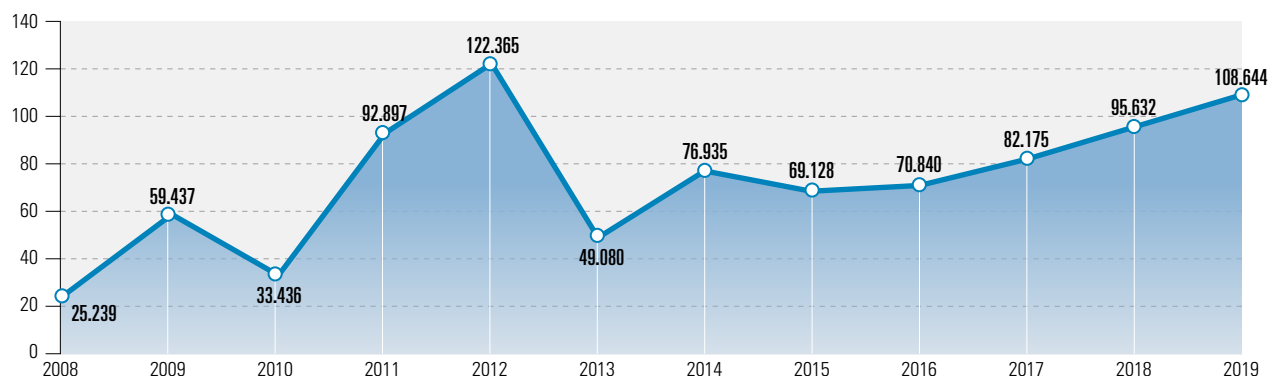
## 해양쓰레기 수거량 2015년 이후 증가세

한국의 해양쓰레기 규모는 연간 약 18만 톤인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수산부, 2018). 해양쓰레기는 바다로 유입되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전체량을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대신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되는 다양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쓰레기의 수거량을 측정하고 있다. 이 수거사업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폐기물 정화사업, 양

식어장관리, 해양·수자원관리, 연안관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규모는 총 88만 5814톤에 달하고 있다. 2008년에는 2만 5239톤에 그쳤던 수거량이 2019년에는 10만 8644톤으로 증가했다. 2012년에는 수거량이 12만 2365톤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이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량, 2008~2019

(단위: 천톤)



출처: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 2020.11.24. 인출)



해양쓰레기는 집중 호우나 폭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산림 지역의 목재나 육지의 쓰레기 등이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발생한다. 또한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관광객에 의해서 또는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중국 등 인근 지역에서 흘러오는 외부 요인도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적 요인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2008년부터 2019년부터 광역시·도별로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을 살펴보면, 전남에서 가장 많은 총 24만 4281톤이 수거되었으며, 뒤이어 경남에서 17만 3086톤, 제주에서 8만 7873톤, 충남에서 8만 6732톤 등의 순서로 많이 수거되어 해양면적의 범위가 넓은 지역일수록 해양쓰레기 수거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쓰레기는 크게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으로 분류하는데, 2008년 이후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총 88만 5814톤 중 해안쓰레기가 46만 3400톤(52.3%)으로 가장 많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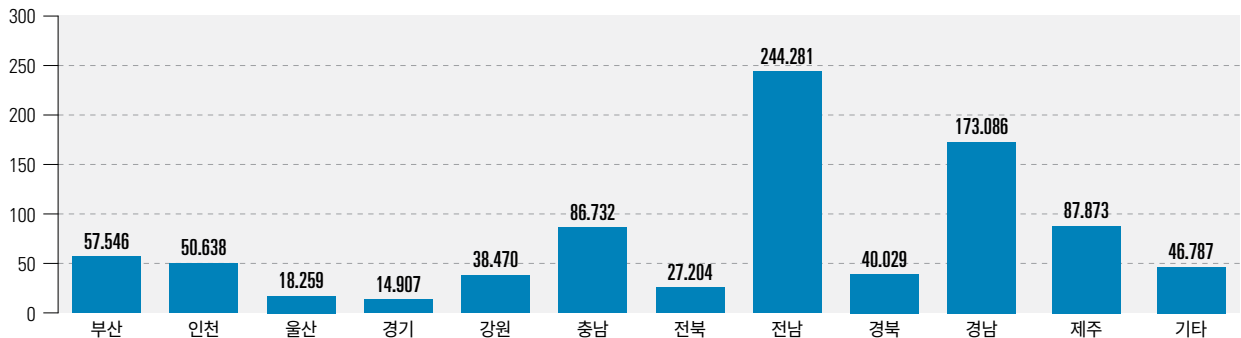
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침적쓰레기가 27만 1741톤(30.7%), 부유쓰레기가 5만 4162톤(6.1%)을 차지했다. 최근의 경향만 살펴보면, 해안쓰레기는 2018년 3만 8822톤에서 2019년 7만 5131톤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했으며, 부유쓰레기도 5666톤에서 7713톤으로 증가한 반면, 침적쓰레기는 4만 1502톤에서 2만 5800톤으로 감소했다.

### 천해양식업 비중 꾸준히 증가

해양 생태계 유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SDGs 14.4 세부목표는 적정 어획량에 대한 관리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어업생산량은 2019년 잠정치치를 기준으로 382만 9708톤(생산금액 기준 8조 3387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생산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천해양식어업이 237만 1999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61.9%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일반해면어업이 91만 4570톤(23.9%), 원양어업이 50만 7883톤(13.3%), 내수면어업이 3만 5255톤(0.9%)을 차지하고 있

지역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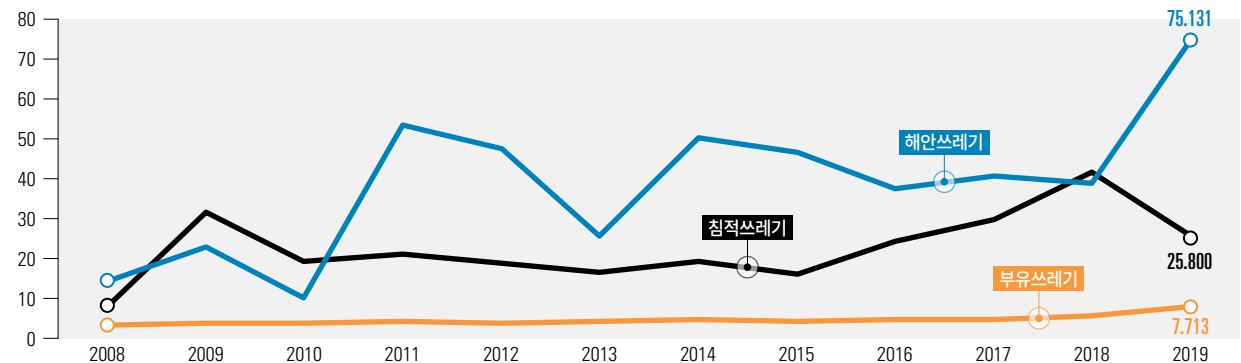
(단위: 천톤)



출처: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 2020.11.24. 인출)

유형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2008~2019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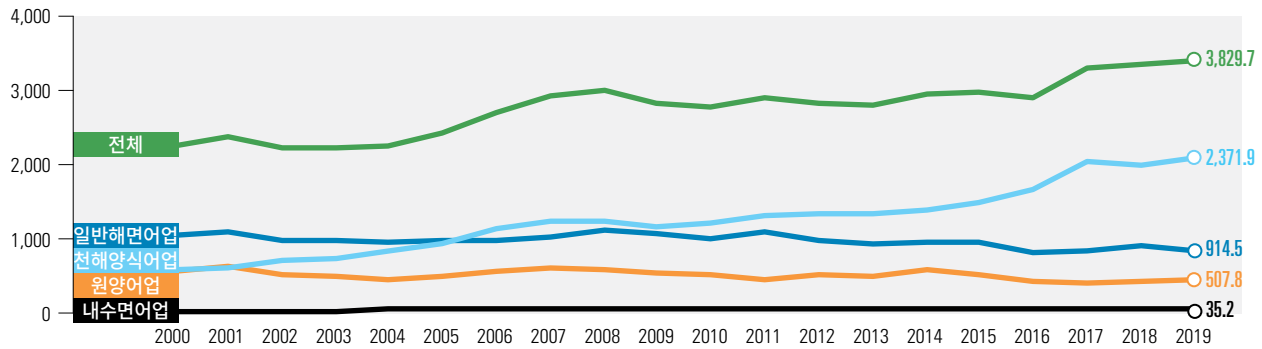


출처: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 2020.11.24. 인출)

주 : 해안쓰레기는 해변이나 해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부유쓰레기는 해수표면 가까이 떠다니는 쓰레기, 침적쓰레기는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의미함

## 어업생산량, 2000~2019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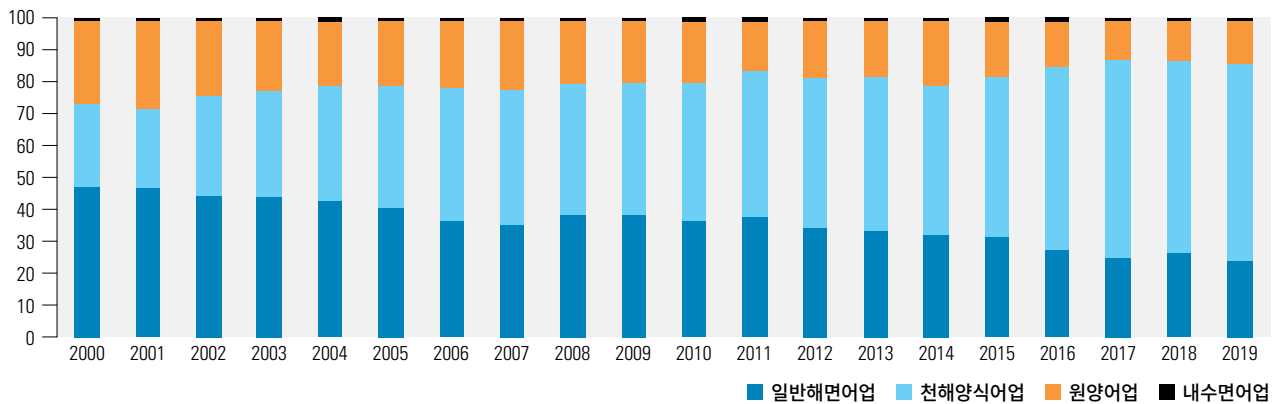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kosis.kr, 2020.11.25. 인출)

주: 2019년 데이터는 잠정치임

## 생산방식별 어업생산 비중, 2000~2019

(단위: %)



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kosis.kr, 2020.11.25. 인출)

주: 2019년 데이터는 잠정치임

다. 2000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어업생산량 총규모는 약 251만 톤에서 383만 톤까지 증가했다. 생산방식별로 보면 2000년도에는 일반해양어업이 약 119만 톤 규모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반면, 2019년에는 91만 톤까지 줄어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천해양식업은 2000년 65만 톤 규모에서 2019년 237만 톤 규모로 증가해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였고, 전체 어업생산량 중 비중도 2000년 26%에서 2019년 62%까지 늘어났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2019)는 한국 연근해 어업의 최대 확보 가능한 수산자원량을 503만 톤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는 자원량(2017년 기준)은 304만 톤으로 현재의 어획강도를 유지할 경우 자원 감소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근해 자원량을 2030년까지 503만 톤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우고, 자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 물고기 남획, 불법어업

등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제(TAC)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TAC는 어종별로 어획량을 정하는 제도로, 매년 해양수산부가 이를 관리한다. 2020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 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14개 업종(표 참조)에 대해 2020년 7월~2021년 6월(여기)에는 총허용어획량을 28만 6045톤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 2020.07~2021.06 어기간 TAC 관리 기준

구분	세부 내역
대상종(12종)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 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대상업종(14종)	대형선망, 근해통발, 잠수기,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트롤, 동해구외끌이, 연안복합, 마을어업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0.06.29.)





# 15 LIFE ON LAND



#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국가 간, 국가 내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주목한 또 다른 모습은 도시를 횡보하는 야생동물이었다. 인간이 자취를 감춘 주택가나 도로에 원숭이, 사슴, 너구리 등이 등장한 것이다. 인간과 야생동물 간 마치 상충관계(trade off)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생태계 안에서 조화되지 않은 종(species)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야생생물의 서식지인 산림만 해도 주택 및 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점점 훼손되어, 전 세계적으로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이 2000년 31.9%(41억 5804만 9522ha)에서 2020년 31.2%(40억 5893만 810ha)로 줄어 들었다. 이에, 2030의 제에서는 육상 생태계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생물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SDGs 15번째 목표로 설정했다. 개별 국가들은 산림, 습지, 호수 등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생물종이 번식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는 말처럼 생태계 보존은 개별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해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이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산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면적 연간 순변화율, 산림 내 지상부 바이오매스 총량, 보호림 비율, 장기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비율, 산림경영인증 면적 등 5개 지표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SFM을 모니터링한다.

산림면적의 전 세계적 감소 추세에 국내 상황도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산림면적은 지난 5년(2015~2020년)간 연평균 0.16%씩 감소하고 있었다. OECD 37개국 중 같은 기간 동안 산림면적이 감소한 곳은 한국 포함 9개국으로 이스라엘(-3.23%), 콜롬비아(-0.33%), 멕시코(-0.19%), 슬로베니아(-0.16%), 헝가리(-0.08%), 미국(-0.02%), 캐나다(-0.01%), 일본(-0.01%)이다. 보호림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가 2020년 59.5%로 가장 높았으며 2000년 이후 증가폭도 36.7%p로 최대였다. 한국에서도 2000년(5.3%) 이후 보호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6.9%로 OECD 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는 낮은 편이었다.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큰 지상부 바이오매스 양은 4개국(캐나다, 칠레, 호주,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증가 추세다. 한국은 2000년 ha당 59톤에서 2020년 132톤이 되었다.

장기산림경영계획을 통해 관리되는 산림 비율은 OECD 국가 거의 대다수에서 증가한 가운데 한국과 스웨덴만이 감소했다. 한국은 그 비율이 2000년 59.0%에서 2020년 39.3%가 되었다. 이는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의무에서 권장제로 변경된 것과도 관계된다. 해당 비율이 100%인 국가로는 체코, 일본,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터키였다.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넘어 독립 기관에 의한 산림경영인증제도를 통해 승인된 산림면적 비율 또한 SFM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산림경영인증 면적은 2010년 19만 3391ha에서 2019년에 21만 4571ha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지표는 인증제도 유무 및 기간 만료 등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비교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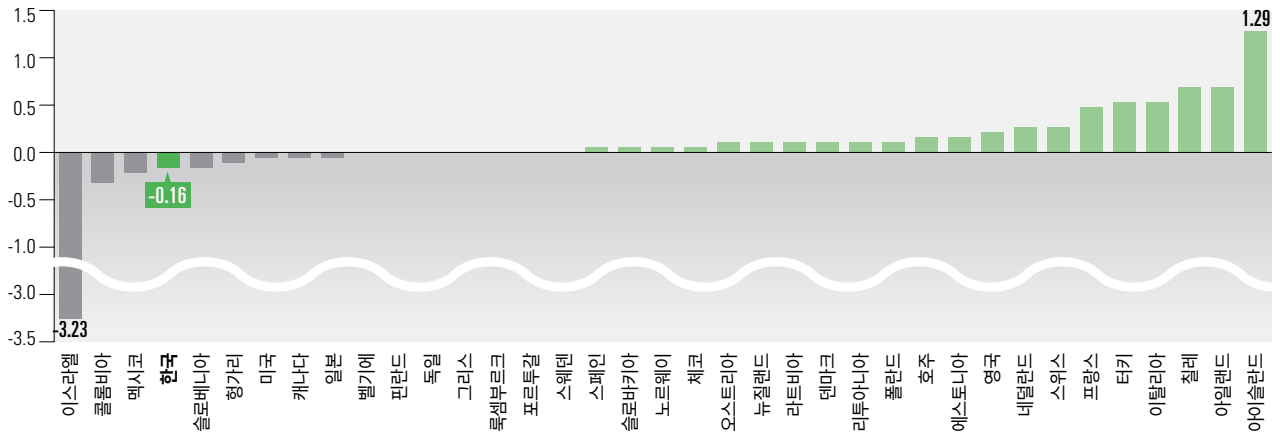




## OECD 국가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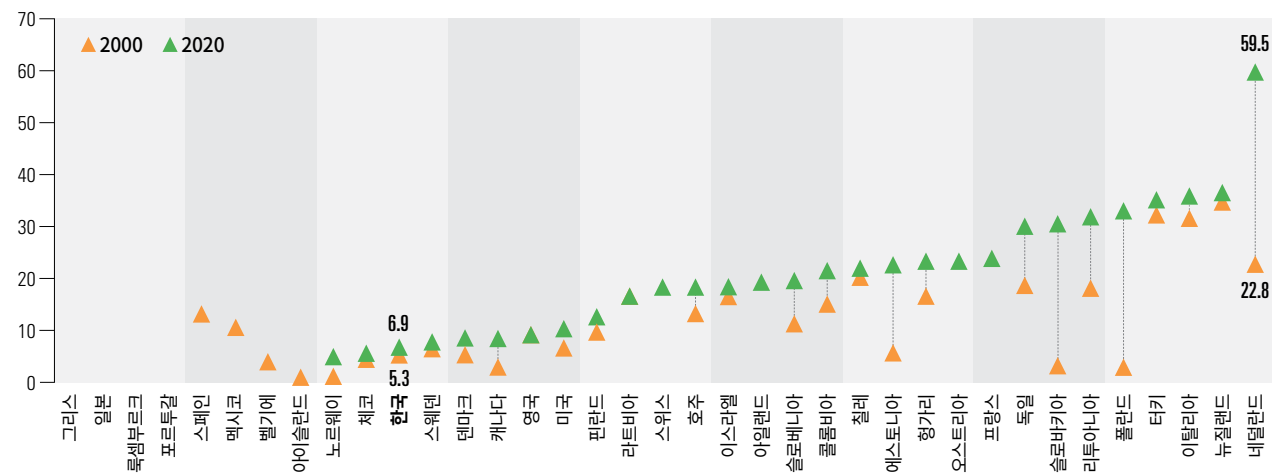
산림면적 연간 순변화, 2015~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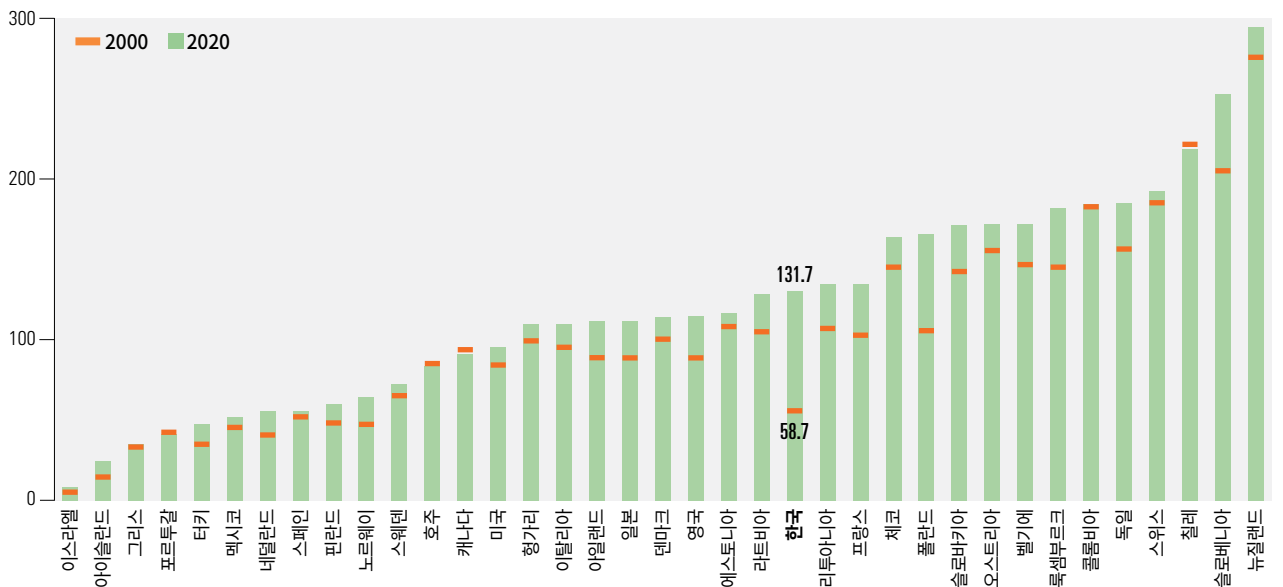
보호림 비율, 2000, 2020

(단위: %)



지상부 바이오매스 총량, 2000, 2020

(단위: ha당 톤)



출처: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2020.11.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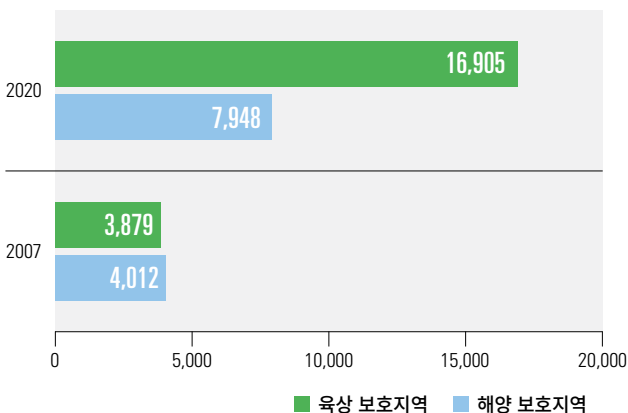
주 : 보호림 비율 지표에서 일부 국가는 데이터 없음

## 국내 보호지역 면적은 증가 추세

한국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14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해 육상, 해양, 담수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지정된 보호지역 유형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이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수가 2007년 21개에서 2020년 3439개가 됨에 따라 보호지역 면적 또한 증가했다.

2007년 육상 보호지역은 3879km<sup>2</sup>, 해양 보호지역은 4012km<sup>2</sup>에서 2020년 각각 1만 6905km<sup>2</sup>, 7948km<sup>2</sup>가 되었다. 한국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년)에서 2021년까지 육상 생태계 보호지역 비율을 국토면적의 17.0%로 확대할 계획을 설정했다. 2020년 점검 결과는 16.9%였다.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 면적, 2007, 2020 (단위: km<sup>2</sup>)



출처: 한국보호지역통합관리홈페이지(www.kdpa.kr, 2020.11.25. 인출)

주 : 중복 보호지역 면적을 제외한 수치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글로벌 차원에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s)을 지정했다. 이 지역 중 국내법으로 관리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육상 KBAs는 37.5%, 담수 KBAs는 36.8%, 산악 KBAs는 20.2%였다.

## 세계적 차원에서 생물종 보전상태 저하, 지역절멸종도 12종

IUCN은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야생생물의 현황과 위협을 종합적으로 범주화한 세계적색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목록은 멸종위험도에 따라 절멸(Extinct),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위급(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dangered), 취약(Vulnerable), 준위협(Near Threatened), 최소관심(Least Concern)의 9개 범주로 나누고 있다.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는 이들 범주 내에서 수록된 생물종의 수가 변동된 추세를 산출한 것으로, 0(모든 종이 절멸)과 1(모든 종이 관심대상) 사이 지수로 표현된다. 세계적색목록을 토대로 한 세계적 수준의 적색목록지수는 2000년 0.803에서 2020년 0.732로 낮아졌는데, 이는 목록에 수록된 생물종의 평균적 보전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중 한국에 해당되는 생물종의 지수는 2000년 0.763에서 2020년 0.699로 세계적 추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독일은 지난 20년간 0.9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IUCN은 이러한 적색목록이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적색목록 평가 지침을 개발한 바 있다. 한국도 2011년부터 환경부 소관 하에 국가 수준의 생물적색목록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절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절멸종인 경우는 총 12종이다(<https://species.nibr.go.kr>). 포유류는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 스라소니(*Lynx lynx*), 대륙사슴(*Cervus nippon hortulorum*), 늑대(*Canis lupus coreanus*), 조류는 팔색조(*Pitta nympha Temminck & Schlegel*), 크낙새(*Dryocopus javensis*), 원앙사촌[*Tadorna cristata*(N. Kuroda, Sr., 1917)], 따오기(*Nipponia nippon*), 어류는 종어(*Leiocassis longirostris* Gunter, 1864), 곤충류는 소뿔구리(*Gymnopleurus mopsus*(Pallas)), 곤충 외 무척추동물은 농발거미(*Heteropoda venatoia*(Linnaeus, 1767)), 겹거미(*Selenops bursarius* Karsch, 1879)가 여기에 해당한다.



#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s 16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계층과 민족에 상관없이 사법 접근성을 높여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부분에 걸쳐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2020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분쟁과 갈등으로 8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아동들이 전 세계 4분의 1에 달하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UN(2020b)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불안정한 제도와 환경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심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퍼진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아동 폭력 및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간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의 징계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되어 왔다. 이 조항은 아동에 대한 폭력적 방식의 훈육을 용인하는 오래된 문화의 근간이 되기도 했는데, 2020년 정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해 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학대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들의 방문도 어려워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발생 등에 대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 학교 내 신체적 체벌 경험 낮아지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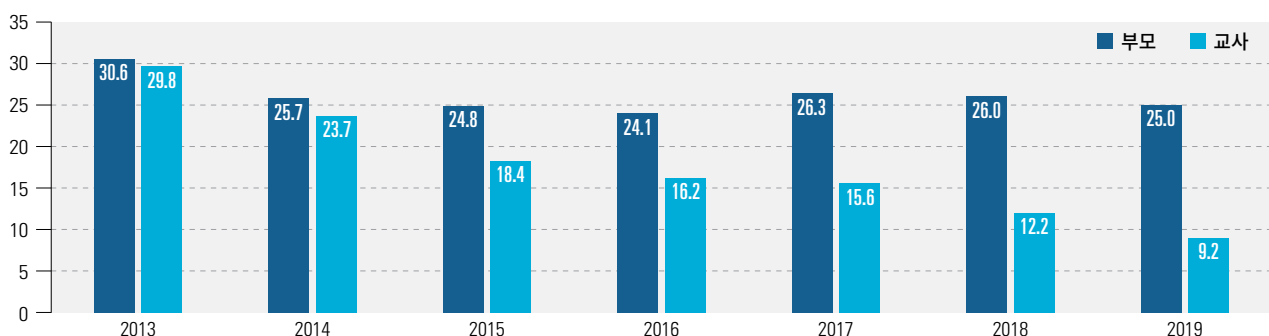
SDGs 세부목표 16.2는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및 신체적 체벌(고의적으로 신체적 고통 또는 가벼운 통증을 주는 행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지만 어린이를 흔들거나 이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는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체벌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이후 체벌 경험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부모에게서 체벌 경험이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있는 경우가 2013년 30.6%에서 2019년 25%로 줄었다.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자도 2013년 29.8%에서 2019년 9.2%로 크게 감소해, 학교 내 신체적 체벌에 대한 경험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 또는 교사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경험, 2013~2019

(단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주1: 체벌 경험 비율은 100%에서 '한 번도 없음'에 응답한 비율을 제외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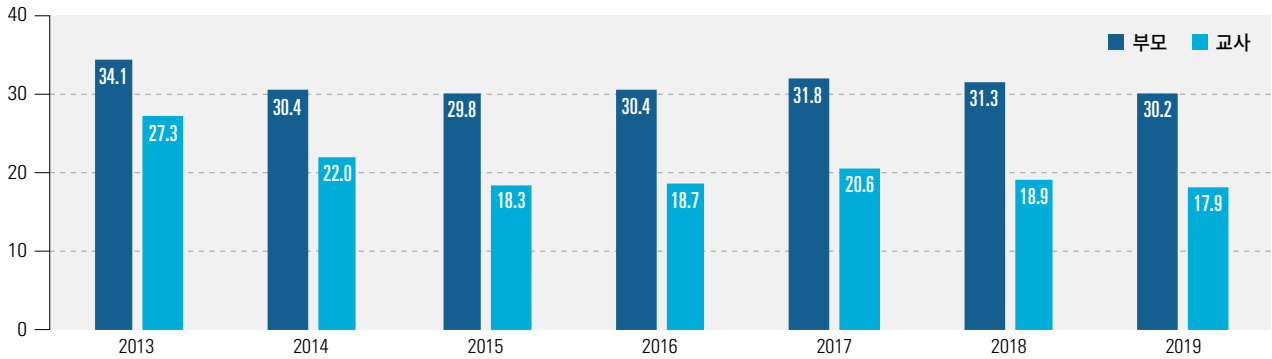
주2: 2013~2016년 중에는 체벌 경험 문항이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으로 조사했고, 2017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의 항목으로 조사 중





## 부모 또는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 2013~2019

(단위: %)



출처: 한국청소년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주1: 체벌 경험 비율은 100에서 '한 번도 없음'에 응답한 비율을 제외한 비율임

주2: 2013~2016년 중에는 체벌 경험 문항이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으로 조사했고, 2017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의 항목으로 조사 중

비신체적 체벌, 즉 모욕적인 언사를 부모로부터 경험한 비율은 2013년 34.1%에서 2019년 30.2%로 소폭 감소했고 교사로부터의 경험도 같은 기간 27.3%에서 17.9%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신체적 체벌 경험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다.

###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세, 발견율은 선진국 비해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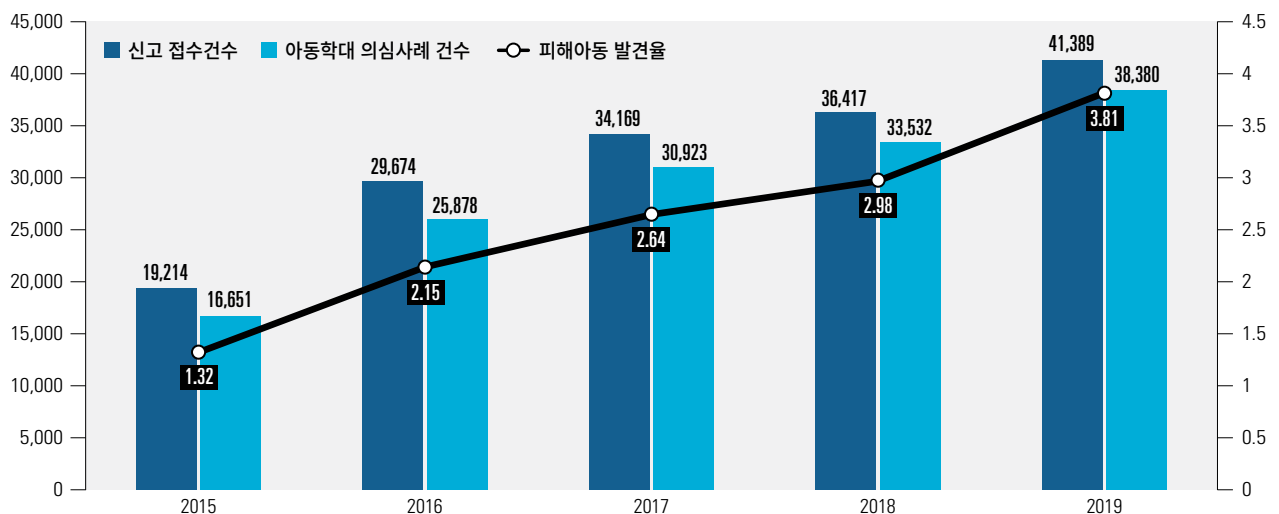
그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 등으로 가정 내에서 잠재되어 있던 한국의 아동학대는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 1389건으로 2015년 1만 92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2018

년의 3만 6417건에 비해서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7%인 3만 8380건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확인되었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총 3만 8380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은 3만 4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9년 3.81‰로 2015년의 1.32‰에 비하면 증가세에 있지만, 아직 미국(2016년), 호주(2016~2017년)의 9‰에 비하면 낮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를 학대 행위자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만 6615건(55.3%)으로 여성(1만 3429건, 44.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의 41.2%(1만 2371건)는 친부이며 31.1%(9342건)은 친모로 전체 학대자 중 75.6%는

##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 및 의심사례 건수, 발견율, 2015~2019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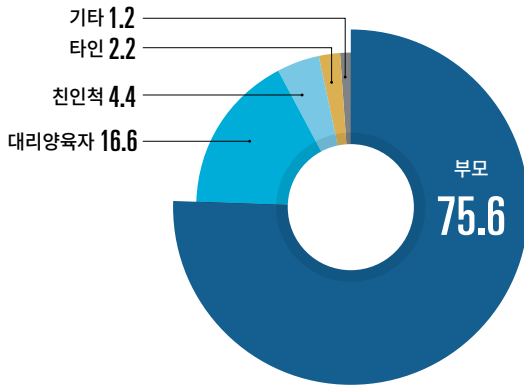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주: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비율로 표시함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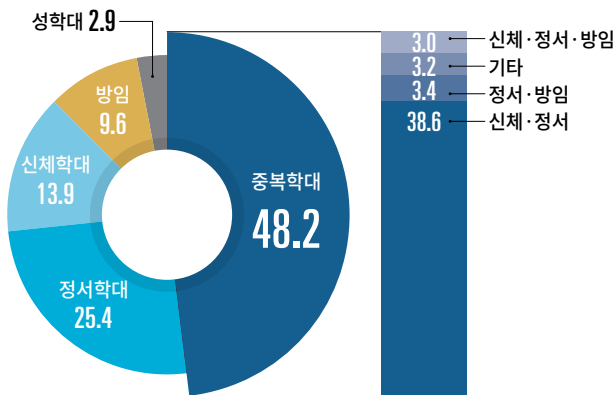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주 : 대리양육자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을 포함함(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2019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부모(계부모, 양부모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도 16.6%에 달했는데, 그중 초중고교 직원이 2154건(7.2%)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 교직원도 1384건(4.6%)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만큼, 아동학대의 발생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2만 3883건(79.5%)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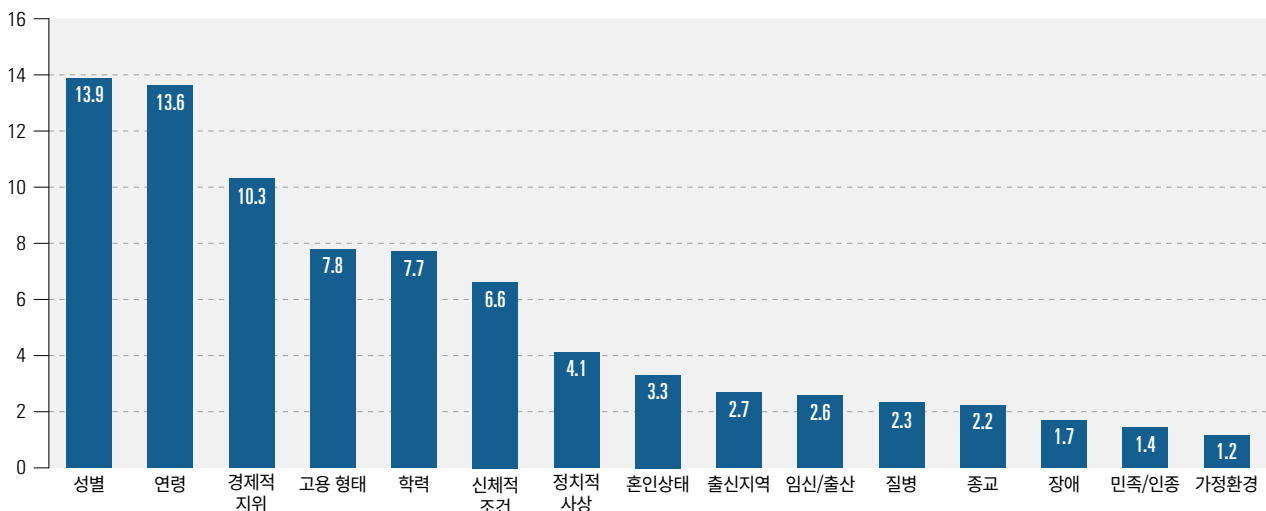
아동학대의 유형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1만 4476건으로 전체의 48.2%에 달했다. 단일 유형으로 나타난 학대 중에는 정서학대가 7622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4179건(13.9%), 방임이 2885건(9.6%)으로 높았다. 중복학대 중에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발생한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았다.

###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 가장 많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법 차별금지 기준에 따라, 매년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6월 발표된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을 받은 이유별로 응답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13.9%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 차별 사유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연령(13.6%), 경제적 지위(10.3%),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7.8%), 학력(7.7%), 신체적 조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경험한 사유별 응답 비율, 2019

(단위: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

주 : 설문항목은 사유별로 ‘있다’ 또는 ‘없다 및 비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는 ‘있다’에 응답한 응답자 비율임



# 17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DGs 17번 목표는 SDGs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포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SDGs의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0년 7월 개최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는 향후 SDGs 이행을 위한 각국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와 정치적 리더십 결집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저탄소 디지털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개발재원의 확보와 채무 경감, 인프라 투자, ODA 확대 등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했다. 코로나19는 각국의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위기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유엔과 같은 다자협력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2020년은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공식적인 원조 공여국이 된 지 10년이 된 해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ODA 확대 정책에 따라 OECD 국가 중에는 ODA를 활발하게 확대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개선의 요구들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한국이 수원국과의 물리적 교류를 통해 추진하던 다양한 ODA 사업을 미래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지원을 위해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할지 여러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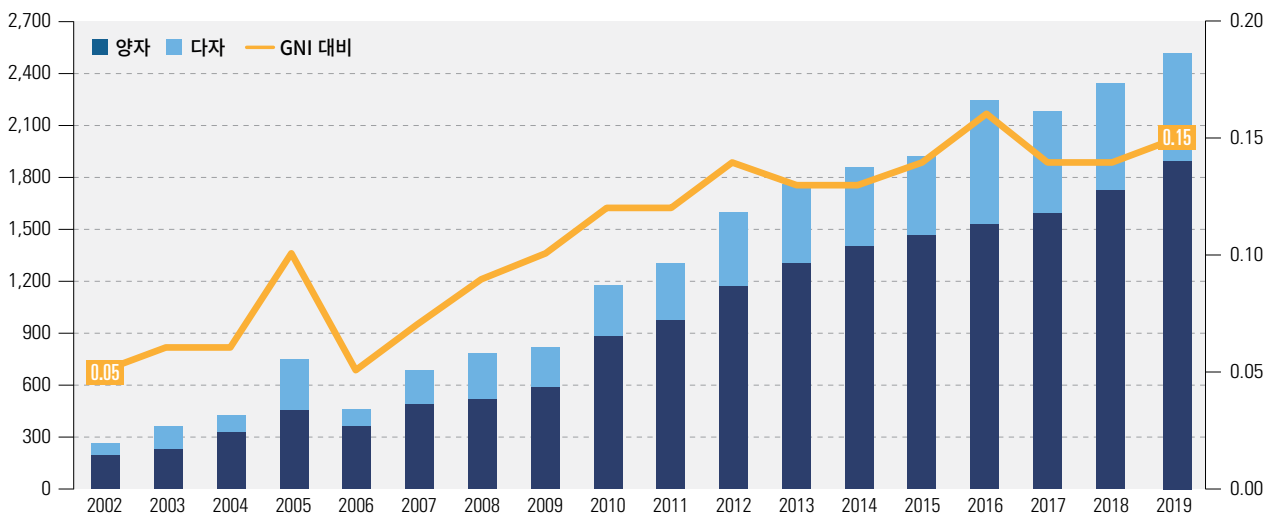
2019년 OECD 국가들의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OECD DAC에 속한 전체 30개 공여국의 ODA 규모는 1528억 달러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평균 0.3%를 나타냈다.

한국의 ODA 규모는 25억 2000만 달러로 2018년에 비해 1억 6000만 달러 증가했으며 GNI 대비 ODA 비율은

0.15%를 달성했다. 한국은 OECD DAC에 가입한 2009년 이후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와 2010~2019년 연평균 ODA 증가율이 가장 높은 11.9%로 나타났으나, 당초 국제사회에 약속한 GNI 대비 ODA 0.2%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2002-2019(지출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통계(국가통계포털 kosis.kr, 2020.11.18. 인출)

주 : 2019년 데이터는 잠정치임



## 양자원조의 35.8%는 최저개발국에 지원

2018년 기준, 한국 ODA 중 개별 국가에게 지원되는 ‘양자원조(bilateral aid)’는 증여등가액 기준 17억 3105만 달러로 전체 ODA 중 73.5%를 차지하며 국제기구 등 다자 기구를 통해 지원되는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는 6억 2380만 달러로 26.5%다. 양자원조의 수원국을 순지출 기준 소득그룹별로 살펴보면, 최저개발국(LDC)에 지원되는 비중은 전체 양자원조 중 35.8%, 6억 4230만 달러로 이는 2009년 1억 6100만 달러(27.7%)에 비해 확대되었다. 이에 비해 상위중소득국(HMIC) 지원 비중은 2009년 16.1%에서 2018년 9.7%로 낮아졌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저개발국에 37%, 중하위소득 국가(LMIC)에 37%로 전체 ODA의 74% 이상이 하위소득 국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중소득국에 제공된 ODA 지출은 전체 양자원조 중 9%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규모의 양자원조를 받은 수원국 10개국을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위는 베트남으로 총 1억 3481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어 에티오피아(7911만 달러), 방글라데시(7213만 달러), 이집트(6917만 달러), 라오스(6828만 달러), 탄자니아(6736만 달러), 캄보디아(6144만 달러), 몽골(5918만 달러), 필리핀(5769만

달러), 인도네시아(4330만 달러) 등이 상위 수원국으로 꼽혔다.

## 양자원조의 40%는 경제 인프라, 30%는 사회 인프라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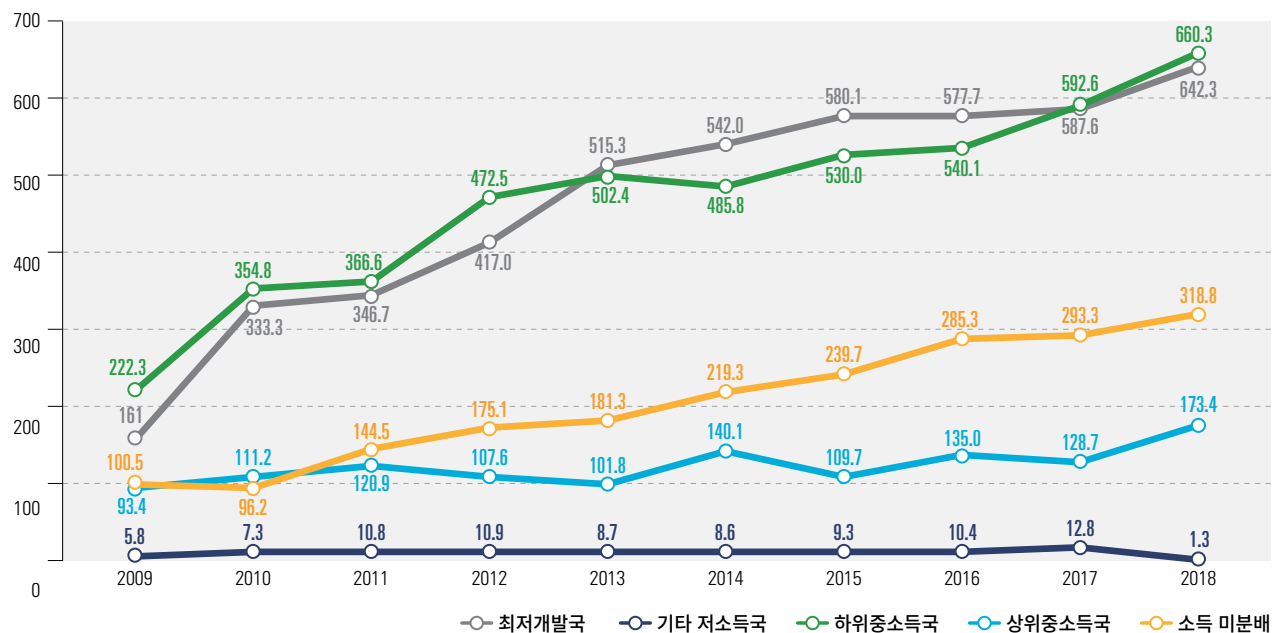
2018년 양자원조를 통해 제공된 ODA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정액을 기준으로 전체 40.2%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지원되었으며, 약 30.3%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4.3%는 생산(산업) 부문 등에 지원되는 등 전체 약 84%가 경제·사회·산업 부문에 지원되었다. 인도적 지원으로 제공된 ODA는 전체 4.1%를 차지했다. 이 중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2.3%는 교육 부문에 제공되었으며, 32.6%는 보건, 14%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4.5%는 수자원 및 위생 분야에 지원되었다.

## 개발원조의 효과성 모니터링을 위한 GPEDC 지표

국제사회는 ODA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2009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을 구축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GPEDC 모니터링 체계는 4대 원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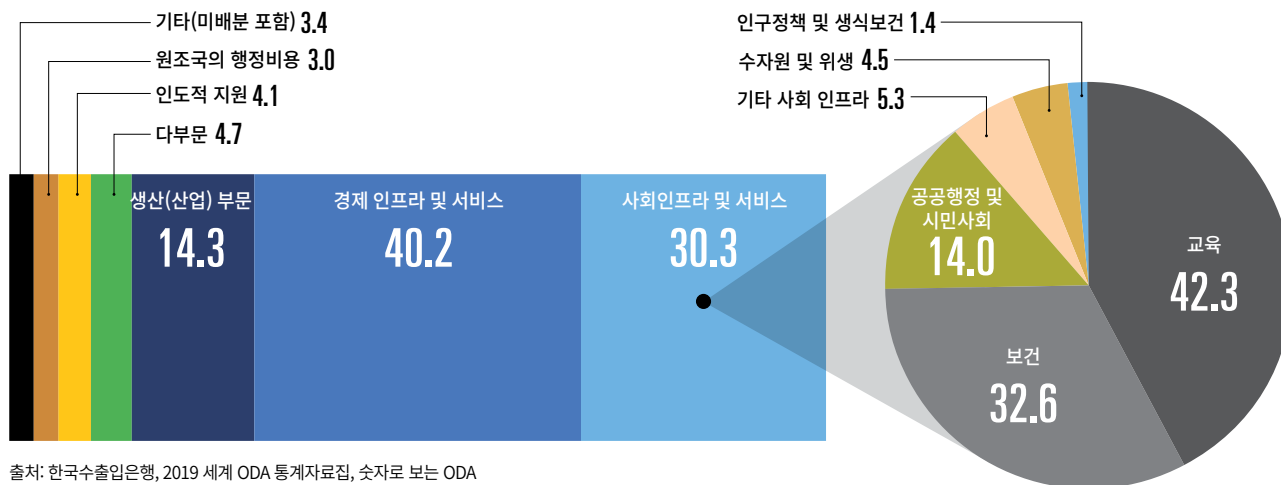
수원국 소득그룹별 양자 ODA 규모(순지출 기준),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9 세계 ODA 통계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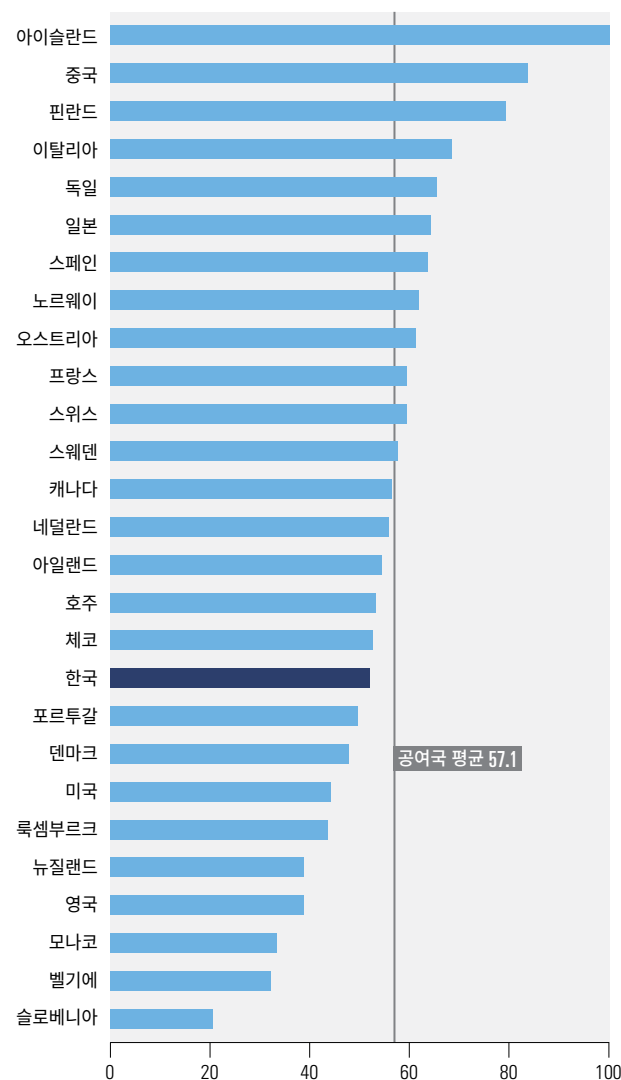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9 세계 ODA 통계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주 : 비율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 수치 마지막 단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과중심, 국가주인의식, 포괄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 책무성)과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결과중심’의 원칙에 따른 ‘개발파트너의 국가주도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지표가 SDGs 17.15.1 지표(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발도상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 수단을 사용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조사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2.3% 수준으로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요 공여국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여국 평균은 57.1%로 나타났으며, 아이슬란드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국(83.3%), 핀란드(79.6%), 이탈리아(68.5%), 독일(65.7%) 등이 수원국의 체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들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은 호주(53.1%), 체코(52.8%)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점수는 3개의 세부지표 값의 평균을 계산해 도출되는데, 첫째, ‘공여국 사업 중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개발협력사업의 비중’, 둘째,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결과지표 비율’, 셋째 ‘수원국의 자원과 평가체계를 활용해 모니터링할 결과지표의 비율’이다. 2018년 모니터링 결과에서 한국은 각각 89.7%, 39.2%, 27.9%를 받았다. 이는 한국의 경우 새로운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수원국 결과 체계를 적극 활용하나 사업의 결과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 및 기획 수단을 활용하는 비율 국제 비교, 2018 (단위: %)



출처: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웹사이트 (2020.09.02. 인출), 유엔 SDG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2020.09.02.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0,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 보도자료(2020.07.29.).
-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0,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보도자료(2020.08.11.).
- 김중옥, 2019, 제조업 고용과 해외직접투자 변화 추이, 노동리뷰 12월호: pp.99~102, 한국노동연구원.
- 남궁지영, 2020,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 교육정책포럼 328호: pp. 34~36.
- 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통계,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 맹미선, 2020,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 에너지 안보 괜찮을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보건복지부,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 윤강재,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훈길·이주형, 2015, 도시 공공공간의 공간적 특성 평가를 위한 계획 지표 연구: 공공 공간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1일), 보도자료(2021.01.01.).
- 질병관리청, 2020, 뇌졸중, 당뇨병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원인 규명, 보도자료(2020.06.2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2019 교육정보화백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분석-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교통연구원, 2020, 코로나19의 항공운송산업 영향 및 지원방안, 월간교통 03월호: pp.17~23.
- 해양수산부, 2018, 해수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전개, 보도자료(2018.05.24.).
- \_\_\_\_\_, 2019,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 행정안전부, 2020,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 보도자료(2020.09.23.).
- 환경부, 20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비전확정, 보도자료(2020.12.15.).
- 환경부, 2021, 2021년 업무계획.
- CDC, 2020, COVID View: A weekly surveillance summary of U.S. COVID-19 activity(May 29, 2020).
- David F · Prakash L · Jonathan DO, 2020, How Pandemics Leave the Poor Even Father Behind, IMF.
- ECDC, 2020,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in the EU/EEA and the UK-eighth update(April 8, 2020).
- FAO · WFP, 2020,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 IAEG-SDGs, 2019, Guidelines on Data Flows and Global Data Repor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 UN,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 \_\_\_\_\_, 2018,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 \_\_\_\_\_, 2020a, 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olidarity: Responding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 \_\_\_\_\_, 2020b,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 UNEP, 2018, Progress o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Global baseline for SDG 6 Indicator 6.5.1: degree of IWRM implementation.
- UNHABITAT, 2020, COVID-19 Response Plan.
- UNWOMEN, 2020a, Unlocking the Lockdown: The Gendered Effects of COVID-19 on Achieving the SDGs in Asia and the Pacific.
- \_\_\_\_\_, 2020b, COVID-19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 WHO, 2020, Clinical management of COVID-19: interim guidance(May 27, 2020).
-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 [Global tracking of COVID-19 caused school closures and re-opening]

<b>AI</b>	Avian Influenza(조류인플루엔자)
<b>BOD</b>	Biochemical Oxygen Deman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BT</b>	Bio Technology(생명공학기술)
<b>CIS</b>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
<b>CT</b>	Culture Technology(문화기술)
<b>DAC</b>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개발원조위원회)
<b>ET</b>	Environment Technology(환경기술)
<b>EU</b>	European Union(유럽연합)
<b>FAO</b>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유엔식량농업기구)
<b>FTE</b>	Full Time Equivalent(상근상당 연구원)
<b>GDP</b>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b>GNI</b>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b>GPEDC</b>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b>HLPF</b>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고위급정치포럼)
<b>HMIC</b>	High-Middle Income Countries(상위중소득국)
<b>IARC</b>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국제암연구소)
<b>IEA</b>	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b>IGCC</b>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석탄가스화복합발전)
<b>IHR</b>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국제보건규정)
<b>ILO</b>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b>IMF</b>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b>IPCC</b>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b>IPU</b>	Inter-Parliamentary Union(국제의회연맹)
<b>ISID</b>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b>IT</b>	Information Technology(정보기술)
<b>IUCN</b>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세계자연보전연맹)
<b>IWRM</b>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통합수자원관리)
<b>KBAs</b>	Key Biodiversity Areas(핵심생물다양성지역)
<b>LDC</b>	Least Developed Countries(최저개발국)
<b>LMIC</b>	Low Middle Income Countries(중하위소득국가)
<b>LULUCF</b>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b>MDGs</b>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새천년개발목표)
<b>NCDs</b>	Non-communicable Diseases(비감염성 질환)
<b>NT</b>	Nano Technology(나노기술)
<b>ODA</b>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b>OECD</b>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b>PISA</b>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국제학업성취도평가)
<b>PM</b>	Particulate Matter(미세먼지)
<b>PPP</b>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
<b>SDGs</b>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b>SOCX</b>	Social Expenditure(사회지출)



## 용어 약어

---

**ST** Space Technology(우주항공기술)

**TAC** Total Allowable Catch(총허용어획량제)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보편적 의료 보장)

**UN** United Nations(국제연합)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유엔환경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유엔산업개발기구)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유엔통계처)

**WCMC**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세계보전감시센터)

**WFP** World Food Programme(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세부목표	지표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a)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 감소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력을 포함해 다양한 자원 동원 보장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1.b 빈곤 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지출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지표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부족 인구 비율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경험인구 비율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 영양상태 개선	2.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 여부별)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가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2.3.2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 소득(성 및 원주민 여부별)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접근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 수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자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농업지향지수 2.a.2 농업 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해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여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세부목표	지표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비를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모성 사망비 3.1.2 숙련된 의료 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 목표	3.2.1 5세 미만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 향상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3.4.2 자살률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3.8 재정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 지출액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 상당 수준 증가	3.c.1 보건의료 인력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지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이수 보장	4.1.1 (a)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초등학교 말 (c)중학교 말에 (i)읽기와 (ii)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 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4.4 2030년까지 전문, 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 실질적으로 증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노동,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세부목표	지표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보장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문해력과 (b)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	4.7.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4.a 아동, 장애인, 성자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4.a.1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유형별)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 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4.b.1 장학금의 ODA 금액(연구 부문 및 연구유형별)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4.c.1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세부목표	지표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5.4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보호 정책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부담 축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5.5 정치, 경제, 공공 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	5.5.1 (a) 여성 국회의원 비율 (b) 여성 지방의원 비율 5.5.2 여성 관리자 비율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 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성 및 생식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5.a.1 (a)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형태별) 5.a.2 토지 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 사용 강화(특히 ICT)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와 성평등 축진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세부목표	지표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 달성, 노상배변 금지	6.2.1 (a)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과 (b)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 보장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된 물 자원관리 이행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국제 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세부목표	지표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상당하게 증가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 2배 증가	7.3.1 1차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2030년까지 개도국에 현대화된 지속가능한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세부목표	지표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8.1.1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8.2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이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물질소비량,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적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5~17세 아동 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 근로자, 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촉진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 분야 직접 기여 비율
8.10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8.10.1 (a)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성인 10만 명당 ATM의 개수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15세 이상) 성인 인구 비율
8.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포함)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8.b 2020년까지 청년 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세부목표	지표
9.1 경제 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 부문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도국)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9.5.2 인구 100만 명당 (상근상당)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해 개도국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부목표	지표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10.2 2030년까지 연령,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 달성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금융건전성지표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도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 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10.7.2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 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10.7.3 국제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10.a 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따른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10.b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최빈개도국, 아프리카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재원지원, 직접투자권장	10.b.1 개발재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96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지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 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 비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6 대기질과 지사재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해,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을 감소	11.6.1 지사재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용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해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균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 지원	11.a.1 (a)인구다양성, (b)토지균형개발, (c)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 관리를 구축하고 시행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세부목표	지표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도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12.2.2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2분의 1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 크게 감소	12.4.1 유해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2.4.2 (a)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 재활용 톤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12.a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경제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톨 이행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해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합리화 이행(이때,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세부목표	지표
13.1 기후 관련 위험 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3.2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달러 동원 촉각 이행	13.a.1 2025년까지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13.b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커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지표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a)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 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해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해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 비율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해양 및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세부목표	지표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유형별)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해,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 보장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물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동물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응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세부목표	지표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a)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다양성의 통합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 구조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산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15.b.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 구조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c 지속가능한 생계 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해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	지표
16.1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 상당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 및 연령별)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a)신체적, (b)정서적, (c)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 범죄 피해자 비율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유형별)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 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 방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가액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 대폭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해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해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해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 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수준, 특히 개도국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관련 국내 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증진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목표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세부목표	지표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 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17.1.2 정부 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 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순 ODA의 비율 2)최빈개도국에 대한 순 ODA 비율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17.7 상호협약에 따라 양허, 특허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 증진	17.7.1 개도국에 친환경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 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 금액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허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해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해 글로벌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서 각국의 정책적 역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금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 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에 기초해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구축 지원 강화	17.18.1 SDGs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GDP 보안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

집필진

박영실(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홍현정(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진유강(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윤민희(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이은경(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보조원)

---

발행 2021년 3월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 2765-3803

인쇄처 숨쉬는책공장



발간등록번호
11-1240245-000071-10



#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21